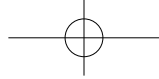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남북
금융
용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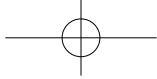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남북 금융 용어 사전

북한개발연구소



『남북 금융용어사전』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2021년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수행기관: 북한개발연구소)의 결과물로 발간하였으며 저작권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있습니다.



『남북 금융용어사전』 출간진

출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저작권 및 행정)

위원(홍보)
위원(행정예산관리)

김병욱 (사)북한개발연구소 소장, 배화여자대학교 비전임교수
이수룡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 연구소 연구원(박사)
전)서울보증보험(주) 수석부사장, 중소기업은행 상임감사
강진규 NK경제 대표이사. 전)남북경협뉴스 전문위원
이선례 (사)북한개발연구소 총무이사. 전)경찰직 공무원

『남북 금융용어사전』 집필 및 자문진

감수/대표집필

표제어 집필팀

천규승 (주)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
(재)소비자재단 집행총괄이사
전)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박기찬 신한은행 북한연구회 대외협력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문위원
성동규 KB국민은행 논현동지점장. 전)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이기승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및 KB국민은행 사회협력부 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교육업무 및 사회공헌업무 기획추진
이의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전)사)금융소비자연맹 상임연구위원
이조영 (재)하나금융축구단 사무국장
전)하나은행 사회공헌부장, 하나은행 광나루역지점장

쉬어가기 집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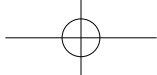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김경산 통일부 하나원 주무관(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김수연 경기대학교 한반도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오영철 L & P Pacific 팀장
이지영 대성타원이앤씨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은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조총희 북한 농축산전문가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자문팀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 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 송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혜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전경주 민족사랑협회 재경팀 팀장
조현성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차장

교정/교열

박상훈 『남북 금융용어사전』 교정위원
한수미 『남북 금융용어사전』 교정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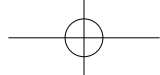
『남북 금융용어사전』 발간사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으며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 저술한 「대전환의 시대」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높은 교육 수준의 값싼 노동력이 있고 한국은 경영 능력과 자본이 있으니 둘의 시너지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또한 「호모 데우스」 서문에서 기술혁명이 도래한다면 북한이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동 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자율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발칙한 상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짐 로저스와 유발 하라리의 통찰력이 적중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금융산업의 긴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의 금융·경제 패러다임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아직 차이점이 크고 공통의 기반이 취약합니다.

한반도의 남쪽은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선진국으로



급속히 도약하여 금융이 모든 시민의 삶에 중요한 일부가 된 반면, 한반도 북쪽의 금융·경제 패러다임은 아직 경제성장의 굳건한 발판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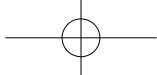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남북 간 경제력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한반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열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한반도가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번영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상생 노력에 덧붙여 각 전문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시작한 『남북 금융용어사전』의 발간을 계기로 수많은 전문 분야에서 남북 용어 비교사전과 통합사전 발간의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칠십 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오천 년인데.”라는 노래를 남북이 함께 부르면서 한반도가 동방의 작은 섬나라 신세를 떨치고 일어나 짐 로저스와 유발 하라리의 꿈을 실현한, 세계 평화와 번영의 빛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 신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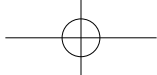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남북 금융용어사전』 발간사

『남북 금융용어사전』 출간을 목표로 한, 남북 출신 26명이 탄 배가 항구를 떠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 차이에 따른 일련의 풍파가 있었지만, 마침내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출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사전이 원만히 발간될 수 있어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그동안 출간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 용어사전은 남한의 특정 기관 종사자들에 의해, 혹은 단독 저서의 형태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본 사전은 남북 겨레가 함께 작업하여 출간하는 사전입니다. 남한의 금융용어 전문가와 사전 편찬 전문가, 그리고 북향민 출신의 금융용어 전문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사전 편찬 및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앱으로도 개발하여 남북 겨레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7)을 비교했을 때, 남북 경제 관련 전문용어의 일치도는 16.6%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의 경제 전문가가 10개의 경제 전문용어를 말했다 때, 북한의 경제 전문가는 머리를 끄떡이지만, 정확히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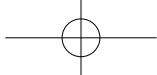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아들은 용어는 2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전은 이러한 언어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남북 금융용어 전문가들이 함께 편찬하였습니다.

남북 출신들이 함께 해온 지난 9개월 동안은 남북 전문용어 사전 편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특히 남북 전문용어 통일 사전의 기반을 마련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사전은 북한개발연구소와 참여자 모두가 분단된 조국에 드리는 첫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마감하면서 남한 지역에서 출발하는 본 사전이 북한 지역에 닿게 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참여진 모두의 염원을 전합니다.

202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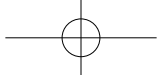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김병욱



일러두기

이 책은 남북 거래의 금융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편찬한 사전이다. 이 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한과 북한에서 널리 쓰이는 금융용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였으며, 집필된 원고는 감수·교정·편집 등의 과정을 거쳤다.
- 2 사전의 표제어는 남북 금융용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어 선정 및 자문 팀’에서 선정하였다.
- 3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는 남한 금융용어 전문가들이 맡았다.
- 4 이 사전에서는 표제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쉬어가기] 난을 두었다. [쉬어가기]의 내용은 주로 북한민들이 남한에서 금융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이다.
- 5 사전의 표제어와 색인은 각각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 6 사전의 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랐다.
 - 가.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한글 맞춤법’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다만, 북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북한 자료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랐다.
 - 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전문용어는 독해의 편의를 위해 붙여 썼고, 용례를 제시하거나 북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원문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 다. 표제어와 풀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의 경우 한자와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였다.



7 표제어의 풀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랐다.

가. 뜻풀이는 ‘정의항 + 부가 뜻풀이’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나. 남북의 금융 환경이 다르므로 [더 알아보기]에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표제어에 대한 남북 거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의어], [관련어] 등을 제시하였다.

라. 용례는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구[㉠] 표현’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남북의 문헌이나 신문 자료 등에서 실제로 쓰인 문장을 [용례]란에 제시하였다.

마. 집필에 참고한 문헌에 한해 [출전]을 제시하였다. 출전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시하였다.

① 논문: 집필자, 발간 연도, 논문 제목, 게재지, 발간 기관

② 단행본: 집필자, 발간 연도, 책 제목, 게재지, 발간 기관

8 표제어에 대한 정보 제시는 아래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① 표제어 ② 뜻풀이 ③ 용례 ④ 동의어

⑤ 관련어 ⑥ 출전 ⑦ 삽화 ⑧ 집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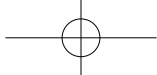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9 표제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삽화’ 및 ‘사진’을 제시하고 그 출처를 밝혔다.

10 부록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 남북 금융용어 대응쌍 제시

나. 참고 문헌

이 사전은 남북 거래의 편의를 위해 ‘북한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앱으로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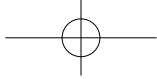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가처분소득	1	다단계 금융 사기	72
개인연금	3	다층연금체계	75
개인정보보호제도	6	단기신용대출	7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9	대부업체	79
개인형퇴직연금	11	대출	81
계좌	13	쉬어가기	
고용보험	15	대출, 왜 조심해야 하나	84
공과금 납부	18	대출금리	86
공모주	21	도급생활비 특	88
국민건강보험	23	쉬어가기	
국민연금	25	월급과 생활비	91
근로소득	29	독립채산제	93
금리	31	디지털화폐	97
금융감독제도	34	로동보수자금 특	100
금융거래한도	37	머니마켓펀드	103
금융봉사정보체계 특	40	모바일뱅킹	105
금융분쟁조정제도	43	무현금류통 특	108
금융상품	46	미소금융	111
금융소비자보호제도	49	법인세	113
금융수수료	52	변액보험	115
금융시장	54	보증보험	118
금융실명제	57	보험	121
금융투자상품	60	쉬어가기	
금융투자회사	63	보험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금융회사	66	설계하는 것이 좋다	126
기업어음	69	보험계약	129



부가가치세	133	쉬어가기	
불법추심	136	은행에 맡겨 둔 내 돈, 괜찮을까요?	207
산업재해보상보험	139	은행거래 앱	209
쉬어가기		이관집 북	211
산재보험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	143	인터넷뱅킹	213
상장지수펀드	145	인터넷전문은행	216
상조회사	148	자동차보험	218
서민금융지원제도	150	자동화기기	221
세금우대제도	153	재무설계	224
쉬어가기		재산세	228
세금 없는 나라의 '집금소'	156	재정상태표 북	231
소득세	158	재정총화 북	235
신용	160	저금대리소 북	238
신용관리	162	저축은행	241
신용카드	165	전자상업 북	244
쉬어가기		전자인증서	246
똑똑한 신용카드 활용법	168	전자화폐	248
신용회복제도	170	정액생활비 북	251
쉬어가기		제2금융권	253
나의 신용점수는 몇 점일까?	173	조세	256
실손의료보험	175	종합자산관리계좌	260
여신전문금융회사	177	주가연계증권	263
연말정산	179	주식	265
예금자보호제도	183	쉬어가기	
오픈뱅킹	186	주식 투자, 풍부한 만큼 보인다	268
외화송금	188	주식회사	270
우량주	191	주택연금	274
우체국예금·보험	193	주택청약통장	277
원리금상환	195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 북	281
원천징수	197	지역화폐	283
유사수신행위	200	창구거래	286
은행	203	채권	289



챗봇	293	피투피금융	330
체크카드	296	핀테크	333
취득세	298	학자금지원제도	336
코스닥	301	행표 북	340
코스피	303	협동화폐제 북	342
콜센터	306	환율	345
퇴직연금	308	환율제도	347
파생금융상품	311	환자거래 북	351
펀드	315	환전	354
핀뱅킹	318	환치 북	357
편의봉사료금	320	남북 금융용어 대응쌍	360
포트폴리오	322	참고 문헌	362
피싱	324		
쉬어가기			
금융사기가 의심될 땐			
국번 없이 1332	328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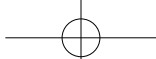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개인 또는 가계가 자기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개인가처분 소득’, 또는 ‘개인처분가능소득’이라고도 한다.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가계의 소득 중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으로 산출한다. 개인 또는 가계가 일정 기간 획득한 총소득에서 세금, 이자, 보험료 등의 ‘처분불가능소득’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 등과 같은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일지라도 세금과 이자, 보험료 등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이를 ‘처분불가능소득’이라 하며,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는 ‘가처분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다만, ‘국가국어사정위원회’에서 만든 《거울 2.0》(2017)에 ‘가처분소득’을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들이 소비 또는 저축에 리용할수 있는 최종소득. 개인순소득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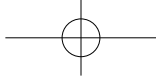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이다. 통계청 등의 조사 자료에서 ‘세후 소득’이라고 일컫는 용어가 ‘가처분소득’에 해당한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하는 소비지출분인 한계 소비 성향(propensity to consume)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은 가계는 그렇지 못한 가계에 비해 소비 수준이 높다. 이는 가처분소득 수준이 소비자의 소비 만족이나 후생 수준을 이해하



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가처분소득은 통계적으로 ‘흑자가구’나 ‘적자가구’를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 흑자가구는 일정 기간의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소비지출보다 더 커 가계저축이 발생하는 가구를 말한다. 적자가구란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의 크기가 더 커 가계부채가 구조화되는 특성이 있다. 국민 경제에서 가처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가계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비 및 저축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가계의 의사 결정은 경기, 투자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한편, 국민가처분소득이란 한 나라 국민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 소모분을 뺀 국민 순소득에 나라 밖에서 벌어들인 국외 순수취 경상 이전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국민가처분소득은 소득분배 정도를 평가하는 주요 자료로서 경제 정책 수립 시 주요 자료로 쓰인다.

- 용례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다. /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다. / 소비 성향 부진의 중요한 원인은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의 하락이다.《뉴스핌, 2021년 3월 9일》
- 동의어 개인가처분소득, 개인처분가능소득.
- 유의어 세후소득.
- 반의어 처분불가능소득.
- 관련어 국민가처분소득, 한계소비성향, 흑자가구, 적자가구.
- 출전 Paul Krugman·Robin Wells(김재영·박대근·전병헌 옮김)(2017), 『크루그먼의 경제학(제4판)』, 시그마프레스.
- 집필자 이의선



개인연금

個人年金, personal pension

노후 대비를 위하여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 개인이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돈을 맡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장기저축상품을 말한다.

북한에는 ‘연금’,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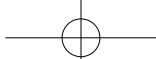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개인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이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뉜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주체 및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및 특징 ▶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 주체	은행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안정성	원금보장	원금비보장	원금보장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연금 지급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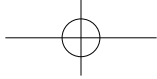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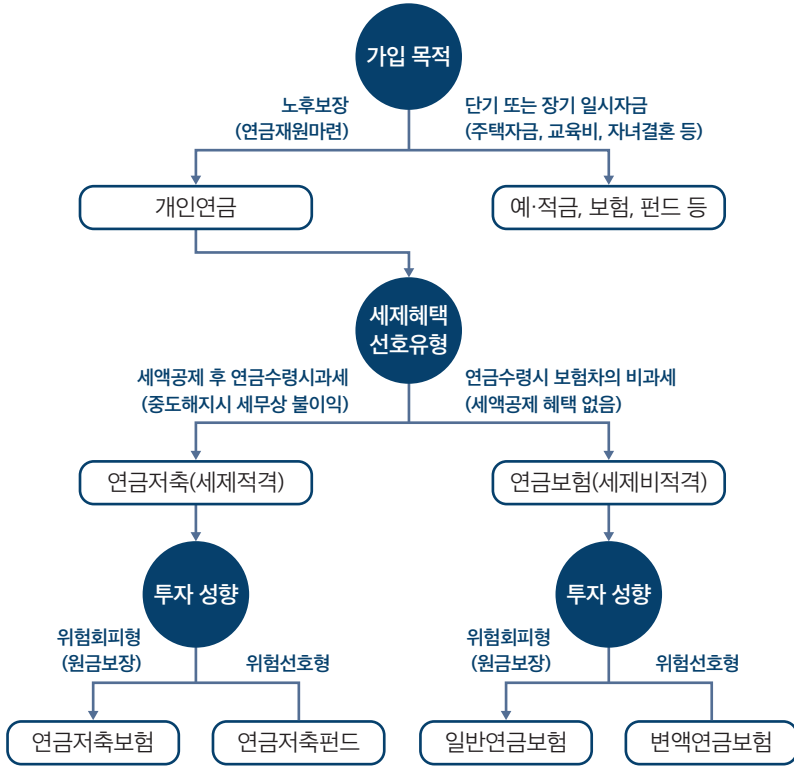
연금저축은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연금’과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다. 세제 적격 연금인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할 때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할 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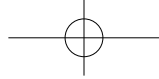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 **용례** {개인연금에} 가입하다. / 현재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부족 부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한경비즈니스, 2021년 1월 16일》
- **관련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출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성동규(2015),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첫걸음』, 북스토리.
- **집필자** 성동규



(연금상품 결정 프로세스)



출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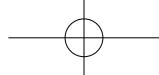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제도

個人情報保護制度,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남한에서 1991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에 의해 국무총리 직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체나 개인 등은 개인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년월일, 직업, 학교 성적, 신용카드 번호, 전자 우편 주소, 전화 통화 내용, 동영상 등이 포함되는데,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위치 정보, 지문이나 홍채 등의 같은 생체 정보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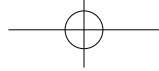
북한에는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대한 자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인정보의 침해에는 ‘적법하지 않은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유통’, ‘허술한 관리나 방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명의도용이나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그 파급 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 피해 구제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소송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는 방식인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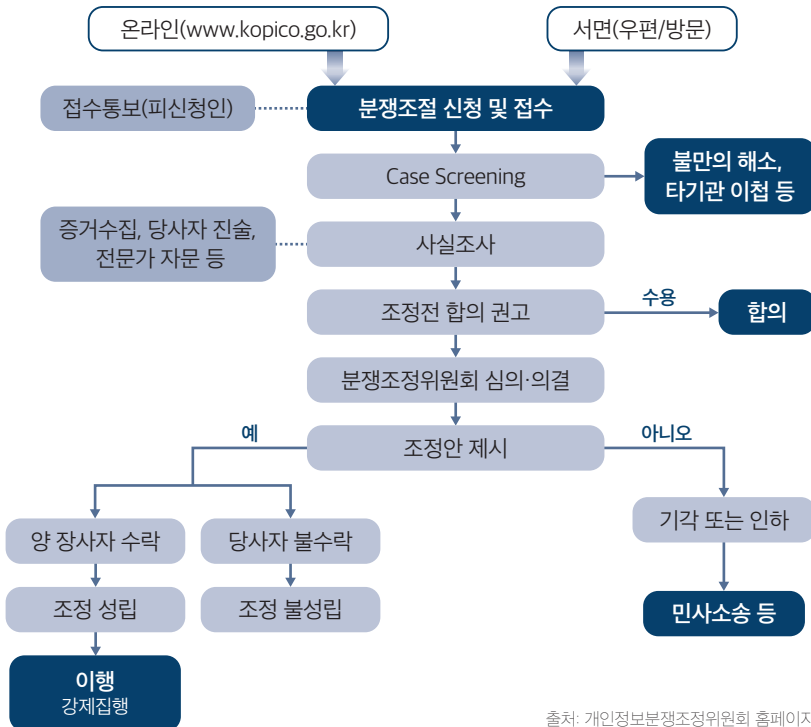
- **용 레**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이용하다. / 최근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관련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윤리와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C, 2021년 1월 14일》
- **관련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가명정보
- **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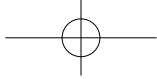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종류 〕



〔 개인정보 분쟁 조정 과정 〕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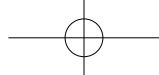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정해진 납입 한도 내에서 금융 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펀드·주가연계 증권ELS 등의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한 계좌.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남한에서 국민의 재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도입하였다.

북한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특성 〉

구분	내용
가입 대상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전 금융회사 1인 1계좌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확대 가능(매년 2,000만 원까지 이월 가능) ★ 이전에 가입한 재형저축 및 소장 펀드 납입 한도 합산
투자 가능 상품	예·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ELB·ETN 등), 국내 상장주식,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s),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손익 통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근로자, 농어민은 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의무 가입 기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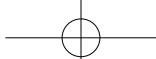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연 2,000만 원까지(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운용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 원 초과분은 9.9%의 저율로 분리하여 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목돈 마련 및 자산 관리 형성에 유리하다.

◀ 증권사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성 ▶

상품 특성	금융 소비자가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및 다양한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상품
투자 방법	고객이 운용 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 **용 레** 은행에 들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다. / 증권사에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다. / 금융위원회는 ...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기존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연합인포맥스, 2020년 3월 25일》
- **동의어**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 **관련어** 자산관리계좌.
- **출 전** 관계기관합동(2020),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위원회(2015),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 **집필자** 이기송



개인형퇴직연금

아이알피,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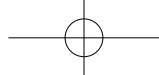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개인 퇴직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금. 근로자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한 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노후대비용 연금이다.

북한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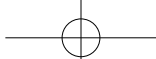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본인이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 금액의 일정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노후에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절세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자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연금의 수령 시점은 만 55세 이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최소 10년 이상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가입 기간 동안 투자한 상품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 없이 재투자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투자의 위험이 따른다. 그렇지만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국내외 펀드, 주식까지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운용 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때 퇴직금을 연금용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 겸용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공제 전 전체 금액을 수령한 후 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새로 옮긴 직장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바로 사용하려면 개인형퇴직연금의 퇴직용 계좌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사용하면 된다.

- **용 레**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다. /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 계약 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한국경제신문, 2020년 10월 26일》
- **관련어** 퇴직연금제도.
- **출 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금융감독원(2018),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 **집필자** 성동규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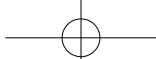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計座, bank account

금융회사가 고객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거나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한 자리. 넓은 의미에서 계좌는 회계나 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에 거래 내용과 금액을 기록하는 자리를 일컫기도 하고, 금융 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예금계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전자금융이 발달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에 나타난 금융권의 계좌번호를 가리키기도 한다. '계좌'는 북한어로 '돈자리'라고 일컫는데, 『조선말대사전』(2007)에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이 은행에 맡겨놓고 돈거래를 계산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산 자리”로 정의되어 있다.

✦ 더 알아보기

계좌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통장과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과 계좌번호로 확인되고 인식된다. 최근에 전자금융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이용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계좌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예금계좌', '대출계좌', '신탁계좌', '외화계좌' 등으로 나뉘며,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 따라 '개인계좌', '법인계좌'로도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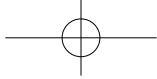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방식'과 '모바



일banking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은행에서는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또한 금융 이용자에게 계좌 개설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계좌의 상태나 용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 '휴면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를 거래중지계좌로 등록하여 입출금거래를 제한한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 계좌를 휴면계좌로 등록한다. 휴면계좌로는 더 이상의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그 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할 수 있게만 한다. 북한에서는 휴면계좌를 '수면돈자리'라고 부른다. 가상계좌는 많은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아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기업이 온라인 송금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만든 전용 계좌이다. 고객은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만들어진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 용 레 실명 {계좌} / {계좌} 번호 / 신규 {계좌를} 개설하다 / 금융거래를 하려고 {계좌를} 만든다 / 저축은행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은행 앱에서도 저축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가 강화될 전망이다.《매일경제, 2021년 2월 23일》
- 동의어 구좌(口座), 돈자리(북한어).
- 관련어 가상계좌, 계정계좌, 수면돈자리(북한어), 예금계좌, 휴면계좌.
- 출 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장승욱(2010),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 하늘연못.
- 집필자 박기찬



고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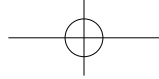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雇傭保險, employment insurance

실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 급여를 주면서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와 일용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북한에는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과 동시에 실업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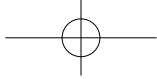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인 경우 50%) 이내로 1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급여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2020년 8월 기준)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조기 재취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 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e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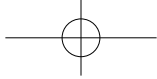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ei.go.kr>)

- **용 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청구하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특별고용, 자영업자 등도 적용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한겨레, 2021년 2월 15일》
- **관련어** 실업보험.
- **출 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금융감독원(2020),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제4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이조영



공과금 납부

公課金納付, payment of utility b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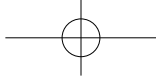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나 요금을 내는 것. 좁은 의미에서 ‘공과금’이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국세’(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주민에게 징수하는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를 뜻한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 기관에 내야 하는 각종 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등)과 4대 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포함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 수신료와 인터넷 수신료·통신료 등을 넓은 의미의 공과금에 포함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공과금’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말대사전』(2007)에 ‘공과금’에 대해 “납은 사회에서, 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이라는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 더 알아보기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나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www.giro.co.kr 나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금융회사의 수납 창구나 에이티엠 ATM 기·공과금 수납기·인터넷뱅킹·에이알에스ARS, 그리고 세무서의 카드수납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의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 CD/ATM, 에이알에스ARS 전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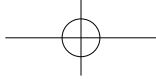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www.wetax.go.kr 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www.giro.c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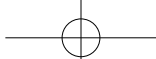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납부 수단에 따른 국세 납부 〕

납부 수단		내용
개인용컴퓨터(PC) 홈택스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 간편 결제 납부(카카오삼성·네이버페이·페이코·앱카드) ★ 납부 시간: 07:00~23:30
모바일 (홈택스 앱)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 간편 결제 납부(카카오·삼성·네이버페이·페이코·앱카드) ★ 납부 시간: 07:00~23:30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삼성·네이버페이·페이코·앱카드) ★ 납부 시간: 00:30~23:30
금융 회사	수납 창구	현금 납부(계좌이체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에이티엠(ATM) (분할납부 불가)	신용카드 납부(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 납부 시간은 00:30~23:30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과금 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공과금 수납기: 금융회사에 설치된 공과금 납부 전용기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납부(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에이알에스(ARS)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납부)
세무서	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카드수납기: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용 레** 계좌이체를 통해 {공과금 납부}를 하다. /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주거래은행을 정해 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 카드사용 대금 납부,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을 집중시키면 등급 상승에 도움이 된다.《경상일보, 2021년 2월 18일》



- **관련어** 국세, 세금, 조세, 지방세, 4대 보험료
- **출 전** 국회예산정책처(2018), 『한국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해외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2020), 『2020 지방세 길라잡이』.
한국통신 경영연구소(2000), 『공공요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집필자** 이기송



공모주

公募株, stocks for public sub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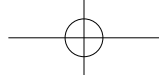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기업에서 일반인 가운데 투자할 사람을 널리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 기업이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아서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활동을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며,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공모주 배정’이라고 한다. 기업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의 주식과 경영 상태를 시장에 공개하고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한다.

북한에는 ‘공모주’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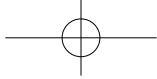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기업공개는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며,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한다. ‘상장’은 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것으로, 기업공개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이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면 공모주식의 주가가 발행가를 웃도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주가가 공모 가격을 밑돌기도 하므로 공모주 투자 시 투자 회사의 재무 상황과 사업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용 레 {공모주} 발행 / {공모주를} 배정받다. / {공모주를} 청약하다. / 을 들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공모주}펀드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한국경제, 2021년 2월 16일》
- 관련어 기업공개(IPO), 상장, 공모주 청약, 공모주 배정.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한국FPSB(2020), 『투자설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집필자 성동규



국민건강보험

國民健康保險, national health insurance, 國民健康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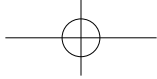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국민의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 국민의 건강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이다.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국민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큰 부담 없이 제때에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결정된다.

북한에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가리킨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부양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보수월액’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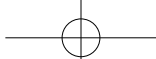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소득월액(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보험료율(6.86%)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연동하여 책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보험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 내역 ▶

구분		수급권자
현물 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 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 보조기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본인 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출산 진료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 용 례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중앙일보, 2021년 4월 29일》
- 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이조영



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제도.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 연금이므로 사私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보험에 비해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또한 관리 및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북한에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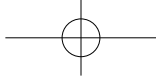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크게 가입자와 사업장으로 나뉜다.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당연 적용 사업장)을 뜻한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데, 이처럼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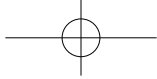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또한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임의계속가입자'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財源으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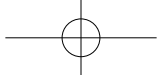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보장 내용)

급여 종류 및 보장내용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가입 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여 20년 이상이면 100%
재직자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연령별지급률: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 마다 감액을 차등적용(50%~10% 감액) ★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고, 60세 이전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지급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개시 기준)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것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분할비용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장애등급 1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 지급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기간 10년~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 일시금	
①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 적용 이자율: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 용례 {국민연금에} 가입하다. /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100만 명에 다가섰다. 특히 의무 가입이 종료되는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50만 명을 넘어서 10년 전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도 결국 믿을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중앙일보, 2021년 2월 13일》
- 관련어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적연금제도.
- 출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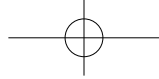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근로소득

勤勞所得, earned income, 給与所得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로 구성되는 소득.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는 ‘근로소득’을 “근로자들이 자기 노동의 대가로 얻은 개인소득.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의 총소득 가운데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차례지는 몫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소득이란 근로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가계 소비의 원천이 된다. 소득은 크게 정기적으로 받는 ‘경상소득’과 일시적으로 받는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뉘며,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업소득’은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순수익을 가리키는 용어로, 총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소득’은 개인이나 가계가 보유한 돈, 건물이나 토지,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소득을 뜻한다. ‘경조소득’이란 결혼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와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제 근로소득은 계약된 액수에 비해 적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소득 총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갑종근로소득세는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한편 을종근로소득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나 단체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용례 {근로소득이} 증가하다.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매일경제, 2021년 2월 18일》 /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의 총소득가운데서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대가로 차려지는 몫은 {근로소득이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착취계급에게 무상으로 점유되는 몫은 불로소득이다.《거울 2.0》

○ 동의어 노동소득.

○ 반의어 불로소득(不勞所得).

○ 관련어 임금, 급여,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기획재정부(2017), 『시사경제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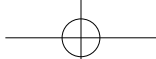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주)중앙경제(2014), 『실무노동용어사전』.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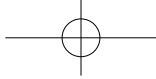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금리

金利, interest rate, 金利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이자율(利子率)’이라고도 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는 ‘금리’를 ‘리자(利子)’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리자률(利子率)’은 “대부 또는 예금한 금액에 대한 리자의 백분율. 리자의 수준을 표시한다.”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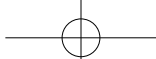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금리의 움직임은 경제의 흐름이나 경기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 기업인, 금융인, 투자자 등 많은 경제인들이 큰 관심을 갖는 중요한 경제지표이다. 금리는 크게 대출금리(86쪽 참조)와 예금금리로 나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기준금리는 여러 가지 금리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로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적용하는 금리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3개월이나 6개월을 주기로 다시 정해지는 금리를 ‘변동금리’라고 하며, 대출이나 예금의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금리를 ‘고정금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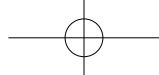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금리의 종류)

분류 기준	금리의 종류
정책기관의 금리	기준금리, 재할인율
금융기관 간의 금리	콜금리, 양도성예금증서(씨디(CD))금리, 코픽스(COPIX)금리, 라이보(LIBOR)금리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금리	대출(여신)금리, 예금(수신)금리
금리의 변동성	변동금리, 고정금리
만기 기간	단기금리, 장기금리
계산 방식	단리, 복리

한편, 북한에서는 대부금에 대한 리자률은 ‘대부리자률’이라 하고 예금에 대한 리자률은 ‘예금(저금)리자률’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 따르면, ‘대부리자률’을 ‘보통리자률’과 ‘연체리자률’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금을 제정된 날짜 안에 반환하였을 때에는 ‘보통리자률’을, 대부금의 반환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연체리자률’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체리자률’은 ‘보통리자률’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인민들의 유희 화폐 자금을 동원·리용하기 위한 저금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리자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즉, 단기성 저금 형태인 보통 저금에 비하여 장기성 저금 형태인 ‘준비저금’의 ‘리자률’을 더 높게 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용례 {금리가} 오른다. / {금리를} 내리다. / 북한의 예금 {금리는} 연 5%대로 알려져 있다. 상업 은행 {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셈이다.《데일리NK, 2019년 4월 30일》 / 우리 나라에서 국가는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대부리자률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며 국영기업소대부리자률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대부금에 대한 {리자률과} 기업소의 결함으로 더 요구되는 대부금에 대한 {리자률을} 차별하여 설정한다.《거울 2.0》
- 동의어 이자율(利率).
- 관련어 이자, 기준금리, 정책금리, 시장금리, 예대마진, 고정금리, 변동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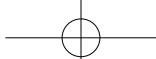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금융감독제도

金融監督制度,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금융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금융회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영업 행위 감독으로 구분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은 금융시스템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기반한 단일 은행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는 유명무실하며,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중심의 초보적인 여수신(예금과 대출), 외환 기능 이외에 자금 시장, 자본시장 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이전에는 조선중앙은행법에 의해 조선중앙은행이 내부 검열 및 감사 등 남한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시장 경제 요소를 대거 도입하여 2004년에 조선중앙은행법을 개정하고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조선중앙은행은 발권, 통화 조절, 지급 결제, 감사 및 검열 등 국가 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맡고, 예금, 대출, 보험업무 등 개인 금융서비스 업무는 명목적으로 조선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과 보험회사 등으로 이관하였다. 조선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에 따라 내각 직속의 독립기관인 조선중앙은행은 인민 경제의 재정적 통제와 내부 검열 및 감사 업무를 맡되, 조선중앙은행의 업무는 재정부가 감독하고, 각 은행은 소속된 경제체계의 관할 하에 상급 기관의 지도 통제와 조선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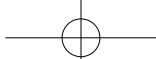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2015년부터는 북한 내각 산하에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지휘하는 금융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관급 인사를 책임자로 파견하여 금융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감독 업무 및 금융기능 조정 실무를 맡기고 있다. 현재 금융조정위원회는 북한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와 아울러 금융실무자 양성, 교육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금융감독제도는 단일 감독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형 Integrated approach 제도와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을 각각 다른 감독기관이 분리 감독하는 쌍봉형 Twin-peaks approach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금융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①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 관리, ② 건전성 및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 ③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재무건전성을 점검하는 검사 기능, ④ 증권 발행 심사 및 공시 제도 운영, ⑤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독 등의 자본시장 감독 기능, ⑥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⑦ 금융 정보 기술 감독 기능, ⑧ 국제협력 및 교류, ⑨ 조사 연구 및 통계 편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21년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적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 감독, 약관 심사 및 단계별 모니터링, 연금 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민원과 분쟁 구분 처리,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과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대처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①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②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③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의 인가 및 허가,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⑤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⑥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⑦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⑧ 금융 및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협상 등 국제협력, ⑨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⑩ 그 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 **용례** {금융감독제도를} 정비하다. / 금감원은 라오스 중앙은행 담당자와 면담, 실무진 간담회를 통해 양국 {금융감독제도} 등 정보를 교환하고, 라오스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연합뉴스, 2019년 11월 20일》

● **관련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조정위원회(북한어).

● **출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2018),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 홍보책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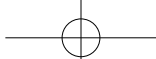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상업은행법(북한, 2006).

이수룡·이정희·조봉현(2018), 「북한의 금융실태와 개혁방향 및 남북협력 과제」, 北韓學報 43(1).

조선중앙은행법(북한, 2004).

통일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gounikorea>

● **집필자** 천규승



금융거래한도

金融去來限度, financial transaction limit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 놓은 것. 남한의 은행은 금융당국이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및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한도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거래 한도는 크게 예금거래 한도와 신용거래 한도로 나뉜다. 금융이용자 본인이 직접 은행의 영업 창구에 들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거래 한도에 제약이 없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려면 영업 창구에 갖춰져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온라인(비대면) 계좌(무방문 입출금통장 포함) 개설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전화를 통한 금융 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금융거래의 한도란 입금만 자유롭지만 출금이나 이체에는 1일 한도의 제한을 두는 것을 뜻한다.

한편, 북한에는 ‘금융거래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다만, 북한의 《거울 2.0》(2017)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자금 공급, 신용, 국가예산수입금수납, 무현금결제’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로부터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고 자금공급을 통하여 예산자금을 내주며 각이한 소유형태들에 있는 일시적유희화폐 자금을 동원하여 국가 및 협동단체기관, 기업소들의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보장해주는 계획적인 신용거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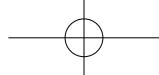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남한의 ‘금융거래한도’에 해당하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 수령 또는 연금 수급	채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고용(연봉) 계약서, 연금증서(수급권자확인서)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자료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실사·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자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로드뷰·간판사진·사무실 집기구입영수증 등),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등
기존 법인/개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미인정
사업 자금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급여명세표 등 고용 확인 자료
모임 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자료
공과금·관리비 등 자동 이체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목적의 경우)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필요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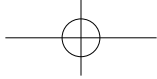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남한에서 인터넷(폰)뱅킹과 현금(체크)카드를 통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한도는 하루에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통장을 활용한 자동화기기 출금과 무매체 출금(무통장 또는 무카드)은 허용되지 않으며, 은행 영업 창구에서의 출금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권은 자체 지침에 따



라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체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은 1일 금융거래한도를 제한하고 나서 급여·연금 수급·사업용 등으로 계좌가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고, 해당 계좌가 대포 통장이 아닌 정상 계좌라는 것이 최종 확인되면 일반 계좌로 전환한다.

‘금융거래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이 주민등록증과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영업 창구에 들어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와 통장 거래 명세를 통해 계좌 개설 목적이 확인되면 거래 한도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용 레** 이 계좌는 {금융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다. / 은행들은 소비자가 계좌 개설 요청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전까진 1일 출금 {금융거래한도가} 제한(은행별 30~200만원으로 상이)되는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포 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대한금융신문, 2021년 3월 30일》
- **관련어** 예금거래한도, 금융거래한도제한 계좌.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정보분석원(2019),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개요」,
미래와 경영연구소(2006),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 경영.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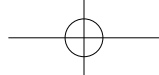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금융봉사정보체계

金融奉仕情報體系, finan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보화 체계. 이와 비슷한 말로 남한에서는 ‘금융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북한은 정보기술 장치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은행 업무의 컴퓨터화, 무인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아울러 정보처리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보안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사금융을 공공 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전자금융, 모바일금융 등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은행의 ‘전성카드’, 조선무역은행의 ‘나래카드’ 등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면서 금융서비스의 정보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성카드는 북한 돈인 원화를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카드이고, 나래카드는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면 북한 돈인 원화로 환전해서 카드에 충전한 후 평양 지역에서 사용하는 현금카드이다. 평양정보기술국이 출시한 스마트폰용 간편 결제시스템인 ‘울림 2.0’은 전성카드와 나래카드는 물론 지방의 무역카드, 무역기관 발급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양정보기술국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으로 인터넷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 미래망을 개발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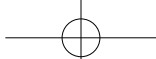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울림’이 개발되기 전 북한주민들은 온라인 거래 시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결제했고,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울림 2.0’이 출시되면서 남한의 은행 앱에서와 유사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결제는 물론 개인 사용자 간 요금 전송, 요금 충전, 잔고 조회, 거래 내역 확인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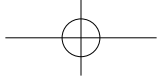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올림’은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 10여 개월 치를 치러야 구입할 수 있는 고급 스마트폰에만 탑재할 수 있어서,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다. 또한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 계좌와 카드를 연동해서 사용하라는 북한 당국의 권고에 북한 주민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앞으로 전국 단위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금융정책으로 금융정보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하여 재정은행사업의 개선·강화는 필수적이며,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 금융거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리명진은 2018년 금융정보화에 관해 “금융서비스가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봉사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대학의 함성준은 2019년에 “금융정보화의 목적은 금융거래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편리성이라는 4가지 요건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컴퓨터와 자동입출금장치(ATM)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금융서비스 전반에 컴퓨터화와 무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정보화를 통해 은행 업무의 전반적인 정보화를 이루면서 국가 금융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금융정보망을 구성하는 동시에, 금융 보안 체계와 전자결제 및 전자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용례** {금융봉사정보체계를} 마련하다. /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 금융거래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은 “현 시기 {금융봉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금융봉사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라고 지적했다.《NK경제, 2019년 1월 7일》
- **유의어** 금융정보시스템.
- **관련어** 금융정보화, 국가금융정보망, 전성카드, 나래카드, 울림.
- **출전** 리명진(2018), 『금융봉사정보체계구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64(3).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2020), 『북한의 금융정보화』.
이유진(2019), 『최근 북한 금융서비스 현황과 의의』, 주간KDB리포트 2019.2.
함성준(2019),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금융정보화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65(2).
- **집필자** 천규승



금융분쟁조정제도

金融紛爭調整制度,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 settl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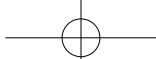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금융 업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제도. 남한의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에 의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조정을 위한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이며, 단위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우체국예금·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은 별도의 조정기구에서 담당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자주적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당사자들이 그 조정 의견을 받아들이면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에는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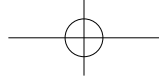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대등한 지위를 지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재판을 통



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은 조직력과 정보력의 차이로 인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하나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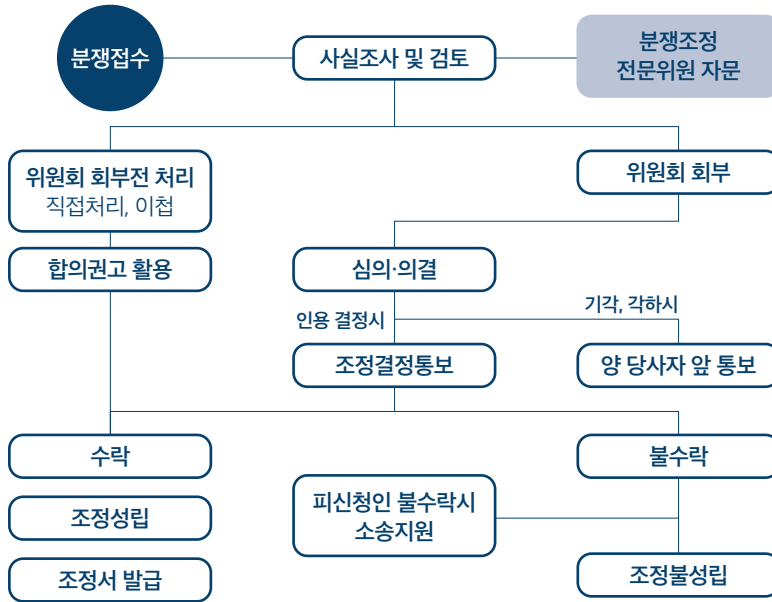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하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기존에 동일한 판례가 있는 사안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 당시에는 소송 중이 아니었으나 분쟁 조정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이 중지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조정 결정’은 신청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 조정이 중단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판단을 유보하는 ‘각하 결정’ 등으로 나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같은 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조정안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약 분쟁조정 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 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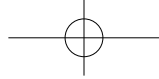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거부하거나 통보받은 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 절차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 **용례**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등록 및 영업 행위 준수 사항, {금융분쟁조정제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충청투데이, 2021년 3월 29일》
- **관련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 **출전** 고동원(2013),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5(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main.jsp>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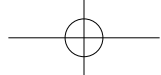


금융상품

金融商品, Financial Products

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상품. 금융소비자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그 가치를 키우고 싶을 때, 또는 돈을 빌리거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싶을 때 그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가리킨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예금성 상품’(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혹은 이와 유사한 상품), ‘대출성 상품’(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여신전문회사의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혹은 이와 유사한 상품), ‘투자성 상품’(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보장성 상품’(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융거래수단.”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 체제에서는 남한에서와 같은 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에서 각종 저금 형태의 저축성 상품을 정의하고 있고, 보험법에서 생명보험 형태의 인보험, 손해보험 형태의 재산보험 등 일부 보장성 상품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기업소 대출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개인 및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성 상품에 관한 법제적 언급은 없다.



✦ 더 알아보기

법령에서 금융상품을 정의하는 기준에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한정적 열거주의가 있다. 열거주의는 법령에 금융상품의 종류를 모두 제시하는 방식을 말하며, 포괄주의는 금융상품의 기능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정적 열거주의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절충안으로, 기능별 정의를 한 후 해당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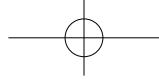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남한에서는 그동안 업권별 개별 법령에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해왔다. 금융공급자 중심의 전업주의 금융시장에서의 열거주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직관적이고 유용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금융 겸업이 허용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시장이 이행되면서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통합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동일한 판매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제를 정비하였다.

● **용례** {금융상품을} 구매하다. /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법상의 판매 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판매 행위 원칙을 규정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8년 11월》 / {금융상품은} 리자를 동반하는 모든 금융거래수단이다.《거울 2.0》 / {금융상품은} 처음에는 금융기관들과 그 거래자들 사이에 거래계약이 맺어지는 예금, 신탁, 채권, 각종 보험 등의 형태로 출현하였다.《거울 2.0》



- **관련어**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6대 판매원칙.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2호, 2020. 5. 19.).
보험법(북한, 1995).
보험업법(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상업은행법(북한, 2006).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5호, 2020. 5. 19.).
중앙은행법(북한, 2004).
- **집필자** 이의선



금융소비자보호제도

金融消費者保護制度,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남한에서는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각 금융업권별로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법률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영업 행위 준수 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실효적으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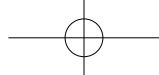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북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별 규제 체제의 마련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동일한 기능의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별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즉, 금융상품의 종류를 그 기능에 따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② 6대 판매 규제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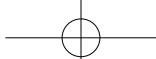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6대 판매 규제란 기존의 자본시장법 등에서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의 6개 규제를 가리킨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특성(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에 맞는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리고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비취 부적절한 때에는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위법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며,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 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규정하였다.

③ 불완전 판매 방지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의 기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 행위 재고^{再考}를 위한 청약철회권 확대, 판매 제한 명령권 도입, 자료 요구권·소송중지제도·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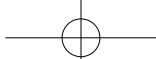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④ 정보 접근성 제고, 관리 책임 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의 신설, 금융교육의 강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부



여, 대출 모집인 감독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용 레**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다.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안착으로 중장기적으로 고객 민원 감축과 대고객 신뢰도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투데이코리아, 2020년 3월 10일》
- **관련어** 6대판매규제, 위법 계약 해지권, 불안전 판매, 청약 철회권, 판매 제한 명령권, 금융분쟁조정제도.
- **출 전** 금융위원회(20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9.11.25] 통과, 금융위원회 보도 참고 자료, 2019.11.26.
- **집필자** 이의선



금융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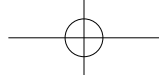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金融手數料, finance charge, 財政負担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융회사에 내는 요금. 금융회사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를 받는다. 예금거래나 전자금융을 포함한 결제 및 송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신 관련 수수료, 대출 등 여신거래에서 일어나는 여신 관련 수수료, 외화송금 등 외환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외환 수수료,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밖에도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와의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거래 수수료와 여유자금을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서 지급하는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 보험회사와의 보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 수수료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금융수수료’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수신 관련 수수료는 현금을 찾거나 송금을 할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금계좌가 있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느냐 타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주거래은행과 거래할 경우에는 그 은행이 매긴 고객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할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 거래를 하는지 즉,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지, 에이티एम ATM 등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은행 창구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뱅



킹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여신 관련 수수료는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비, 인지대, 부채 증명서 발행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요즘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화로 환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 관련 수수료는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외국통화의 종류에 따라, 또는 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할 금액이 클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국내 이용의 경우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카드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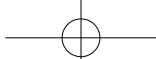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거래 방식과 거래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다양하므로 잘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투자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및 운용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와 판매사, 운용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용 레 {금융수수료가} 비싸다 / {금융수수료를} 올린다 / 금융회사 간의 {금융수수료를} 비교해 보다. / ○○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융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입출금통장 ‘○○○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조선비즈, 2021년 5월 10일》

● 동의어 금융거래 수수료.

● 관련어 외화환전수수료, 판매수수료.

● 집필자 박기찬



금융시장

金融市場, financial market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금의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자금의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가계가 적절한 시점에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시장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며,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 돈유동성, liquidity을 제공하고 돈의 흐름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는 ‘금융시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자본가와 산업자본가 사이에 화폐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거울 2.0》(2017)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사이에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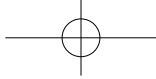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자금을 주고받는 직접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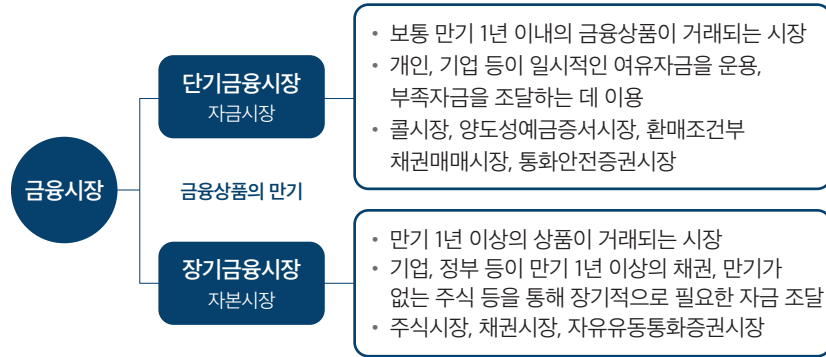
과 중간에 금융회사를 두어 자금을 주고받는 간접 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직접 금융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배구조 유지나 금융비용 부담 등에는 불리하다. 간접 금융시장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로부터 경영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 기간에 따라 단기 금융시장(자금시장, money market)과 장기 금융시장(자본시장, capital market)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 이용한다. 장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회사채나 국채, 주식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또한 금융시장은 거래 증권을 중심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은 거래 장소와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래소시장과 특별한 규칙 없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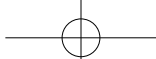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북한에서도 금융시장을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거울 2.0》(2017)에서는 “금융시장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금융시장은 기간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 단기금융시장(1년 이하)과 장기금융시장(1년 이상)으로, 거래자가 해당 나라의 거주자만인가 또는 비거주자도 포함되는가에 따라 국내금융시장(화폐시장)과 국제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 거래되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산업금융시장과 소비자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단기금융(자금)시장과 장기금융(자본)시장 〕



- **용 레** {금융시장} 개방 / 중국 금융 당국이 나홀째 대규모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긴축 우려로 중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서울경제, 2021년 1월 28일》 / {금융시장}은 화폐자본의 중요한 활동거점이며 화폐자본의 증대는 {금융시장}의 확대를 가져온다.《거울 2.0》
- **관련어**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자금중개 기능,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문정숙 외(2010), 『소비자경제학』, 교문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집필자** 이의선



금융실명제

金融實名制, real-name financi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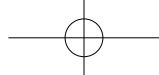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자기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 남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실명확인 의무 또는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금융거래 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제도이다.

북한에는 ‘금융실명제’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도 않는다. 다만, 『조선말대사전』(2007)에서 “예금, 대부 등 금융관계를 자기의 본이름으로만 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 《거울 2.0》(2017)에서 “모든 재산을 그 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받아낸다는 당시 남조선○○당국이 내놓았던 제도.”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배경은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에게 저축을 강조해 왔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금자 비밀을 보장하였고, 금융거래 시 가명, 차명, 무기명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실명 금융거래 관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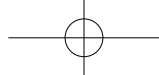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각종 자금의 음성화를 초래하여 지하경제를 활성화하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 등 투기성 자금의 형성, 불투명한 재산형성, 납세의 불균형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 또한 이러한 불투명한 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증여,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의 수단이 되어 실물경제의 성장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였다. 도입 당시 주요 내용은 금융거래 당사자가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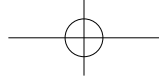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이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는 반드시 대면(face-to-face)에 의한 실명확인을 해야 했다. 금융거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증명원, 납세번호증 등의 증명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비대면 거래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비대면 실명 인증은 '지식 기반 인증', '소지 기반 인증', '생체 기반 인증', '특징 기반 인증'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식 기반 인증은 비밀번호, 이미지 인증, 동작 인증 등을 말하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입력하는 숫자와 문자 비밀번호 인증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지 기반 인증은 에스엠에스(SMS), 음성, 이메일 등으로 인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체 기반 인증은 지문, 홍채, 망막 등 신체 일부의 고유 정보를 파악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징 기반 인증은 기기 설정, 위치, 접근 기록 등 사용자만 유일하게 아는 특정 정보에 대한 답을 유도하는 인증 방식이다.

한편, 차명계좌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금융 계좌으로, 흔히 대포 통장으로 불린다. 대포 통장은 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포 통장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도 금융실명법에 위배



되지만, 남에게 제공하였을 때에도 금융 질서 문란자로 금융 기관에 등재되어 신용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 **용 레**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다. /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3월 5일》 / 남조선에서 다시 실시되게 된 {금융실명제의} 내용은 거래당사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명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밝혀진 본명에 대한 비밀을 당시 행정부가 철저히 지켜 준다는 것이다.《거울 2.0》
- **관련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차명계좌, 대포 통장, 실명확인, 실지명의, 비대면실명확인.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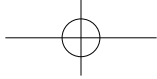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금융투자상품

金融投資商品,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 기관을 통하여 구매하는 주권, 증권,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따위의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크게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증권은 투자자가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지급의무를 지지 않는 상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이에 속한다. 파생상품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이에 속한다. 파생상품은 표준화된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부에 따라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뉜다. 비금융투자상품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가리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예금과 적금이다.

북한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다만, 《거울 2.0》(2017)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자본주의금융 시장에서 류통되는 금융거래수단. 금융상품은 리자를 동반하는 모든 금융거래수단이다. 금융상품은 처음에는 금융기관들과 그 거래자들 사이에 거래계약이 맺어지는 예금, 신탁, 채권, 각종 보험 등의 형태로 출현하였다.”와 같이 뜻풀이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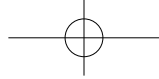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금융투자상품은 시장금리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있다. 투자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투자상품에 대해 꼼꼼하게 살핀 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투자상품별 투자 위험 등급 분류 〉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
채권	투기등급 포함 (BB이하)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보증채
주식	주식				
집합투자증권	펀드 위험등급(1~6등급)에 따라 분류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선물,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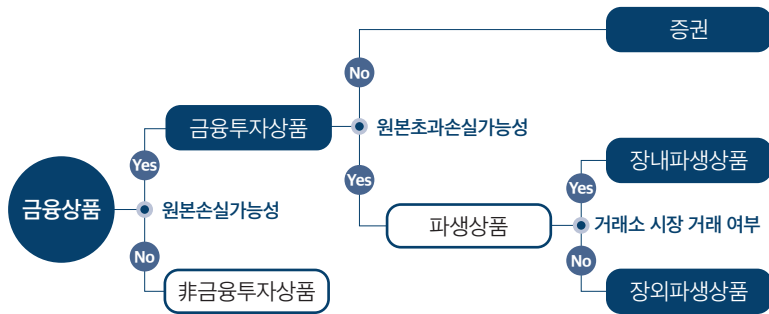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용 레**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다 /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다 / 유사투자자 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한국경제, 2021년 5월 7일》
- **관련어** 금융상품, 파생상품,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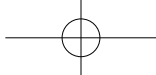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2019), 『알고 시작하는 주식투자』.
한국FPSB(2020), 『투자설계』.
- **집필자** 성동규

《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체계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투자회사

金融投資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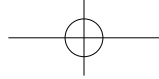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금융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가지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투자회사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간접금융회사인 것과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직접금융회사이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북한에는 ‘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금을 받는 회사가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펀드 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지,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는지, 어떤 상품이나 회사에 투자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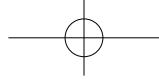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사전에 수익률을 확정할 수 없고, 투자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배분만하는 방식이므로, 사전에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는 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이나 적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대출이나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것보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높으면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들도 적지 않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

구분	주요 업무	금융회사
투자 매매업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 중개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 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 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 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출처: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용 레** {금융투자회사들} 설립하다 /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한국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많이 진출한 해외 지역으로 증권사 6개와 자산운용사 10개 등 총 16개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베트남에서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팍스경제 TV, 2021년 4월 7일》
- **관련어** 증권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이조영



금융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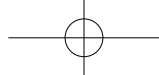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金融會社, Financial Cooperation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 공채, 사채, 주식 등의 유가 증권이 발행될 때,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이 있다.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더 넓은 개념인 ‘금융기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북한에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뜻한다면, 금융기관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금융 관련 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업권별 설립법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다.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로 분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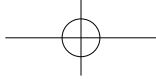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다. 금융보조기관은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하부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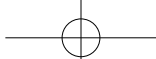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를 각 개별 업권별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는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별 금융업권별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를 정의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등이다.



- 용례 {금융회사} 방문하다. / {금융회사} 설립하다. / {금융회사}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과 조직을 뒤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한국경제, 2021년 3월 21일》
- 유의어 금융기관.
- 관련어 금융투자회사, 단자 회사, 증권 회사, 투자 금융 회사.
- 출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집필자 이익선



기업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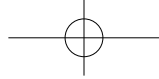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企業어음, CP, Commercial Paper

신용 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만기 1년 이내의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가리킨다. 기업어음^{CP}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유통되는 상업어음과 달리,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통어음이다. 기업어음은 국내 단기 자금시장의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기업어음은 이사회 의결,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금리 측면에서도 은행 대출보다 유리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는 ‘기업어음’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기업어음^{CP} 시장은 발행기업, 할인 매출기관, 매수기관으로 구성되며, 기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가 담당한다. 기업어음을 발행하면 증권회사 등이 선이자를 떼 다음 매입(할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개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즉, 이자는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할인 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 시점에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주요 매입 주체는 자산운용회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은행, 증권의 신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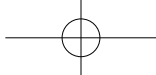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용평가 결과이다. 담보나 보증 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양호해야 하며,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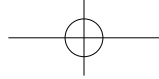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 신용평가등급 체계 〕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에 활용)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1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2	우수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A3	보통 수준의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B	불안정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	불량한 단기 신용상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D	채무불이행 상태
* A2부터 B까지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 '+' 또는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장기 신용등급(회사채, 대출채권 등에 활용)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최고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거의 없음
AA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BBB	보통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지만 변동성 내재
BB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
B	매우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CC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CC	매우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높음
C	최악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불가피
D	채무불이행 상태
* AA부터 B까지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 '+' 또는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출처: 한국기업평가(주) 홈페이지, http://www.korearatings.com	



- 용 레 금융회사가 {기업어음율} 사들일 때는 보통 어음 액을 할인한다. / 단기금융상품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단기신용등급 A3이하 기업들의 {기업어음} 발행도 빠르게 늘고 있다.《한국경제, 2020년 8월 17일》
- 동의어 씨피(CP).
- 관련어 금융투자상품, 신용평가기관, 전자단기사채(전단채).
- 출 전 한국FPSB(2020), 『투자설계』.
한국기업평가(주) 홈페이지, <http://www.korearatings.com>
한국은행(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 집필자 성동규



다단계 금융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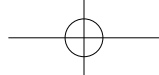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多段階金融詐欺, multi-level financial fraud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사기. 수익을 내기 위한 특별한 수단 없이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금융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다단계 금융 사기는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는 다단계 방식의 금융 사기이다. 금융 피라미드 사기 또는 폰지 사기 Ponzi scheme 또는 ponzi game 라고도 한다. 또한, 보험을 사기의 매개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상품 판매 시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특수한 판매 방식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방문 판매법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품’의 매매 없이 금전거래만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다단계 금융 판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북한에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다단계 금융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인 ‘폰지 사기’의 명칭은 1920년대 미국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낸 찰스 폰지 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폰지 사기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여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일종의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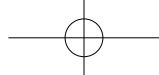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려막기' 사기 수법이다. 신규 투자자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 한 사업 후기에 진입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이 사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단계 금융 사기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해외로부터의 이주동포, 이주노동자 등 금융 소외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들은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고 저금리 사회에서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처지의 성공한 사업가나 저명인사 등 신뢰할 만한 인물을 앞세워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기 판매 방식에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은 더 많은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배당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기업자의 수익으로 축적된다. 사기업자가 축적한 수익은 해외 은닉 등으로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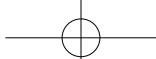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는 보험 형태의 다단계 금융 사기도 자주 발생한다. 보험설계사(사기 브로커)가 병원 직원과 모의하여 허위 진단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사기 보험금을 타도록 유인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사기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동료 북한이탈주민이나 가족들의 가입을 유도하도록 한다.

다단계 금융 사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등록업체는 국내에서는 불법업체이므로 투자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접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비상장 주식거래



를 유도하거나, 고수익과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용례** {다단계 금융 사기에} 대처하다. / 2017년 한 대학은 UN산하 비정부기구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해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유학생을 연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로} 벌금 7,400만 달러를 부과받은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기업체였습니다.《KBS NEWS, 2021년 1월 31일》
- **동의어** 금융피라미드사기, 폰지 사기.
- **관련어** 유사수신행위, 금융 사기.
- **출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11.23.).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kdic>
- **집필자** 천규승



다층연금체계

多層年金體系, multiple pens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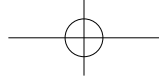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를 모두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려는 소득 보장 체계. 가입자가 경제 활동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노년기에 일정액만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 수단이다.

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득 대책이므로 은퇴 이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s)와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s)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100%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사적연금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 등이 있다.

북한에는 ‘다층연금체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의 다층연금체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노사 합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3-pillar system)를 가리킨다. 이러한 다층연금체계에는 보험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약정한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 원칙(contribu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그리고 남한 정부에서는 다층연금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후 준비가 미비한 65세 고령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



후복지제도로써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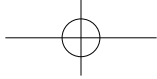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다층연금체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가입 가능한 기간에 해당 연금제도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부담금)를 납입하고, 연금 관리 기관은 그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연금 관리 기관에서는 보통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이 은퇴 직전 월급의 약 70~80% 수준이 되도록 연금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연금제도의 종류 〕

구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사적연금	3층보장체계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2층	퇴직연금	-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무소득자도 임의가입 가능)		특수직역연금
	0층 (공적부조)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약 70% 국민)		

출처: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용 레**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는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논의에서 더 나아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YTN, 2018년 12월 14일》
- **관련어** 공적연금, 사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송홍선(2019), 『다층연금시대의 국민연금제도개혁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19-23호, 자본시장연구원.
- **집필자** 이조영



단기신용대출

短期信用貸付, short-term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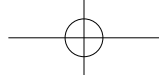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담보 제공 없이 신용만으로 단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개인, 기업 또는 금융회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보 제공 없이 신용만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가리킨다. 단기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제1금융권 은행,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및 캐피탈회사, 대부업체 등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취급한다. 북한에서는 ‘단기신용대출’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단기신용대출 상품은 대출 취급 회사별로 그 종류와 특성이 나뉜다.

첫째, 은행의 단기신용대출로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이 있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상환 조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개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에게만 제공되는데, 일정한 개인 소득과 함께 은행거래를 꾸준히 해 왔거나, 안정성을 갖춘 직장에 소속된 개인이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신용카드회사의 단기신용대출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도의 신용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에이티엠ATM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좀 더 많은 금액을 1년 이상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론이 대표적인 대출상품이다. 단점은 금리가 상당히 높으며 개인 신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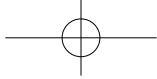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금리가 적용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셋째, 저축은행 및 캐피탈회사의 단기신용대출은 대출자가 매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자가 법정최고금리(2021년 7월 현재 20%) 수준의 금리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당연히 개인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부업체의 소액 단기대출은 법정 최고 금리 수준의 고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크다. 순식간에 이자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용례 {단기신용대출을} 받다. / 급전이 필요해서 {단기신용대출을} 이용하다. /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단기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토록 지도하기로 했다.《이데일리, 2020년 11월 13일》
- 동의어 긴급신용대출.
- 관련어 저신용대출, 대부업체, 연체, 채무불능.
- 집필자 박기찬



대부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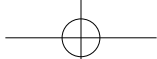
貸付業體, lender, 金貸し業者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업체.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의 현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융통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를 가리키는데, 은행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현금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뜻한다. 대부업체는 다른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그 대금을 받아 내는 주심 업무도 한다.

‘대부업체’와 유사한 의미로 북한에는 ‘돈주’라는 용어가 있다. 『조선말대사전』(2007)에 ‘돈주’는 “(여럿이 하는 장사에서) 돈을 틀어쥐고있는 주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돈주’는 대부업만이 아니고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고서 무역이나 장사 행위, 환전업 등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 북한의 사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경제 주체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서 돈주가 은행을 대신하여 대출, 송금, 환전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 ‘돈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금융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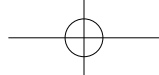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대부업법)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부업체의 주된 고객은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로, 상대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높은 이자로 충당한다.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자금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제화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금리와 그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용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다. / 불법 {대부업체} A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했습니다. A는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KBS NEWS, 2021년 2월 17일》
- **유의어** 돈주, 사금융, 사채업자, 전주(錢主).
- **관련어** 대부업,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사채(私債).
- **출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임을출(2016),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 한울아카데미.
- **집필자** 이조영



대출

貸出, loan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리거나 빌려줌. 금융거래에서의 대출은 주로 돈을 빌리는 대가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받으려고 하는 대출의 원금,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 조건, 담보 등 기본 조건과 내용이 자신의 사업 및 재정 상황에 적합한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대출은 개인이나 기업이 재무적 계획과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무리한 대출은 이자 및 원금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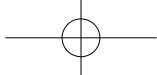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북한의 금융거래에서는 조선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에 의하여 기업소(기업) 대상의 대출만 허용된다. 북한의 전자사전 《거울 2.0》(2017)에서는 “(주로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돈, 출판물 같은것을 꾸어주거나 빌려주는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돈이 필요할 경우 주로 사채업자인 돈을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대출은 대상, 만기, 적용 금리, 담보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첫째, 대출을 받는 대상이 개인이나 기업이나에 따라 개인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뉜다. 개인대출은 최근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둘째, 대출의 만기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단기대출과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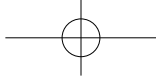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대출로 나뉜다. 돈이 필요한 기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회전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단기카드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그리고 ‘운전자금대출’이 적합하다. 장기대출은 돈이 필요한 기간이 길 경우에 이용하는데, ‘주택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 등이 있다.

셋째,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지, 또는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로 나뉜다. 변동금리 대출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다시 정해지며, 주기적으로 변동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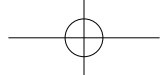
넷째,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무담보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담보대출은 대출을 받는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제삼자가 소유한 부동산, 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개인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업대출의 경우 시설자금대출이 대표적인 담보대출이다.

- **용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다.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원금을 분할해 갚도록 하는 내용의 고액 신용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21년 1월 27일》
- **동의어** 융자(融資), 대부(貸付).
- **관련어**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회전한도대출, 단기카드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박기찬



(대출의 종류)

분류 기준	대출의 종류
대출 대상	개인대출, 기업대출
만기 기간	단기대출, 장기대출
금리의 변동성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
담보 유무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무담보대출)
대출 용도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회전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단기카드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회전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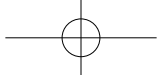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대출, 왜 조심해야 하나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나 담보 등 은행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에 혈연이나 지연이 전혀 없는 북향민들은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용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렇다 보니 저축은행, 캐피탈 등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을 별다른 주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북향한 북향민 L씨는 남한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2014년 어렵게 회사를 차렸다. 한동안 회사는 순조롭게 운영되는 듯했으나 3년째 접어들면서 현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규제가 강화되자 점점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거래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수금이 발생했고, 심지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1년이나 지나서야 전자어음을 받기도 했다. L씨는 개인 예금과 보험까지 해지해 가며 간신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으나 다달이 수천만 원의 인건비와 경비를 마련하는 일은 점점 힘에 부쳤다.

L씨는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담보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었고, 거래 실적도 부족해 신용 대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L씨는 여러 은행을 찾아다닌 끝에 다행히 한 은행에서 7%의 금리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대출 광고가 생각나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결국 L씨는 회사가 보유한 차량을 담보로 모 캐피탈과 대부업체 2곳에서 20~24%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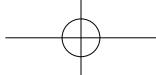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그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꺾지만, 높은 이자는 L씨의 사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 매달 대부업체 등에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L씨는 몇 년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탓에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차이도 전혀 알지 못했다. L씨처럼 사업이나 자영업 계획을 하고 있는 북향민의 경우, 금융회사의 특성과 대출 금리 등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선불리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 대출금 연체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도 대출받을 금융회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북향민들은 북한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 북한의 은행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흥자본가인 ‘돈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주택이나 가전제품을 담보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북향민은 남한의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 더욱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기록은 향후 신용 관

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꾸준히 거래 실적을 쌓고 고정 수입 규모를 늘려 신용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필자 이지영





대출금리

貸出金利, loan interest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일반적으로 만기에 원금에 덧붙여서 지급하는 이자금액, 또는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동안의 원금 대비 이자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북한의 금융 관련 서적이나 사전에서는 ‘대출금리’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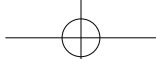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지표금리’라고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로는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또는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 COFIX 금리’가 많이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금리로, 보통 대출을 받는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비용을 감안하여 정해진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차감되는 우대금리는 대출을 받는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해당 금융기관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주기적으로 변동하느냐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뉜다. 변동금리는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로 금리가 매번 다시 결정된다. 고정금리는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용례** {대출금리가} 내리다. / {대출금리가} 오르다. /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
/ 주식과 아파트 구매에 나섰던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부 조치가 겹치면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2021년 2월 28일》
- **동의어** 대출이자율, 여신금리.
- **관련어** 기준금리, 가산금리, 예금금리, 예금이자율, 우대금리.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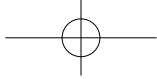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도급생활비

都給生活費, Subcontract living expenses **북**

북한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정해진 노동 단가에 따라 지불하는 임금의 한 형태. 북한에서는 ‘임금’이라는 용어 대신 ‘생활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생활비 분배의 원칙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의 질에 따른 분배 방식에는 ‘생활비등급제’가 있고, 노동의 양에 따른 분배 방식에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가 있다. 도급지불제는 제공한 노동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지불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일터에서 생산한 생산량이나 투입한 노동량에 따라 보수가 차등으로 지불된다. 정액지불제는 일한 시간, 기능 급수와 노동 조건이 같으면 노동의 결과에는 관계없이 동일한 생활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액지불제는 노동 정량을 정확히 제정할 수 없고 또한 노동의 결과를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과 도급지불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정액지불제에 따라 지불하는 생활비를 정액생활비라고 한다.

+ 더 알아보기

1978년에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제39조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 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는 도급지불제에 따른 보수인 도급생활비와 정액지불제에 따른 보수인 정액생활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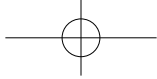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구성된다.

북한의 『경제사전2』(1985)에서는 도급지불제를 “로동에 대한 보수를 노동자들이 일정한 질을 가진 생산물을 생산량 또는 작업량에 따라 평가 계산하는 생활비 지불의 기본 형태이다. 도급지불제는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계산 평가할 수 있는 부문, 즉 로동 정량을 정해주고 그 수행 정도를 계산 평가할 수 있는 부문에 적용된다. 도급지불제는 로동의 결과를 질, 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생활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옹계 결합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게 한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도급지불제’에 대해 “... 그 적용 기초에 놓여있는 로동 정량의 수행 정형과 로동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단일도급지불제, 루진도급지불제, 공수도급지불제, 질도급지불제, 기술지표도급제, 간접도급지불제 등으로 나뉘며, 로동 정량을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는 개인도급지불제와 반도급지불제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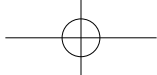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도급지불제의 임금 결정 기준 ▶

구분		계산방법
정액임금(시간제 임금)		월간 총 노동시간 × 해당급수의 시간당 임금 = 월임금액
도급임금	개인 도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규준 적용시: 제1급노동자 시간당 노임 × 해당등급의 노임률 × 1일 작업시간(8) / 1일 작업규준량 × 생산량 = 임금액 · 시간규준 적용시: 제1급노동자 시간당 노임 × 해당등급의 노임률 × 제품당 시간규준 × 생산량 = 임금액
	반도급제	방법 1: 작업반 성원의 총시간당 노임액 × 1일작업시간(8) / 1일 도급량 × 총생산량 = 작업반도 급임금총액 방법 2: 작업반 도급임금총액 / 작업성원의 임금 단순총액 × 개별노동자 등급별 노임액 = 임금액

출처: 남성욱(2004),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 한울아카데미.



- 용례 {도급생활비를} 지급하다. / 당 간부, 행정기관 사무원처럼 작업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직업은 {도급생활비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정액생활비를 지급한다.《매일노동뉴스, 2004년 4월 28일》 / 도급지불제는 제품단위당 도급단가와 로동정량수행실적에 따라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로동보수지불형태이며 그에 의하여 지불하는 생활비를 {도급생활비}(우리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형태이다.)라고 한다.《거울 2.0》
- 관련어 도급지불제, 도급제, 로동보수, 정액지불제, 정액생활비, 생활비등급제.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김상훈(2006), 「북한 주민의 실질 임금격차 분석: 산업별·시도별 평균임금 및 곡물구매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성욱(2004),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 한울아카데미.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유성재(2009), 「남북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 법학논문집 33(2).
조동호(2000),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 집필자 이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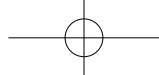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쉬어가기

월급과 생활비

북향민 A씨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이 알알하다. 무려 전체 월급의 20~30%가 각종 세금과 공제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첫 월급을 받은 북향민 중에는 A씨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액수에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실 월급이 별 의미가 없다. ‘생활비’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0~4,000원으로 시장에서 쌀 1kg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그마저도 직원 경조사비와 1%의 사회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든다. 그런데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은 북한보다 한국이 훨씬 높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가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보기도 전에 국가가 먼저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만큼 세금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왔다. 북한은 1972년 12월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명시하고, 1974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채택해 세금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 생활하려면 ‘세금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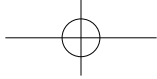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외부담'이라고 불리는 준조세 형태의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발전소 지원금', '염소목장 지원금', '김일성-김정일 기금', '충성의 외화벌이 기금', '1호 도로 건설 지원금' 등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 이외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국영 기관, 기업소에 적籍을 두고 실제 수입은 건설장의 일용직 노동이나 시장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다.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남북은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세금은 월급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을,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소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그러나 북한은 준조세격인 각종 지원금 차출이 지방마다 제각각이고 중간 관리자들의 부정부패도 만연해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없는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은 생활비보다 몇십 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옷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 김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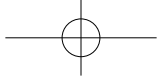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독립채산제

獨立採算制,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independent profit system

동일한 기업 내에서 경영 단위인 사업부서별로 별도의 손익을 계산하는 책임 경영 제도. 기업의 대표나 책임자는 이 경영 방식의 목적에 맞게 사업 운영의 전권을 부여받아 자산·부채·자본을 책임 있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부서 책임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상응한 보상을 받는 반면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진다.

‘독립채산제’는 원래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구 소련)’이 국영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채택하였던 경영 관리 제도이다. 기업의 국유화 과정에서 대두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공장이나 기업소가 국가 소유의 생산 수단이나 원자재 등을 독자성을 가지고 운용하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업 관리 기법이다. 공장이나 기업소 등은 국가에서 지정한 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물질적 보상을 받고,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모든 기업은 독립채산제의 대상이 된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독립채산제’를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는 국영기업소가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예산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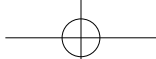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에서는 ‘독립채산제’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아래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전1』(1985)에서는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은 국가소유인 기계설비, 원료, 자재 등 생산수단을 책임적으로 리용하고 관리하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이익을 준다. 국가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앞에 물질적인 책임을 진다. 반대로 생산수단을 잘 리용하고 관리하며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잘하여 국가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을 때에는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를 받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농업 분야의 ‘작업장 독립채산제 및 상급제’(1960), 공업 분야의 ‘완전 독립채산제’(1962년)로 시작하여, 1984년 독립채산제 규정 등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합기업소를 ‘이중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그 외의 기관들을 ‘독립채산제’ 혹은 ‘반독립채산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독립채산제’란 생산조직과 관리조직이 각각 별도의 독립채산제를 이중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고, ‘반독립채산제’는 기업의 운영자금 중 일부만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독립채산 방식의 경영을 한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기업 결손을 국가 재원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도록 독립채산제가 적용된다. 남한에서도 ‘독립채산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세법’ 제7조1항의 4), 북한과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국제법령정보시스템(2019)은 독립채산제에 대해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 단위마다 업무 집행 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수적 관리체제"라고 정의하고,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생산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 위마다 성과 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한의 대부분의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사업',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재정자금 운용', '귀속재산 처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에 독립채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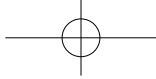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 **용 레** {독립채산제} 운영하다. / 청와대 앞에서 인력 부족 해소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이 {독립채산제}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구조를 바꿀 것을 촉구하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21년 2월 15일》 / 2002년 '7. 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 이어 2012년에는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소 지배인과 당 비서가 {독립채산제}에 따라 생산과 판매, 그리고 노동자 임금 지불까지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VOA Korea, 2017년 5월 5일》 /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및 건설사업소를 비롯하여 자체의 경영활동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출수 있는 물질적부의 생산단위에서는 레외없이 {독립채산제} 실시하고 있다.《거울 2.0》 /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들은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고정 및 류동재산을 리용하여 독자적으로 경리를 운영하고 국가계획의 수행에 대하여 국가앞에 책임지며 모든 지출을 자체수입으로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어야 할 책임을 진다.《거울 2.0》

○ **관련어**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

김상기(2004),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해설, KDI 북한경제리뷰 6(8). 한국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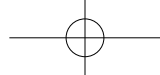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집필자** 천규승



디지털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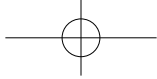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digital貨幣, digital Currencies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여 거래할 수 있는 통화.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전자화폐 electronic currency’,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 등이 이에 속한다. 디지털화폐는 컴퓨터에 보관하여 사용하거나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최근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과 결제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 북한의 전자금융 실태, 2019년 4월) 활용도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고려코인’ 등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 ICO 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아이티 IT 기업인 ‘조선엑스포’는 비트코인 거래 중개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7년부터 북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 사업도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큰 성과는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코인 맵 <http://coinmap.org>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식당이 평양에 4곳, 원산에 1곳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알아보기

최근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이들 기술이 여러 영역에 걸쳐 적용되면서 다양한 디지털화폐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cashless 사회’로의 전환에 관심이 커지면



서 디지털 결제 및 디지털화폐 시장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는 중앙은행 내 지불 준비 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하나로, 일반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데,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이다. 암호화폐 Cryptocurrencies 중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bitcoin이다.

전자화폐는 은행예금을 전자적으로 여러 단말기에 저장·보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실체가 있는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다. 애플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앱과 전자지갑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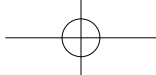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 현금(법정통화), 디지털화폐,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비교 ▶

	현금(법정통화) (Fat Currency)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은행	은행	기업/개인	P2P 네트워크
화폐 형태	주화(금속) 또는 지폐(종이)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화폐 구분	법정통화	법정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적용 법규	○	○	×	×
사용처	모든 거래	가맹점	가상공간	가맹점
발행기관	중앙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법정통화로 충전, 잔액은 법정통화 로 환급가능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교환할 수 없음	법정통화와 자유 로이 교환됨

자료: 한국은행, 피넥터, 유진투자증권



- **용 레**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다. / 중국이 법정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 위기 속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디지털화폐를} 채택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국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용이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연합뉴스, 2021년 1월 20일》
- **관련어** 가상화폐, 법정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 디지털화폐(CBDC), 지역화폐, 비트코인.
- **출 전** M. Bech and R. Garratt,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2017년 국제결제은행 분기보고서.
Medici Research.
방현철(2020), 『코로나 화폐전쟁』, 이콘출판사.
- **집필자** 이기송



로동보수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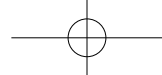
勞動補修資金, money for labour remuneration 

북한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 북한에서는 기업이 개인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 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윤은 사회순소득과 생활비로 전환된다. 사회순소득은 다시 국가에의 납부금(정부 몫)과 기업의 자체충당금(기업 몫), 근로자에 대한 로동보수자금(가계 몫)의 형태로 분배된다. 로동보수자금은 기업이 지출한 근로자의 생활비와 사회순소득의 일부가 개인에게 재분배되어 개인소득으로 변화된 형태를 가리킨다.

북한의 로동보수제도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로동보수는 생활비와 추가적 로동보수로 구성되며, 생활비는 정액생활비와 등급생활비로 구성된다. 북한 근로자의 급여는 대부분 생활비로 구성되며, 추가 로동보수는 급격한 임금 격차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만 지급된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인 로동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창출된 부를 분배하고 회계결산 시 이 항목을 로동보수자금으로 분류한다. 로동보수자금은 일종의 임금인 생활비와 장려금, 상금으로 구성된다. 기관이나 기업이 로동보수자금 총액을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반, 직장, 노동행정부서, 재정회계부서가 단계별로 개별 근로자의 로동보수자금을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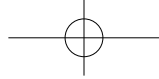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조선로동당출판사가 발간한 『주체정치경제학독본』(1999)에서는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를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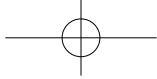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주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로동보수제에는 국가와 협동단체가 규제한 로동보수의 지불형태와 지불방법의 총체가 속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에 의한 분배 법칙의 요구에 맞게 로동에 대한 평가와 로동보수 지불의 원칙, 형태와 방법들을 규정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동보수 지불제의 기본형태는 생활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비’에 대해서는 “생활비란 사회주의 국가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로동 과정에서 소모한 로동력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 경리부문에서 창조한 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화폐 형태로 지불하는 로동 보수 형태이다. 생활비는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임금은 상품으로서의 로동력의 가격이며 잉여가치를 짜내는 수단으로 리용되지만 생활비는 로동력의 가격이며 근로자들이 로동 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경제적 수단이 된다. 임금이 자본가와 로동자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 착취관계를 반영한다면 생활비는 호주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로동자, 사무원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 범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용 레 {로동보수자금} 받다. / {로동보수자금} 게시하다. / {로동보수자금} 게시에서는 상금, 장려금자금이나 추가생활비자금의 구성과 그것을 지불하기로 한 데 대한 회계계산이 진행된다.《광명백과사전, 2010년》 / {로동보수자금} 사회주의 국가가 기관, 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생산물을 낸 정도에 따라 분배하여주는 화폐자금이다.《거울 2.0》 /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들이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고 생산조직을 개선하여 사회생산물을 많이 내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로동보수자금도} 더 커진다.《거울 2.0》/ {로동보수자금} 생활비자금, 장려금자금, 상금자금, 가급금자금으로 이루어진다.《거울



- 2.0》
- **동의어** 인건비(남한어).
 - **관련어** 노동보수.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오상봉 외(2018),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99), 『주체정치경제학 독본』, 조선로동당출판사.
 - **집필자** 이익선



머니마켓펀드

MMF, Money Market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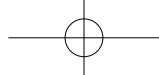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모아 위험이 적은 만기 1년 이내의 국공채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 금액에 제한 없이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이 당일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환금성이 높아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머니마켓펀드'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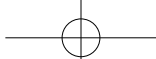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머니마켓펀드MMF는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1971년에 개발한 금융상품이다. 금리 자유화가 본격화한 지난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으며, 남한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중화된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현금 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 변동 위험이나 신용 위험, 환율 변동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펀드와 달리 편입 자산의 만기, 보유 자산의 가중 평균 잔존 만기, 투자 자산의 신용등급 제한 등의 자산 운



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용 자산은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국공채, 통화 안정증권 등의 채권, 우량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예금 등에 투자되며, 가중 평균 잔존 만기가 75일 이내로 짧게 제한된다. 또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은 AA등급, 기업어음은 A2 등급 이상의 안전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므로 손실 위험이 아주 낮다. 그렇지만 머니마켓펀드^{MMF}는 원금 상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약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머니마켓펀드^{MMF}로 운용되는 채권의 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 **용례** {머니마켓펀드에} 가입하다. / {머니마켓펀드}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돈이 쏠리는 단기 부동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경제, 2020년 2월 10일》 / 분기말 자금수요와 일부 단기금융상품 경색 우려가 겹쳐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이 대규모 순유출됐다.《이데일리, 2020년 4월 7일》
- **관련어** 단기금융상품.
- **출전** 성동규(2015),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첫걸음』, 북스토리.
한국은행(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 **집필자** 성동규



모바일뱅킹

mobile banking

휴대폰·스마트폰·태블릿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모바일뱅킹은 휴대형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스마트 기기(스마트폰)가 널리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뱅킹 smartphone banking’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텔레뱅킹(폰뱅킹)’과 ‘인터넷뱅킹’에 뒤이어 등장한 개념이다. 텔레뱅킹(폰뱅킹)은 전화를 걸어서 에이알에스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나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인터넷뱅킹은 피씨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는 모바일뱅킹과 유사한 뜻으로 ‘지능형 손전화기 은행 업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평양정보기술국에서 개발한 모바일 결제 앱 ‘울림’은 전자상점 결제뿐만 아니라 카드와 카드 간 송금(계좌이체), 잔고 조회, 카드의 요금 충전, 다른 전화 사용자로의 요금 이체도 가능해 모바일뱅킹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 더 알아보기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2020년 6월 말 현재 1억 2,825만 명에 이른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실적 중에서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평균 이용 건수 및 이용 금액 기준으로 각각 60.5%와 15.0%에 달한다. 초기 단계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여 계좌이체 등의 간편 금융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제공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분실 위험이 없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어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모바일뱅킹은 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의 생체정보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단순 금융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자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 (일평균 기준) ▶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이용 건수	인터넷뱅킹	112,450	125,062	146,991	165,829	208,129	(25.5)
	(모바일뱅킹)	70,749 <62.9>	79,022 <63.2>	91,200 <62.0>	102,428 <61.8>	125,830 <60.5>	(22.8)
이용 금액	인터넷뱅킹	47,454.2	47,645.4	47,756.7	49,856.7	55,294.0	(10.9)
	(모바일뱅킹)	5,231.8 <11.0>	5,453.7 <11.4>	6,042.4 <12.7>	6,735.7 <13.5>	8,277.8 <15.0>	(22.9)

※ 주: ()내는 전기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에서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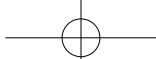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2020.9), '2020년 상반기중 국내 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 **용 레**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다. /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리인하 요구 신청부터 결과 확인, 약정까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마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가는 추세다.《연합뉴스, 2021년 3월》

○ **관련어** 모바일결제, 온라인지급결제, 오프라인지급결제, 간편결제.



- **출 전** adjust + apptopia ebook(2020.9), '2020년 모바일 금융보고서'.
아이지에이웍스(2020.12.), '모바일 인덱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1.), 'ICT 융합 심층리포트 : 모바일 결제 기술 특성 및 현황'.
한국은행(2019.5),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
한국은행(2020.9), '2020년 상반기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 **집필자** 이기송



무현금류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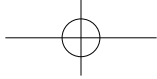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無現金流通, cashless circulation **목**

북한에서 국영 기관이나 기업이 현금의 이동 없이 계좌의 잔액 변동만을 표시하여 결제하는 방식. 북한의 화폐 유통 방식에는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이 있다. 현금류통은 화폐의 교환 기능에 기초하여 은행을 사이에 두고 기업과 거래자 또는 기업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형태이며, 무현금류통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관이나 기업 사이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결제 방식이다.

북한의 『경제사전1』(1985)에서는 ‘무현금류통’을 “무현금 결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화폐류통으로, 현금류통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무현금류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총체적인 화폐류통량은 무현금류통량으로서, 류통화폐량의 일부를 이룬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무현금류통은 대금의 지불을 요구 또는 위임하는 결제문서들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무현금류통은 무엇보다도 국가기관, 기업소들 사이의 경제거래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현금류통은 재화 형태로 존재하는 생산 수단이나 주요 물자의 유통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또한 국가 기관이나 국영 기업들의 계획적 물자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무현금류통에 의한 자금결제는 물자의 계획적인 유통을 실현하면서 인민경제 계획을 안정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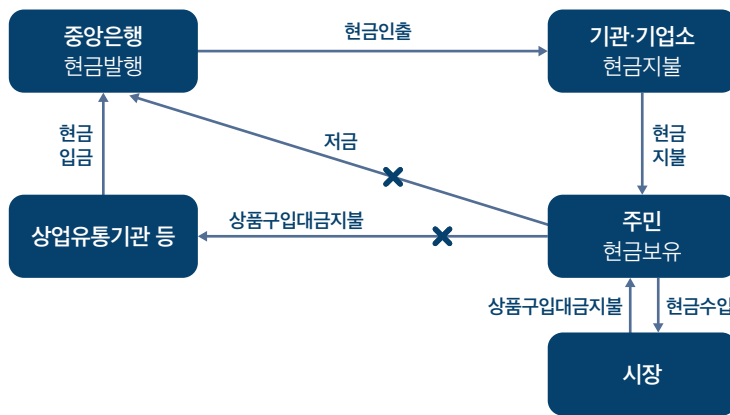


로 수행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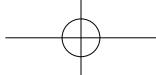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이러한 무현금류통의 적용 범위는 국영 기관 및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은행의 결제계좌와 결제문서를 통한 무현금결제에 기초하여 운용된다. 결제계좌는 국영 기관과 기업의 화폐 수입·지출 및 잔고를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좌를 말한다. 결제문서는 현금을 쓰지 않고 대금지불을 청구하거나 위임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무현금결제는 은행의 결제문서에 기초하여 결제계좌를 통해 재화의 대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즉시지불서에 의한 결제’, ‘송금에 의한 결제’, ‘지불위탁서에 의한 결제’, ‘지불청구서에 의한 결제’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현금결제는 물자 공급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대금의 미지급과 이에 따른 결제 범위가 축소되어 불법적인 현금거래가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 현재 북한의 현금유통 구조 〉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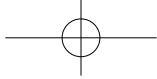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용례 {무현금류통을} 조직하다. / {무현금류통을} 바로 조직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물자유통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 연계가 밀접해지는 데 따라 무현금경제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도록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유통법, 제1장 제5조》 / {무현금류통은} 현금을 리용하지 않고 대금지불을 청구 또는 위임하는 결제문서에 기초하여 은행에 설치된 기관, 기업소들의 예금돈자리에서 계산상으로만 화폐자금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실현된다.《거울 2.0》 / {무현금류통은} 화폐류통에서 현금류통량을 줄이고 화폐류통의 안전성과 공고성을 보장하면서도 현금류통과 관련한 사회적류통비를 절약할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현금류통은 주로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안에서 또는 그들사이의 경제거래에서 적용된다.《거울 2.0》

○ 관련어 결제계좌, 결제문서, 무현금결제.

○ 반의어 현금류통.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김영희(2009), 『북한의 유통 실태와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 집필자 이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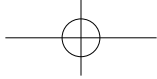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미소금융

micro credit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 대출 제도.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업·운영 자금이나 시설 개선 자금, 긴급 생계 자금 등을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소액 대출 제도는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도 하며,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의 창업·운영 자금 등 자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 대출 제도는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하여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저소득·저신용자(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해당)가 신청할 수 있다. 소액 대출에는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대학 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 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이 포함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소액 대출 상품에는 ‘희망사다리론’, ‘LH공사 행복론’, ‘미소금융론’, ‘새출발 마중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론’, ‘개인회생론’ 등이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미소금융’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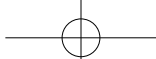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마이크로크레딧은 1976년에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빈민 42명에게 27달러를 빌려주어 그들이 고리사채의 늪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시작되었다. 야누스 교수는 이를 계기로 গ্রাম민 은행을 설립하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확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소액대출 사업은 다른 개발도상국들로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는 110여 개 국가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용례 {미소금융을} 신청하다. / {미소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보증, 무담보 소액대출이다. {미소금융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으로 한정된다.《디지털투데이, 2021년 3월 16일》

● 관련어 소액대출제도, 서민금융진흥원.

● 출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nfa.or.kr>.

● 집필자 이조영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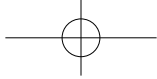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法人稅, Corporation Tax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이다. 법인세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률로 정한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한다. 사업 연도마다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 영리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법인세는 사업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직접세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쓰이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전자사전 《거울 2.0》(2017)에 ‘법인세’를 “자본주의나라에서 법인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며 직접세의 한 형태이다.”로 뜻풀이하어 제시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법인은 영리법인과 특수법인, 공익법인으로 나뉜다. 공익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수법인에도 비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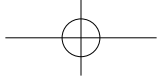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인세의 주요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학교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에 국제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가리킨다. 공익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킨다.

◁ 법인세 누진율 ▷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000만 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용 레** {법인세율} 납부하다. / 연구개발(R&D)로 우수 특허를 내고 관련 매출을 올리면 {법인세율} 깎아주는 ‘특허박스’가 도입된다. 유럽연합(EU) 각국이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제도다.《한국경제, 2021년 3월 11일》 /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기업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외국투자기업에 한하여 부과된다. 외국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을 때에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낸다.《거울 2.0》
- **동의어** 기업소득세.
- **관련어** 소득세, 직접세, 국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집필자** 이익선



변액보험

變額保險, variabl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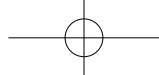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제외한 적립 보험료를 주식, 공채, 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수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스스로 투자자산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보험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의 크기가 투자 성과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보험 계약자는 투자 대상 펀드를 바꾸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꾸준히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계약 기간 도중에 보험을 해지하면 최악의 경우 해지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납입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판매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 유가증권 취급을 위한 전문적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쓰이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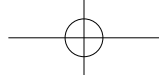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 시 설정한 최저보증 guarant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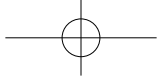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minimum benefit 을 제외하고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저보증은 계약에서의 선택사항으로, 변액보험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인 위험보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의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장해 주려는 장치이다.

변액보험은 계약 과정에서 최저보증으로 ‘최저사망보험금 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최저연금적립금 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등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최저보증 사항을 선택할 경우 보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저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책정하려는 최저보증 사항이고,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 개시 시점까지 이미 납입해 놓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책정하려는 최저보증 사항이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으로 나뉜다. 변액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변액보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에 변액보험 기능을 추가한 투자 실적 배당형 연금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펀드 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보험과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보험이다.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장 보험료와 투자에 대한 투자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보장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 **용 레** {변액보험에} 가입하다. /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으로 받는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고객들에게 적합성 진단을 한다.《헤럴드경제, 2021년 3월 24일》
- **관련어**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최저보증(guaranteed minimum benefit), 최저사망보험금(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최저연금적립금(GMAB: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 **출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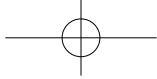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보증보험

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각종 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이다. 채무자인 보험 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증보험은 보증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수행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보증 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도 준용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북한에도 ‘보험제도’가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일반적으로 채무계약은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체결된다. 현재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채무계약이 리행되지 않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을 통하여 담보받고 있다. 보증보험에서 채무자는 보험계약자가 되고 채권자는 피보험자로 된다. 보증보험계약당사자인 채무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 조사에 응할 의무, 위험발



생을 통지할 의무, 손해를 방지할 의무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석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등이 있다.

신원보증보험은 신규 취업자나 직장인의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이다. 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근무 중 과실 또는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끼칠 때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행보증보험이란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볼 때 계약보증금, 선금급 지급 보증금, 하자 보증금 등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다. 납세보증보험이란 납세자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납세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이다. 인허가보증보험이란 해당 인허가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자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으로 허가 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공탁보증보험이란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 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자인 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경우 신청인인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보험이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구매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판매자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석보증보험은 형사 피고인 또는 형



사 피의자의 보석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보석 신청인이 보석 보증금 대신 활용하는 보험으로, 형사 피의자가 보석 조건 위반으로 법원이 보석보증금을 몰수 결정 또는 납부 명령하는 경우 보석 신청인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소액대출보증보험은 은행, 보험회사 등 각종 대출 회사로부터 가계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대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이란 회사 또는 각종 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주택자금이나 기타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소속 직원인 보험계약자가 상환 기일에 그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용 레 {보증보험에} 가입하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와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때 연대 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KBS NEWS, 2018년 11월 5일》 / {보증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의식적인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연재해(지진, 홍수, 폭풍 등)와 사회적재해(전쟁, 폭동, 파업 등)에 의한 손해,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거울 2.0》 / {보증보험의} 특징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 정액보상방식과 실지손해보상방식이 있다.《거울 2.0》

○ 관련어 보험, 신원보증, 책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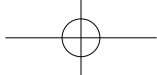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상업은행법(북한, 2006).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2016), 『북한의 금융』, 오름.

○ 집필자 이조영



보험

保險, insurance

미래의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보험은 각종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 보장 제도이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위험을 제3자(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회복한다.

보험은 사고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손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 생활이나 기업 경영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 화재보험, 보증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용도를 높여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북한에도 ‘보험제도’가 있다. 북한의 『광명백과사전』(2010)에서는 “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연적 원인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미리 막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중앙집중적으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 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이에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장 내용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보험금의 사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으로 구분하고, 보험 가입의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기도 한다.

◁ 사회보험의 종류 ▷

구분	주요 내용
국민연금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보험
고용보험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험

출처: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생명보험협회(2020), 『고등교재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 재구성

◁ 민영보험의 종류 ▷

구분	주요 내용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
손해보험	재산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
제3보험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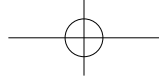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생명보험의 종류)

구분	기능	종류	주요 내용	
보장성 보험	위험만 보장	사망 보험	종신 보험	보장 기간이 평생(종신)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언제 사망하더라도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기 보험	일정한 보험 기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
		질병 보험	암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나 생활비를 보장하는 보 험	
		상해 보험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실손 의료보험	질병 등으로 발생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저축성 보험	위험보장 + 저축기능	연금 보험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여 은퇴 후에 연 금을 받는 보험	
		저축 보험	위험보장 기능과 함께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이 있는 보험	
		교육 보험	입학금, 학자금 등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보험	

(손해보험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화재보험	건물 등 화재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등을 지급해 주는 보험
해상보험	선박의 운항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배상책임보험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보증보험	대출이나 계약의 이행, 각종 상거래 등에서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제3보험의 종류 】

구분	주요 내용
상해보험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
간병보험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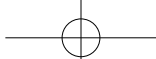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

구분	주요 내용
정액보험	민영보험 중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보험금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생명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 보험금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실손보험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보험으로 주로 손해보험이 해당

【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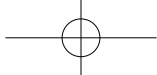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의무보험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¹ 과 대물 배상, 가스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있다.
임의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 ¹ ,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대인 배상 ² ,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는 임의 보험

- 용례 {보험에} 가입하다. /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험이}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해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매일경제, 2021년 5월 7일》 / {보험은} 보험대상의 차이에 따라 재산보험과 인체보험으로 구분된다. 재산보험은 큰물, 벼락, 화재, 지진, 태풍, 질병 등으로 하여 일어날수 있는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며 발생한 손해를 보



상하는 {보험이며} 인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공민이 사망되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보험은} 또한 {보험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의무적보험과 자원적보험으로 나눈다. 의무적보험은 국가법령에 기초하여 일정한 보험대상에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보험이며} 자원적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보험이다}.《거울 2.0》

- **동의어** 상호부조.
- **관련어** 보험회사,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약관.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생명보험협회(2020), 『고등교재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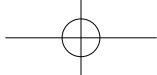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보험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남한에 갓 정착한 북향민은 지인들에게 보험 가입 권유를 많이 받는다. 보험 가입을 권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한에 먼저 정착한 고향 친구들이나 지인들로, 혈혈단신으로 남한에 와서 외롭게 생활하는 북향민에게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북향민은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북향민 A씨도 남한 정착 초기에 보험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하나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가입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북향민 선배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화제가 옮겨 갔다. 그 선배는 잠시 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기로 했으니 A씨도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처지가 비슷한 고향 선배라서 왠지 믿음이 갔고, 먼저 남한에 정착한 사람이니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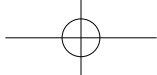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선배와 함께 보험설계사를 만난 A씨는 월 보험료 9만 원의 실손의료보험과 월 6만 원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140만 원의 월급에서 탈북 브로커 비용,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5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다.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년 후 결국 환급금도 거의 받지 못하고 암보험을 해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보험설계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보험설계사는 “어떤 고객이 질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자신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덕분에 수술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다. 그 보험설계사는 A씨가 다니는 회사의 보험을 관리하



고 있어 더욱 신뢰가 느껴졌다. 평소 혈압이 높고 혈관 질환 가족력도 있었던 A씨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솔깃하여 심장 및 뇌 질환을 기본으로 보장하면서 암과 각종 특약이 추가된 월 보험료 15만 원의 장기손해보험에 다시 가입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A씨는 직장을 잃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근근이 부어 오던 적금마저 해지해 돈을 보내야 했다. 점점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부담이 되고 있는 보험료를 조금 줄여 보려고 보험 분석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또 다시 보험을 해지했다. 두 번의 보험 해지로 A씨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다.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민영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적으로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노동 능력을 잃었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가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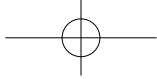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치료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생명보험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자식들에게 남겨 줄 것이 마땅치 않았던 부모들은 죽을 때 목돈이라도 남겨 주자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매월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자 그 인기도 시들해졌다. 또 주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가 보험금을 제대로 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한의 일부 보험 광고에서는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몇 가지 보험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의 소득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저축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 저축 금액과 보험료를 비교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 봐야 한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A씨처럼 미래의 위험은 커녕 현재의 위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집필자 오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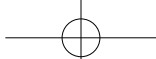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보험계약

保險契約,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보험자)와 맺는 계약.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액 등의 급여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 교환되는 가치의 존재, 계약 당사자의 법적 행위 능력과 계약의 합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보험계약의 일방이 청약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承諾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약속 즉, 보험계약에서 교환되는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 증거로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금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특히 특약조항 및 면책조항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의 법적 행위 능력과 계약의 합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합당하고 불법, 위법 등의 내용이 없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에도 ‘보험제도’가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기관이 보험에 드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개인들과 맺는 계약. 보통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신청문건을 보험기관에 내고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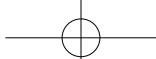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기관이 그것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방법으로 맺어진다. 보험계약은 법적성격을 띤다. 보험기관과 피보험자들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호상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보험기관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위험을 재정적으로 담보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제때에 내줄 재정적의무를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고지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고지는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 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확인한 사고 발생 위험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증가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라고 한다.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등과 같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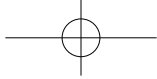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있다. 보험회사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한 달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늘어난 손해의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지인의 가입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원하는 계약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청약 철회권이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해당 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청약 철회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당해 보험의 약관 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용 레** {보험계약}을 체결하다. / {보험계약을} 갱신하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내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28일》/ 보험기관과 피보험자는 호상 지켜야 할 법적의무와 권리를 명백히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거울 2.0》

● **관련어**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보험금.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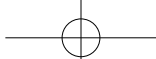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생명보험협회(2020), 『고등교재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집필자 이조영

〔 보험계약 관련 주요 용어 〕

용어	주요 내용
보험 계약자	보험회사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만기환급금 및 계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사람의 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수익자	보험자(보험회사 등)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수익자가 되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에게 납부하는 돈.
보험금	보험사고(생명보험의 경우) 또는 소정의 손해(손해보험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돈.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한다.
해약 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보험은 은행과 달리 보험모집 등 초기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기간 내 해약할 경우 원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된다.
보험 계약 부활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납입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실효보험으로 분류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금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보험 대리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 특정 회사의 보험이 아닌 대부분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판매 백화점 또는 보험 양판점 등으로 불린다.

출처: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생명보험협회(2020), 『고등교재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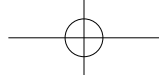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 과정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액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로서의 국세이다.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이전받은 사업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제품의 수입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과세거래가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과 법인이 된다.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되며, 법인에는 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물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를 뜻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액에서 그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자재 등의 생산원가를 제외한 순생산액을 가리킨다. 이러한 생산물의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더한 값은 최종소비자가 지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같다.

북한에는 남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다만,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본주의하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부가가치》를 세금 부과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가공, 도매, 소매와 같은 상품의 매 거래단



계마다에서 가치가 창조된다고 보고 그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한 형태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각 거래단계에서 늘어난 가치부분을 세금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는 1976년에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였다. 종래 간접세 방식으로 징수하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유흥음식세 등을 통합하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소비세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등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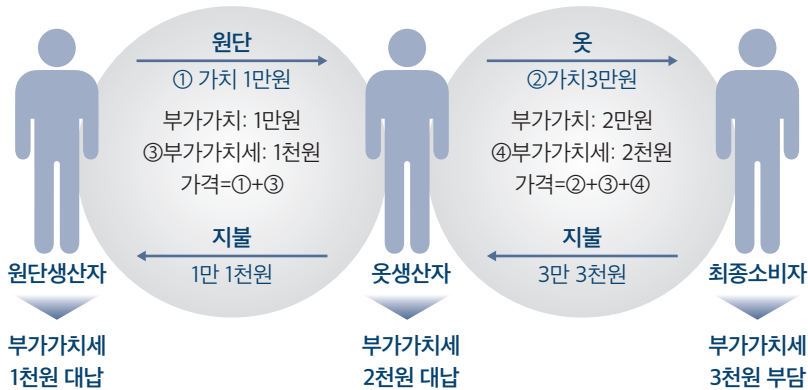
- 용 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마다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로 인해 어느 세금보다 파급력이 크다. 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과세가 되나 생활필수품 등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 2021년 1월 5일》 / {부가가치세의} 법적납세자는 명목상 원료공급자나 제조업자, 소매업자 그밖의 중간매매업자로 되어있으나 그 실제적부담자는 근로자들이다.《거울 2.0》
- 관련어 부가가치, 간접세, 국세, 소비세.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기획재정부(2021),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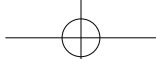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및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21년 7월 1일 시행)

구분	과세 표준(업종 구분)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준세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0%	10%
간이과세자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림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표준세율(10%)로 산출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f.go.kr			

〔 부가가치세 발생 및 납부 〕





불법추심

不法推尋, illegal debt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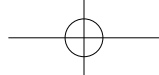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빚을 받아 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 법에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조사하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재산적 손해를 끼칠 정도로 과도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추심으로 규정하여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불법추심’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지만, ‘추심’이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다. ‘추심’은 ‘빚단련’, ‘빚추심’이라고도 한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추심’을 “남은 사회에서, 빚을 갚을것을 독촉하여 못건디게 구는것 또는 그때문에 시달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이나 채무를 자제함으로써 대출 연체나 채권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목적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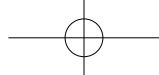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는 것을 방지하여, (중략)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법률 제1조)이다. 이 법률에 따라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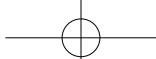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채무자나 관계인(가족, 친족, 직장 동료 등)을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협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
- ②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③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④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를 갚을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⑥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⑦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
- ⑧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휴대폰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용례** {불법추심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증거를 확보해야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하다. / A씨처럼 불법 고리 대출을 썼다가 {불법추심을} 당한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법률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불법추심}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무료로 해준다.《동아일보, 2021년 4월 19일》
- **동의어** 불법채권추심.
- **관련어** 채권추심, 연체독촉, 채권자,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2017), 『거울2.0』.
법무부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
- **집필자** 박기찬



산업재해보상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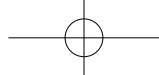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産業災害補償保險,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장해·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국가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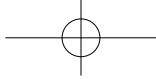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과 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각종 행사 및 출·퇴근 등도 포함된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 조건 또는 작업 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산재보상의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으로 나뉜다. 요양급여는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되며, 부득이하게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비용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해보상 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할 경우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미리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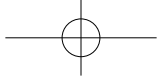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중중요양상태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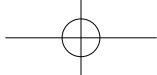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

급여의 종류	급여의 범위
치과보철료	총 2회에 한하여 지급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 단, 부득이한 경우 5년경과 전에도 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지급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적용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기준에 의함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산재환자가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확인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
이송비	<p>이송비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는 순로(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산정 •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 기준금액”에 따라 산정 <p>이송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 포함)의 거리가 편도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1킬로미터 미만이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통원이나 퇴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p>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비청구서(의학적 소견 포함) • 영수증(택시인 경우 별도 양식의 영수증 첨부),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 요양 사실 확인서 등 첨부) <p>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8조 •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 및 별표 제11절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다. / ○○은 19일 택배기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경제, 2020년 11월 19일》
- 관련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출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생명보험협회(2020), 『고등교재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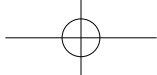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산재보험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

남한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만들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산재보험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산업 재해 발생 시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 엄청난 소송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산재보험과 비슷한 ‘사회보험제’가 있다. 사회보험제는 연금제도와 보조금제도로 나뉘는데, 노동자와 농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조금제도의 일환인 ‘일시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농민이 재해, 질병, 부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때, 월평균 수입의 50~80%를 3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이밖에 사회보험제 중 연금제도에 포함되는 ‘폐질연금’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불구자가 되었을 때, 월평균 임금의 23~90%를 매월 지급한다.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과 기업소부담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담은 통상 월 단위로 농민소득 또는 노동보수의 1%를 징수한다.

서울에서 건설 업종의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북향민 K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20대 북향민 청년 B씨를 채용했다. K씨는 남한 정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북향민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회사 생활에 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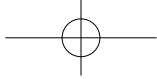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현장에서 돌아온 B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 B씨가 걱정된 K씨는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나타난 B씨는 수백만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내밀며 본인이 현장에서 종일 해머를 휘두르며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므로 산재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씨의 사업장은 해머를 휘두르며 일하는 환경이 아니었고, 더욱이 진단서에 기록된 병명은 산재보험 대상도 아니었다.

산재보험 신청이 어렵다는 K씨의 말에 B씨는 “산재보험금은 날아다니는 공짜 돈이다. 그런 돈을 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회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돈 없는 북향민을 좀 도와주면 안 되는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 K씨는 그에게 산재보험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해 주었다.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 내려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며칠 동안 화를 내며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까지 하던 B씨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스스로 퇴사해 버렸다. K씨는 그 사건을 겪으며 산재보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랏돈은 ‘날아다니는 공짜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위협적인 태도로 치료비를 받아 내려고 했던 B씨의 행동은 남한의 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피해를 부풀려 진단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B씨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습에 익숙해져서 남한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K씨는 이 사례를 공유하며 일부 북향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필자 이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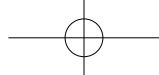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상장지수펀드

上場指數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인덱스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증권 시장에 상장한 펀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친 인덱스펀드이다. 인덱스펀드는 특정 지수를 목표 주가로 정한 뒤에 각 지수에 편입된 주식의 비중만큼 주식을 매입한 후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로, 펀드의 수익이 지수의 변화를 따라가도록 운용한다.

상장지수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체로 포트폴리오 투자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소 10 종목 이상에 의무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하며, 1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전체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원금 손실 위험이 분산된다. 또한 투자상품의 구성이 다양하여 투자자의 선택 범위가 넓으며,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므로 환금성도 뛰어나다. 더구나 표준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투자의 수익과 손실은 기초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므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적은 상장지수펀드ETF는 피해야 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상장지수펀드'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14년 11월에는 상장지수증권 ETN, Exchange Traded Note 시장이 개설되었다. 상장지수증권 ETN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수익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이다. 상장지수증권 ETN을 발행한 증권회사는 만기에 투자 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비용을 빼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만기 이전에도 중도환매 또는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 용 레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다. / 개인들의 주식투자 확대로 {상장지수펀드가} 재테크 대표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수수료(총보수) 낮추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조선일보, 2021년 2월 1일》 / 최근 은행에서 {상장지수펀드} 거래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데일리, 2021년 5월 14일》
- 관련어 상장지수증권, 인덱스펀드.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한국거래소(2016), 『똑똑한 자산관리 ETF ETN』, 한국거래소(증권상품시장부).
- 집필자 성동규

〔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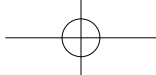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구 분		상장지수펀드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증권 (ETN, Exchange Traded Note)
정의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만기가 없는 집합투자증권(펀드)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자	주체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신용위험	없음(신탁재산으로 보관)	있음
기초 지수	구성종목수	10종목 이상 (주식형ETF의 경우)	5종목이상 (주식형ETN의 경우)
	자산운용제한	있음(운용제한)	없음(운용제한)

출처: 한국거래소(2016), 『똑똑한 자산관리 ETF ETN』 한국거래소(증권상품시장부)

〔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특징 〕

구분	ETF	펀드	주식
투명성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결제주기	T + 2일	T + 3~8일	T + 2일
매매세 세금	국내 주식형 : 없음 기타: 배당소득세(15.4%)	배당소득세(15.4%)	증권거래세(0.3%)
투자위험	시장위험	시장위험	시장위험, 개별위험
장중 거래	가능	불가	가능
거래처	모든 증권회사(직접투자) 은행(간접투자)	특정 증권회사, 은행	모든 증권회사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조회사

相助會社, mutual aid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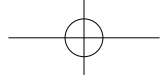
경조사(慶弔事)가 있을 때에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서 일정 금액을 미리 할부 형태로 받아두었다가, 그 금액을 바탕으로 경조사의 진행을 돕는다. 처음에는 장례 진행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결혼, 크루즈여행 등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상조회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 더 알아보기

북한에는 상조회사가 없으며, 대부분 개인이 경조사를 직접 치른다. 장례식의 경우 예전에는 국가에서 장례 보조금과 약간의 식량, 술 등을 제공하거나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지만, 식량난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 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남한에서의 상조업은 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를 공동체가 함께 대비하던 '계궐'에서 발전하였다. 상조회사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의전이나 장례 차량 등의 서비스와 아울러 유족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장례식장 사용 비용, 제사 비용, 조문객 식사 비용, 화장, 납골, 매장 비용, 장지 구매 비용 등은 상조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입 전에 서비스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상조회사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이므로 폐업이나 부도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는 부실 위험이 없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장례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회사의 할부금 납부 기간이 통상 10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상조 할부금을 적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장례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대원 사망 시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장제급여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 된다.

● **용 레**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문화일보, 2021년 1월 3일》 / 하지만 막상 장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급하게 준비하고자 하면 어려움이 따르곤 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상조회사다}.《경상일보, 2020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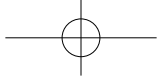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관련어** 상조회.

● **출 전** 네이버 지식백과 ‘상조회사’,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 ‘상조업’, <http://ko.wikipedia.org/wiki/>.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80호, 2018. 12. 31).

● **집필자** 이조영



서민금융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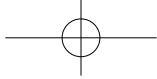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庶民金融支援制度, Financial Inclusion Support system

정부가 신용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소득이 적거나 채무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이는 다시 가계 빚의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가계수지가 악화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서민금융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은 크게 ‘서민층 자금지원제도’와 ‘신용회복제도’로 나뉜다. ‘서민층 자금지원제도’는 정부 주도 하에 출시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대표적인데, 이에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창업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 제도인 ‘미소금융’, 근로자 생계 및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가계의 대환 지원 상품인 ‘바꿔드림론’, 가계의 생계비 지원제도인 ‘새희망홀씨’ 등이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양한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용회복제도로는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민 계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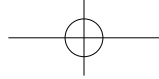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 운영, 고용 지원, 금융교육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서민층 자금지원제도로 제공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 ①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소액 대출 사업이다.
- ② 햇살론: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으로, 상호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 ③ 안전망대출: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로 기존의 ‘바꿔드림론’을 보완한 서민 대출 사업이다.
- ④ 새희망홀씨: 은행이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용 레**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다.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약 1만 명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매일경제, 2019년 2월 5일》
- **관련어** 미소금융, 햇살론, 안전망대출, 새희망홀씨,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출 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http://www.fss.or.kr/s1332/>
금융위원회(2018),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오윤해(2020),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KDI FOCUS 101호.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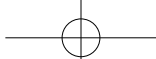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종류 〕

구분	서민층자금지원제도				신용회복제도			
	종류	미소금융	햇살론	안전망 대출	새희망 홀씨	워크아웃		개인회생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목적	창업운영	생계·사업 운영	대환지원	저금리 신용대출	사전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사후 채무면책
주체	정부	정부	정부	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 서민금융지원기관 〕

기관	상담전화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http://center.kinfa.or.kr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http://www.fss.or.kr
서민금융진흥원	1397	http://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http://www.ccrs.or.kr



세금우대제도

税金優待制度, Interest Income Tax break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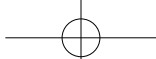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세금우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이용자가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일정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과세 당국은 금융상품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이자·배당소득의 세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세금우대제도이다.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은 가입자격, 한도, 기간 등에 제한이 있고,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세금우대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세금우대제도는 이자·배당소득세 자체를 면제해주는 비과세제도와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저율과세제도(세율 1.4~9.5%)로 구분된다. 비과세제도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가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일반인은 가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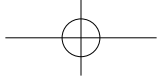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장기 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데,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매년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 원 초과 금액에는 9.9% 분리 과세(지방소득세 포함)한다. 증권회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면 투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400만 원 초과 소득에는 9.9%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 금액과 납부 수수료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납입 예정일 때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저율과세제도는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저율 과세되는데, 2021년 만기 상품의 경우 5.9%, 2022년 이후 만기 상품의 경우에는 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율과세상품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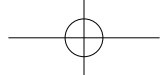


- **용 레** {세금우대제도를} 활용하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혜택에다가 초과분은 분리 과세하면서, 예전 {세금 우대 제도가} 부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뉴시스, 2016년 3월 13일》
- **관련어** 절세형 금융상품, 비과세, 세금우대.

〈 1천만 원을 연이율 3%로 1년간 저축할 경우 세금우대 효과 비교 〉

구분	세율	세금	세후 이자	세후 수령액	세후 금리
일반과세	15.4%	46,200	253,800	10,253,800	2.54%
세금우대	9.5%	28,500	271,500	10,271,500	2.72%
저율과세	1.4%	4,200	295,800	10,295,800	2.96%
비과세	0%	0	300,000	10,300,0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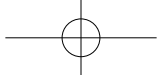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출 전**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883호, 2021. 1. 5.).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 **집필자** 천규승



세금 없는 나라의 ‘집금소’

남한의 국어사전에서 ‘집금集金’은 ‘돈을 거두어 모음, 또는 그 돈’으로 정의되어 있다. ‘집금소’라는 단어는 남한의 국어사전에 없다. 북한의 ‘집금소’는 시장 가격 또는 합의제 가격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자(기업, 주민 등)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세금 징수 기관이다. 집금소에 납부된 사용료는 북한의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출된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북한 당국도 시장 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에 대한 통제와 목인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존재를 못마땅해하던 북한은 민심을 반영해 결국 2000년 초반 종합시장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시장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2004년 5월 재정성 지시 제29호를 통해 집금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재정성 지시문은 ‘달긴 구역(‘주요 군사 시설’이나 ‘연구 시설’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 당黨, 군軍, 특수 단위를 포함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주민들에게 적용하게 되어 있다. ‘재정성 지시문’의 ‘규정 제2조’에 “집금소集金所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재정국(부)집금소’라는 명판과 공인을 가지고 해당 인민위원회 재정부서의 지도 밑에 집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얼핏 보면 남한의 국세청과 유사한 일을 하지만, 집금의 목적과 대상,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의 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며 기획재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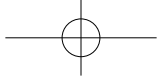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금을 부과·징수하여 국가 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을 조달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와 다르다.

북한의 집금소는 사용료 징수 목적이 남한의 세금과 비슷하지만, 공식적인 소득 외의 비공식적 소득에 대한 준조세라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와 계획에 의해 국정 가격(국가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생산, 유통, 봉사(서비스) 활동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집금소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정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영업 및 봉사 단위의 소득, 주민들이 생산, 영업,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얻는 수익이 집금소의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공존이라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이 비공식 소득(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을 따로 정해 부과하는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집금소의 설치에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일종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집금소의 존재는 ‘세금 없는 나라’를 주장하는 북한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 집금소뿐만 아니라 ‘발전소 지원 자금’, ‘충성의 외화벌이 자금’, ‘삼지연 건설 지원 자금’ 등 각종 명목의 세외 부담으로 북한 주민들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정상적인 세금을 걷는 것이 훨씬 낫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북한의 준조세 규모는 정해진 비율이나 상한선이 없어 간부들의 횡령 및 착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향후 북한의 집금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집필자 조충희



소득세

所得稅, income tax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매기는 세금. 남한의 소득 세법상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퇴직금에 부과하는 ‘퇴직소득세’,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매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을 근거로 국가가 직접 과세하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조정한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소득세’를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붙이는 세금. 소득세는 고대사회로부터 있는 것으로서 세금 가운데서 가장 오랜 형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전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해지고 국가예산수입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들의 축적에 의하여 보장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결정으로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종국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소득세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세금 없는 첫 나라로 되었다.”고 하여 현재는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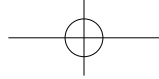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남한에서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



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보건업, 저술가, 작곡가 등 일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의 경우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작물 재배업 소득은 10억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된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세액을 조정한다. 연금소득은 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소득세는 비정기적인 임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의 22%가 원천징수되나 대부분 소득액의 60%가 경비로 처리된다. 퇴직소득세는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로, 종합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할 때에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누진과세로 세율이 매우 높아지므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타인에게 매도, 교환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실현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 이에 속한다. 그 외에 주식, 영업권, 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차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용 레** 은행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동아일보, 2020년 10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소득세에는 협동단체소득세와 주민소득세, 지방자치세가 있었으며 세금부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루진소득세(루진세라고도 한다.)를 적용하였다.《거울 2.0》
- **관련어**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집필자** 이의선



신용

信用,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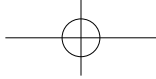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돈을 빌리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그 대가를 갚을 능력. 금융거래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또는 나중에 지급할 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신용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 신용이 높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품거래에 있어서도 당장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결제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신용관리에 소홀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신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비슷한 의미로 ‘신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신용’을 “돈을 꾸어주고 되돌려받거나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파는 과정에 맺어지는 경제관계. 신용은 거래자들 사이에 화폐 또는 물건을 빌려주거나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채권, 채무관계를 반영하는 경제범주이다. 신용은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외상거래로부터 발생하였다. 신용은 반환을 전제로 하여 반환될 때 원금과 함께 리자가 포함된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 개인의 신용도는 ‘상환이력 정보’, ‘현재 부채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형태 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를 신용평가회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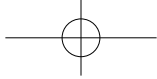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2019년 12월까지 적용하던 신용등급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별 특징)

등급	구분	의미 및 특징
1~2등급	최우량등급	오랜 신용거래 경력,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 보유로 부실화 가능성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등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히 우량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부실화 가능성 낮은 수준
5~6등급	일반등급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이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 일반 수준
7~8등급	주의등급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여 부실화 가능성 높음
9~10등급	위험등급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 보유로 부실화 가능성 매우 높음

출처: 금융감독원

- **용례** {신용이} 나쁘다. / {신용이} 좋다. / 경기 용인시는 8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 상환 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국제뉴스, 2021년 3월 8일》 / 우리나라에서 {신용} 관계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신용에는} 대부, 저금, 보험형태가 있다.《거울 2.0》
- **관련어** 신용도, 신용정보, 신용평가, 신용평가회사, 씨비(CB, Credit Bureau), 신용등급, 신용점수.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나이스지키미, <http://www.credit.co.kr>.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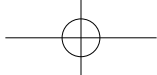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신용관리

信用管理, credit management

신용을 쌓거나 지키기 위한 활동.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용관리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금융활동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도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나 금리, 상환 조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은 국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 부도에 빠질 위험이 크다.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재무적인 융통성이 부족하여 시장의 변동 상황에 취약하고,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대출 기간과 상환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율도 3~4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신용관리를 잘하려면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는 신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수집하여 통계적 처리 과정을 거쳐 점수화한다. 신용카드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만든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여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평가 대상이 되는 개인과의 금융 거래 실적은 물론, 개인이 소속된 직장, 소득 수준, 부채 과다 여부, 연체 이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가 같더라도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과 비슷한 의미로 ‘신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남한 처럼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신용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활동은 늘리고 부정적 요소는 줄여 나가야 한다.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 이자나 원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연체 여부이다. 연체는 짧은 기간이라도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원금을 갚지 못하는 원금 연체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적 요소이다.

둘째, 신용카드와 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주어진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연체 없이 사용하면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대출도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아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제2금융권 대출 보다 제1금융권 대출이, 고금리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이 신용관리에 유리하다.

셋째, 비금융 거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은 물론, 전기, 수도 등 공과금과 통신요금, 국민연금 등의 납부 정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각종 요금의 연체 기록도 신용평가회사에 통보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개인의 신용평가 기준을 종전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여 모든 금융권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이스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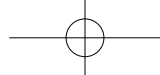
용평가정보 NICE Information Service',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Korea Credit Bureau' 등의 신용평가회사가 1,0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신용점수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자신의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다.

〔 신용평가회사별 신용점수 기준 〕

적용대상 및 관계규정	나이스신용평가 (NICE)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신용카드 발급가능 요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680점 이상	756점 이상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대출가능 요건 (서민금융법)	744점 이하	700점 이하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859점 이하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 행위 금지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724점 이하	655점 이하

출처: 나이스신용평가 및 코리아크레딧뷰 평가기준(2020. 12.)

- **용 레** {신용관리} 필요하다. / {신용관리를} 잘하다. / ○○○ {신용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 대출, 연체 등 복수의 금융기관에 기록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파이낸셜뉴스, 2021년 2월 1일》
- **동의어** 신용도 관리, 신용점수 관리.
- **관련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신용평가회사.
- **출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나이스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
코리아크레딧뷰, <http://www.koreacb.com>.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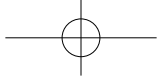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신용카드

信用card, credit card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은 미래의 일정한 날에 결제하게 하는 카드. 구매자가 신용카드회사의 보증으로 현금 지불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정해진 날짜에 신용카드회사로 구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든 카드이다. 신용카드를 소지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회사가 구매자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카드 소지자인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소지자에게 단기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회사는 미리 정해 놓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신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북한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신용카드’를 “신용판매에 리용되는 카드.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품구입이나 실사 등을 할수 있다. 신용카드는 거래자의 예금을 받은 은행 또는 회사가 카드소지자에게 현금 또는 봉사를 제공한 기관들이 대금을 청구하면 반드시 지불한다는것을 담보하는 카드형식의 유가증권이다.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지불을 미루고 무현금으로 결제하며 기업들에는 개인들을 식별하고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신용카드는 대체로 합성수지로 만들어졌으며 상품의 구입이나 봉사받는데 들인 대금을 후에 은행의 예금구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쓰인다.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여 리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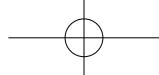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는 결제수단이며 리용의 편리성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 신용카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 산하의 신용카드사나 신용카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카드전업사, 백화점, 외국계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하고 있다. 남한의 신용카드회사가 외국계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카드는 개인 앞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이다. 법인카드는 법인이나 사업자 앞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 법인의 구성원이 사용하고 법인의 계좌에서 결제되는 카드이다.

신용카드회사는 카드 소지자에게 여러 가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리워드를 적립해 주기도 한다. 제공되는 혜택이 많거나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소지자로부터 연회비를 받기도 한다. 신용카드는 장·단기 대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로(장기카드대출)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금리가 매우 높고 이용자의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와 유사하지만 신용카드와는 특성이 다른 지불수단으로 체크카드와 선불카드가 있다. 체크카드는 결제하는 즉시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지급되는 카드이다. 직불카드라고도 한다. 선불카드는 미리 현금을 충전하여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제 금액을 지급하는 카드로, 충전카드라고도 한다. 이 밖에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 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카드로, 요금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져 편리하다. 선불카드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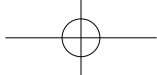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용 레** {신용카드를} 발급받다.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업 카드사를 비롯한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조선비즈, 2020년 12월 30일》 / {신용카드를} 또한 휴대하기 간편하고 리용에서 편리하다.《거울 2.0》 /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해당 나라의 상점과 식당, 철도와 비행장, 체신망 그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봉사를 받을수 있다.《거울 2.0》
- **동의어** 크레딧카드.
- **관련어**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교통카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개인카드, 법인카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박기찬



똑똑한 신용카드 활용법

북향민 K씨는 어느 날 대형 마트를 방문했다가 홍보차 나와 있던 카드사 직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다. 상품권도 주고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사용하면 할인도 된다는 말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북향민 선배도 남한에서 살아가자면 신용카드 한 장쯤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 그 이후 K씨는 신용카드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다. '이용 한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카드사 직원의 말에 나중에 결제 대금이 한꺼번에 통장에서 빠져 나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결국 연체 독촉을 받고서야 덜컥 겁이 난 K씨는 대출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라는 개념이 부족했던 탓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연체와 돌려막기를 반복하던 K씨는 주택 관련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신용점수가 크게 낮아진 것을 알고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었다.

북한에는 신용카드의 개념이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전자 지불체계가 도입되면서 '전성', '나래' 등의 카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이 카드들은 일종의 선불·직불카드로 현금을 계좌나 카드에 미리 충전하여 이용한다. 또한 북한의 은행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업은행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국영 기관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대출 업무를 취급한다. 그렇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신용관리나 신용카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적지 않은 북향민이 고금리의 신용카드 대출을 너무 쉽게 받거나, 결제 대금을 제때 갚지 않아 연체가 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현금 없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일정 기간 뒤에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불 수단이다. 물론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교통비나 통신비를 할인해 주거나 커피숍이나 쇼핑센터에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혜택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카드별 혜택과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하게 파악한 다음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남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편의(便宜)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지불 수단 혹은 거래 실적을 통해 신용을 쌓아 가는 수단인 신용카드는 할부를 통해 결제 금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고, 급한 경우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아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간편하게 결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의 K씨의 사례는 독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K씨처럼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소비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과 달리 소비 행위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체크카드처럼 계좌 잔고가 부족할 경우 결제가 되지 않는 안전장치도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구매의 필요성과 자신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필자 김수연



신용회복제도

信用回復制度, credit recovery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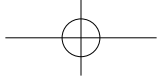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과도한 부채로 파산의 위기에 놓인 사람을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남한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돈을 빌려 쓰기 어려운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를 조정해 주고, 적절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신용회복제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이 확정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금융회사 자체의 신용회복지원 활동 등이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어렵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신용회복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 더 알아보기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법원을 통한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도가 있다. 법원을 통한 신용회복제도 중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갚을 수는 없으나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기대되는 경우, 법원이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개인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며, 재산 보유 및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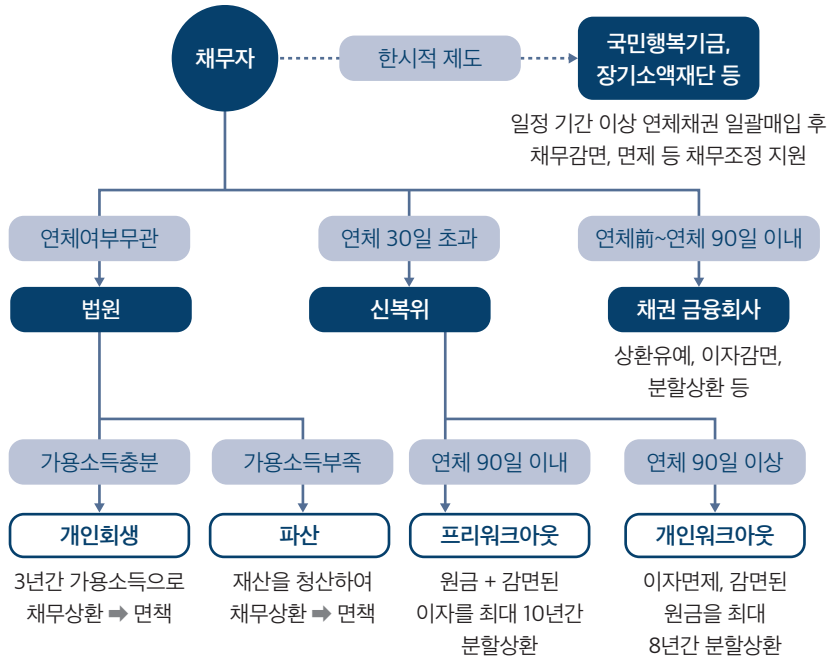


적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독촉 등이 금지된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부채 청산 후 잔여 채무는 면책되지만 파산자는 법률상의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파산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적 목적의 특수법인으로,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개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여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에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금융회사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으나,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채무자의 연체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그 외에 금융회사들도 자체적으로 과다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의 신용 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현황〕



출처: 금융위원회

- **용례**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다. / 개인채무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신용회복제도}는 연체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신복위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였다.〈조선비즈, 2019년 2월 18일〉
- **동의어** 신용회복지원제도.
- **관련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 **출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http://www.fss.or.kr/s133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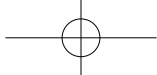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쉬어가기

나의 신용점수는 몇 점일까?

남한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신용점수가 매겨진다.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향민은 본인에게도 신용점수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을 설치해 가입한 다음 안내에 따라 신용점수를 조회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용점수가 조회된다.

북향민들에게 ‘신용’은 낯선 단어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신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믿음’이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신용이 ‘믿음’과 ‘금전적 지불 능력’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과거 전통적인 계획경제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이나 식량을 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며 국가에서 식량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하고 월급이 밀리면서, 이러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북한의 은행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개인끼리 거래하다 보니 고리대가 성행하게 되고, 높은 이자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일도 잦아졌다. 오죽하면 ‘빌리는 사람은 <노력영웅>이고 빌린 돈을 받아내는 사람은 <공화국영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북한의 최고 훈장인 영웅 칭호 가운데 노력영웅이 되기도 몹시 어렵지만, 특히 공화국영웅은 가장 받기 어려운 최고의 훈장이다. 북한에서 공화국영웅의 대부분은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다.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대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이때 신용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나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향민 A씨와 B씨는 운송업에 필요한 대형 트럭을 구매하기 위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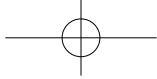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출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연 5%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B씨는 연 15%의 이자를 부담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바로 신용점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남한 사회에 정착한 시기가 같은 하나원 동기지만, 같은 기간의 신용관리는 서로 달랐다.

B씨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본인보다 A씨는 평소 씹씹이도 헤픈 것 같았고 신용카드도 자주 사용한 반면, 본인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면서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은 신용카드에 있다. 무조건 아끼고 저축만 한다고 해서 신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의 일정 범위(30~50%) 내에서 잘 사용하고 결제 대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신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체크카드도 매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넘게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제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될 수 있으면 저축은행이나 카드회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의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단기카드 대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 상환 시에는 대출 기간이 긴 것부터, 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큰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신용점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소액이라도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내에서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은행과 거래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을 파악하기 쉽지 않듯이 은행과의 거래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본인의 지불 능력을 키우고 현금 흐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신용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집필자 현인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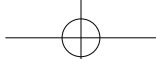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실손의료보험

實損醫療保險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 피보험자가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이므로 소비자가 보험의 가입이나 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 가입 시 약정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비갱신 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질병에 걸릴 위험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3~5년마다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려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정해진다.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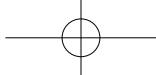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둘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이다. 회사 등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 ‘일반 건강검진비’,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치과, 한방, 향문질환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임신, 출산,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 용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다. /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비싸게 매기고 적게 받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입니다.《JTBC뉴스, 2020년 12월 9일》
- 동의어 의료실비보험.
- 관련어 민영보험.
- 출전 금융감독원(2020),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제4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이조영



여신전문금융회사

與信專門金融會社, credit financ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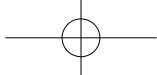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남한에서 예금 업무는 하지 않고 대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금융회사.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에 속한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 신용 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기간이 종료된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리스’와 ‘렌탈’이 있다. 리스는 장기간에 걸쳐 물건을 임대하는 법적 금융 행위로, 리스업은 ‘여신전문업’으로 분류되어 법의 규제를 엄격하게 받는다. 이에 비해 렌탈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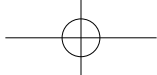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해진 기간 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비금융행위로, ‘임대업’ 혹은 ‘대여업’으로 분류되어 규제가 비교적 적다.

리스로 이용하는 물건에는 자동차, 부동산, 치과 장비 등 고가의 물건들이 많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매달 일정 요금(리스료+이자)을 받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다. 리스 계약이 끝나면 이용하던 자동차를 반납하거나 마음에 들 경우 인수할 수도 있다.

친구나 지인이 차량 리스를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는 대부분 리스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명의를 빌려준 리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명의제공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리스와 비교하여 렌탈은 가격보다는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컴퓨터, 노트북,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 등의 가전제품이 그 대상이 된다.

- **용 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성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서울파이낸스, 2021년 3월 16일》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 **집필자** 이조영



연말정산

年末精算, year-end tax adjustment

근로자가 급여 소득에서 미리 납부한 그해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해 초에 이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일. 국세청이 매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연도 초에 연간 총근로소득에 의해 산출한 최종 소득세와 비교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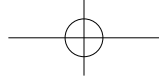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북한에는 남한의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제도'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다시 정산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등 납세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상계하여 정산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비용이 수반됨을 인정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서 그 비용만큼 감면하는 제도이다. 과세표준(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값이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따라 이미 산출된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



공제’,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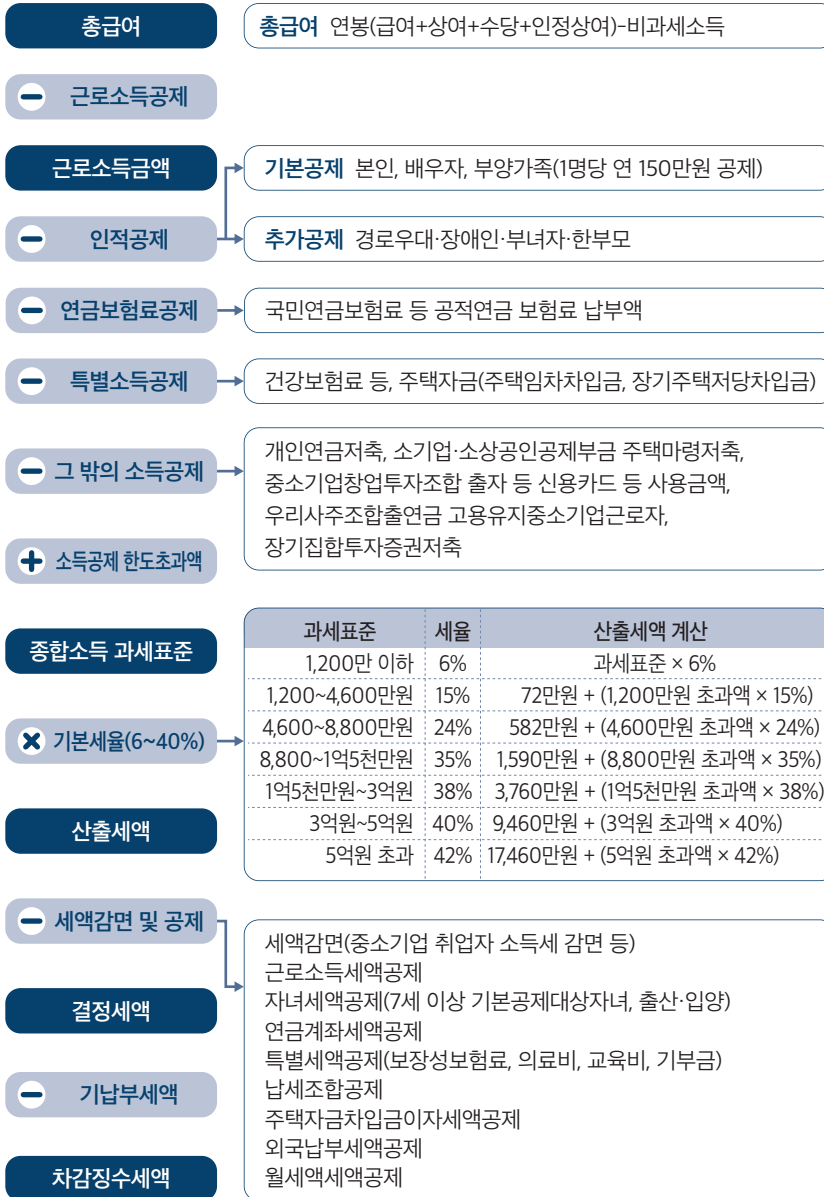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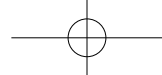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증명자료를 발급기관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국세청에 미리 신고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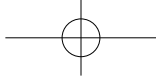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구분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세액공제 항목 〕

구분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월세, 납세조합, 외국납부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2021),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용 레 {연말정산} 신청하다. / 지난해 {연말정산} 조회 결과 직장인 3명 중 2명은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예상액은 평균 70만 2000원 가량으로 조사됐다.《뉴시스, 2021년 1월 26일》 / 국세청이 23일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내놨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뉴시스, 2020년 12월 23일》
- 관련어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 출 전 국세청(2021),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집필자 이익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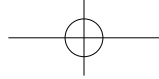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예금자보호제도

預金者保護制度, Depositor Protection System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맡긴 돈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보
 험을 통해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
 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
 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
 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5천만 원 한도에
 서 예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예금자 보호의 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은 동
 일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원리금의 합계액
 이다.

북한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상
 업은행법은 예금자가 지불을 요구할 경우 원리금을 제때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국가에 의한 예금 보호
 장치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은행과 예금자 간의 지불관계에서 예금의 인출
 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일원적 은행 제도 아래 저금소와 채신소, 협동농장의 신용부 등은 조선중
 앙은행의 위임 아래 예금을 취급하므로 암묵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금융시스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영
 향으로 ‘정부나 당의 자금 관리’, ‘기관, 기업소의 업무 지원’ 위주로 운영되는
 까닭에 주민 편의를 우선하지는 않는다. 또한 인출의 불확실성으로 북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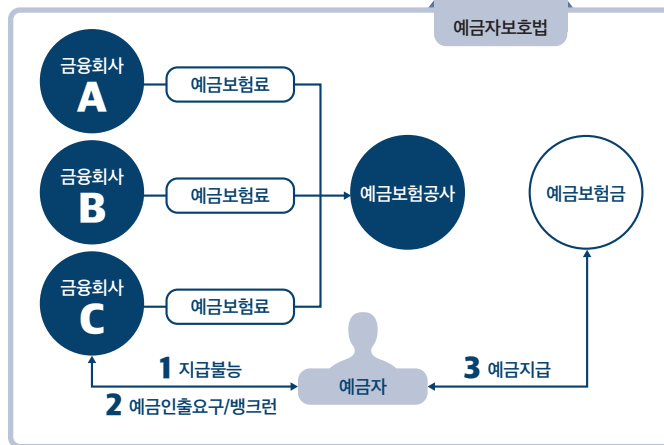


민이 예금거래를 꺼린다는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금 보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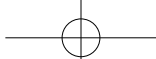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집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이 발생할 수 있다.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 예금보험의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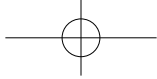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나 적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 보호가 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적립금, 은행의 금전신탁, 발행어음 등도 이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각각의 설립 법률에 따라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수협·축협 지역조합과 산림조합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호된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한다.

- **용 레**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다. /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 전면 개편에 들어가
 기로 하면서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예금
 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받
 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예금
 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고객은 업권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5,000만 원이 한도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1일》 / {예금자보
 호제도는} 은행 파산 시에도 국가가 일정 금액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하여 사람
 들이 은행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뱅크런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
 단한다.《한국경제, 2020년 10월 26일》
- **관련어**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자보
 호준비금, 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료, 예금보험금, 지급불능, 뱅크런.
- **출 전** 김민정·문성민(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BOK경제연구
 2021-6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수원(2021), 「북한의 경제, 금융 인사이트」 VOL II.
- **집필자** 천규승



오픈뱅킹

open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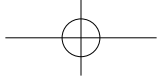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금융기능을 표준화하여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 기관의 결제, 잔액 및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실명 및 송금인 정보 조회, 입금 및 출금 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북한에는 남한의 ‘오픈뱅킹’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남한의 오픈뱅킹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오픈뱅킹 시행 전에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모든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전산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은행과의 호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주관하여 참가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지금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참여를 위하여 ‘오픈뱅킹공동업무’ 서비스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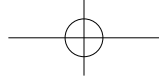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한 업체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송금이나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은행의 플랫



품을 사용하다 보니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픈뱅킹 활용으로 은행과 동일한 금융망을 사용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훨씬 낮아지게 되었다.

한편, 참여 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통합계좌관리와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를 더욱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하나의 금융 앱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용 레**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다. / 은행, 핀테크, 상호금융, 증권사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이달부터 {오픈뱅킹}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연합인포맥스, 2021년 5월 4일》
- **관련어** 이용기관(핀테크기업), 오픈뱅킹센터(금융결제원), 참여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오픈에이피아이(API), 금융공동망.
- **출 전** 금융결제원(2020.7),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금융연구원(2020.7),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2020.7), '오픈뱅킹 세미나 발표자료'.
- **집필자** 이기승



외화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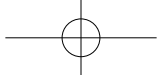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外貨送金, foreign currency remittance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외국의 화폐를 보내는 일. 넓은 의미의 외화송금은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외국 돈을 보내는 경우(은행에서는 ‘당발송금’이라고 한다)와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외국 돈을 보내는 경우(은행에서는 ‘타발송금’이라고 한다)를 포함한다.

남한에서 국내 거주자는 증빙서류 없이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하, 연간 누계 금액 5만 달러 이내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은행을 통한 외화송금에는 국내 송금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중계은행과 수취은행이 순차적으로 관여한다. 국내에 있는 송금은행이 고객의 돈을 외화로 바꾸어 중계은행에 이체하거나 정산하면 중계은행은 다시 수취은행으로 외화를 이체하거나 정산하며, 최종적으로 수취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북한에서도 ‘외화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외화송금’에 대해 “지불인(채무자)이 외화를 멀리 떨어져있는 령수인(채권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내는 행위. 송금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송금환자이며 다른 하나는 시좌돈자리에로의 지출이다. 송금은 또한 보통송금, 전신송금, 보통시좌돈자리불입, 전신시좌돈자리불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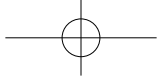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으로 가른다. 송금환자는 령수인이 송금행표 또는 전보송달지구지불은행(피기발은행이라 한다.)에 제시하여 지불받는것이며 시좌돈자리불입은 지불받은것이 아니라 령수인의 예금돈자리에 입금되는것을 말한다. 국가들사이의 대차결제는 외국환자거래로 진행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외화송금이라고 한다. 송금환자는 외국환자은행이 의뢰인(채무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기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전신 또는 우편으로 지불을 지시하거나 행표나 환자수형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진행된다.”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은행 간 해외송금은 스위프트SWIFT라는 국제 금융 통신망을 사용한다. 외화 송금의 거래 과정에서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은행 간 전신문을 주고받는 데 드는 비용인 전신료가 발생하고, 은행 간의 중계 및 전달 서비스 과정에서 송금 수수료, 중계 수수료 및 수취 수수료가 발생한다. 최근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수료는 많이 낮아졌는데, 외국 화폐의 종류, 송금 금액, 그리고 수취인의 소재 국가에 따라 보내는 금액의 약 0.2%에서 1%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은행 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창구거래보다는 모바일 등 인터넷 거래 방식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더 나아가 일반 은행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송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은행은 고객에게 외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외환 영업을 한다. 고객으로부터 살 때의 환율과 고객에게 팔 때의 환율의 차이를 ‘환전수수료’ 또는 ‘환율스프레드’라고 한다. 은행이 환전을 하려는 고객에게 환전수수료 또는 환율스프레드를 할인해 주는 비율을 ‘환전우대율’ 또는 ‘환율우대율’이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율우대율을 높게 적용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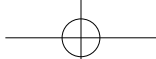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을수록 환전수수료를 절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환율우대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1달러를 1,017.50원에 사야 한다. 하지만, 환율우대율 90%를 적용받는다면 1,001.75원에 살 수 있다. 1달러당 15.75원을 할인받는 셈이 된다.

매매기준율	전신환 / 사실 때	환율우대율 50%	환율우대율 90%
1,000.00	1,017.50	1,008.75	1,001.75

환전이 필요한 이용자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환율우대율을 높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은행 전용 앱을 통해 환전하는 것도 환율우대율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용례** {외화송금율} 하다. / {외화송금}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다. / 미안마 유학생들은 쿠데타 상황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현지 은행 {외화송금} 제한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1년 3월 18일》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율}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헤럴드경제, 2021년 5월 12일》
- **동의어** 해외송금.
- **관련어** 당발송금, 타발송금, 전신료, 외화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환율스프레드, 환전우대율, 환율우대율.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박기찬



우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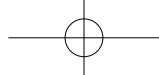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優良株, blue-chip stocks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수익과 배당이 높은 회사의 주식.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사업의 수익성이 높으며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리킨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높고 건실한 대형 우량주를 ‘블루칩 blue chips’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개념의 ‘주식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이 주식 거래를 하지도 않는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주식’에 대해 “주식회사에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자본주의하에서 주식회사에 출자한 자본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조성된 리윤을 배당금의 형태로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이다. 주권이라고도 한다. 주식은 유희화폐자본을 주식회사에 집중시켜 운영하기 위한 자본집중수단이다. 주식은 회사기본규약에 밝혀진 공칭자본범위내에서 발행된다. 주식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으나 주식을 소유하면 주식회사가 얻은 리윤의 일부를 리익배당금의 형태로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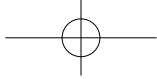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블루칩은 각 업종을 대표하며 업계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회사의 주식으로, 경기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블루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옐로칩 yellow chips 이라고 한다. 옐로칩은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가



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가 우량주를 가리킨다.

우량주의 또 다른 구분으로 ‘가치주’와 ‘배당주’가 있다. 가치주란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으로,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한다. 배당주란 기업의 순이익이나 기업 내부의 유보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으로, 대부분 기업 가치가 뛰어난 우량주이다.

- **용 레** {우량주에} 투자하다. / 이들은 테마주나 바이오주 등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리는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고 장기간 투자가 가능한 {우량주} 위주로 4~5년을 바라보며 투자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뉴스, 2021년 1월 30일》
- **관련어** 블루칩, 옐로칩, 가치주, 배당주.
- **출 전** 우용표(2017),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
한국FPSB(2020), 『투자설계』.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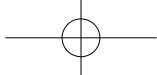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우체국예금·보험

郵遞局預金·保險,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 남한에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로 정해져 있다.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하부 조직인 전국 3,500여 개 우체국 네트워크는 우편 업무와 아울러 예금·보험 업무를 취급한다. 우체국예금이 취급하는 업무는 예금, 카드, 펀드, 환전·송금, 전자금융 등 일반 은행의 서비스와 비슷하다. 우체국 보험도 일반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나 주로 취약 계층 대상의 공적 보험을 취급한다.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전국에 고루 분포한 우체국을 창구로 하고 있어, 농어촌을 비롯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체국을 ‘체신소’라고 한다. 북한의 체신소에서도 ‘송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한에서처럼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는 ‘체신소’를 “대중을 상대하여 편지, 전보, 소포, 송금, 전화와 같은 여러가지 체신사무를 보며 방송의 중계 및 보급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가입 대상은 은행(농협, 수협 및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가지 금융회사이다.

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1인당 5천만 원의 제한 없이 원금과 이자,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 **용 례** {우체국예금·보험의} 가입을 위해 우체국에 들렀다. / 그동안 오픈뱅킹 서비스는 일반은행 등 제1금융권만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출시로 우체국 고객들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우스뱅에서 자유롭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데일리, 2020년 12월 21일》

○ **출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집필자** 이조영



원리금상환

元利金償還,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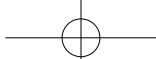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갚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즉 원리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납부하는 상환 방식을 뜻한다.

대출상환 방식에는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등 세 가지가 있다. 만기일시상환은 이자를 주기적으로 갚아 나가되 대출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균등상환은 주기적으로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아울러 원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원리금을 똑같은 금액이 되도록 맞추어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북한에서는 ‘원리금상환’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만기에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대출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도가 만기 이전에 갑자기 하락할 경우 대출금 전체가 연체되거나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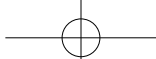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원금균등상환 방식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원금을 주기적으로 만기까지 계



속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렇지만,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갚아야 하는 이자액도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자의 대출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방식이므로 대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똑같은 원금에 이자가 점차 줄어드는 ‘원금균등상환’과 달리, ‘원리금균등상환’은 초기에는 원금은 적게, 이자는 많이 갚다가 뒤로 갈수록 원금은 많이, 이자는 적게 갚는 방식이다.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원리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무 계획을 일관성 있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용례** 대출을 받기 위해 {원리금상환} 방식을 정하다. / ○○○ 교수는 “폐업이 증가하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초기에 버틸 생각으로 빌렸던 사업·생계 자금 대출이 위험(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리금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지연 되더라도 갚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1년 1월 11일》
- **관련어**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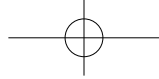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원천징수

源泉徴収, Withholding tax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근로자 혹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자신의 급여, 이자, 배당, 퇴직 소득 등 특정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당해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액의 과부족(過不足) 분을 정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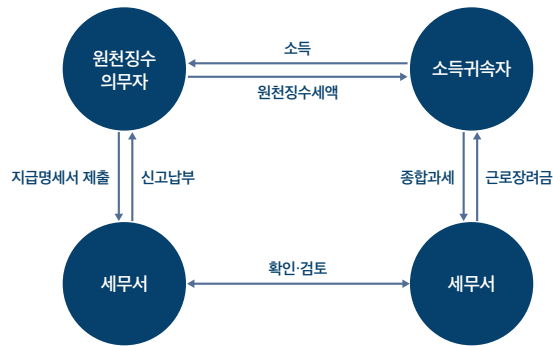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등을 지급할 때 바로 징수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등은 급여 수령 시 소득에 근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는 1974년 4월부터 세금 제도를 폐지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세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천징수 대상은 남한의 임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 가급금, 상금 등이고, 세율은 각 1%(협동단체는 7%)이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일정한 소득(이자, 배당금, 임금, 료금 등)을 지불할 때 지불자가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액을 공제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제도. 자본주의하에서 세금원천으로 되는 소득을 지불해야 할자가 그 소득을 해당한 대상들에 지불할 때 규정된 소득세를 지불액에서 떼내어 소득의 수입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제도이다."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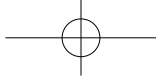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원천징수의 대상은 개별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목은 바뀔 수 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며 납부 세목은 법인세이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하여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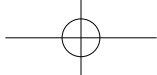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용례** 소득에 {원천징수} 하다. / 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반기별 {원천징수}를 결정했다.《머니투데이, 2020년 7월 24일》 /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 자신이 한 해동안에 얻은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세 제도와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세금징수비용을 줄이며 세금수입을 늘일 목적으로 일련의 소득들에 적용된다.《거울 2.0》
- 관련어** 연말정산, 소득세.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집필자** 이의선



유사수신행위

類似受信行爲,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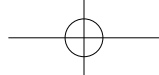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금융업을 하는 경우를 사금융私金融이라고 한다. 사금융 회사들은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권 밖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금융업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고금리 대출, 고배당 빙자 수신 사기 등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중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유사수신행위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둘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이때 부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하여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중도 대출이 약정되어 있는 정기적금 상품을 말한다.

셋째,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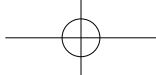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넷째,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 볼 것을 권고한다. 유사수신업체의 주요 행태로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에프엑스마진거래FX margin去來나 핀테크fintech 등 최신의 금융 기법을 사칭하는 경우’,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글로벌 기업을 사칭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사칭하는 경우’, ‘신기술 보유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여기서 에프엑스마진거래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외환거래를 말하며,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후원,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계층, 노령층 등 금융 생활 취약 계층은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기 쉽다. 은행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사설 금융업자가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자금을 맡기라고 권유할 때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용례** {유사수신행위에} 유의하다. /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신고·상담이 전년대비 41.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유혹해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11월 23일》
- **관련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 다단계금융사기.
- **출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5호, 2010. 2. 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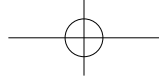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은행

銀行, bank

예금, 대출, 어음 할인 및 증권 인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고객이 맡긴 돈과 유가증권 또는 채무 증서 발행으로 획득한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고, 송금·환전·어음거래·증권 인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남한에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중앙은행)과 특수은행, 그리고 일반 은행이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는 ‘은행’을 “자금을 융통하는 기관. 곧 놓고있는 화폐자금을 걷어들여 수요자들에게 꾸어주며 자금공급과 결제 및 현금출납 같은 것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은행의 성격과 역할은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사회적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국 가적인 계산, 자금공급과 재정적인 통계를 하며 국고를 지키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은행’은 국가 통제 하에 주로 기관이나 단체가 이용한다. 한편, 북한에서 남한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는 ‘저금소’가 있다. ‘저금소’는 은행에 속해 있으면서 예금 사업을 맡아 하는 신용기관이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저금소’를 “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 …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 81호 ‘저금소설치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저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금소들이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 조직되었다. 저금소는 인민들이 자기의 여유돈을 손쉽게 저금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 쓸수 있게 하는 금고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저금소는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절약저축선전의 거



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나라에서 저금소는 중앙은행 시, 군(구역) 지점에 직속하며 그의 지도와 통제밑에 사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저금소’가 남한의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저금소는 저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 중앙은행 시군 지점에 소속되어 통제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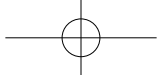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남한 은행의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앙은행	한국은행(발권은행)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일반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국계 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인터넷 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HSBC은행 서울지점 등 36개

※ 한국은행의 은행 분류에 근거하여 집필진이 구성함

➤ 더 알아보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남한의 중앙은행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으며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며, 국내외 경제·금융 조사, 금융제도의 건전성 관리,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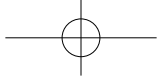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도 관리, 경제 통계 산출, 외환보유액 관리,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남한의 화폐인 원화의 발권은행이기도 하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남한의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신용 사업 부문, 수협중앙회 신용 사업 부문이 있다. 국책은행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은행으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로, 수신·여신 업무, 지급결제 업무 등의 고유 업무를 비롯해 환업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 업무를 취급한다. 일반은행에는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한 시중은행,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에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지방은행, 그리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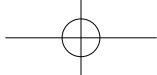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은 조선중앙은행이다.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의 화폐를 찍어 내는 중앙은행이자 유일한 상업은행으로, 보통저금, 준비저금, 정액저금, 추첨제저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저금소는 은행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가져온 귀금속이나 외화 등을 텔레비전이나 재봉틀, 각종 생필품으로 교환해주는 현물 환전소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들이 저금보다는 이러한 현물교환을 선호하면서 북한 당국의 강제 저축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 **용례** {은행에} 돈을 맡기다. / {은행에서} 돈을 빌리다. /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확산 일로인 '디지털금융'은 전통 {은행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은} 물론 총자산이 수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은행조차}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강조하며 업무·서비스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한경비즈니스, 2021년 1월 24일》/ 사회주의 {은행이} 노는 중요한 역할은 현금류통과 무현금결제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나라의 화폐류통을 공고히 하며 생산물의 계획적류통을 원활히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 {은행은} 또한 국고를 관리하면서 국가예산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집행하고 자금공급과 대부, 저금, 보험 등의 여러가지 금융적공간들의 리용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논다.《거울 2.0》/ 래일 아침에 {저금소에서} 텔레비값을 찾아다 주십시오.《리정숙(1975), 지평선》 [북]

- **관련어** 중앙은행, 국책은행, 발권은행, 저금소.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2009), '아이엠에프(IMF) 이후 은행 인수·합병의 역사', 메리츠증권.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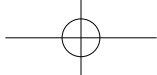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쉬어가기

은행에 맡겨 둔 내 돈, 괜찮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저금소'라는 곳이다. 남한의 은행 지점과 비슷한 저금소는 일반적으로 주민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저금소에 가 본 기억이 있는 북향민 B씨에 따르면 북한의 저금소는 마치 탈옥이 절대 불가능한 감옥같이 으스스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건물 외부는 창문마다 쇠창살을 덧대어 놓았고 내부에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난 창구가 한두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B씨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저금소를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금소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저금소를 많이 이용했다. 특히 B씨의 어머니는 '모범 저축 세대'에 선정될 정도로 저금소를 애용했다고 한다. B씨는 나이가 어려 '모범 저축 세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범'이라는 단어는 마냥 좋았다고 한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좋았고, 어머니를 통해 '모범 저축 세대'에 선정되면 저금소에 돈을 맡겼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7남매를 돌보느라 가난한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지만, B씨의 어머니는 매달 저금소에 들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저금소 출입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저금소 직원과 옥신각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연인즉 저금소에 돈이 없어서 그동안 힘들게 저축해 놓은 돈을 한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B씨는 북한의 은행 지점 격인 저금소가 몰락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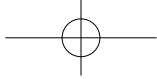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B씨는 남한에 정착해 살면서도 은행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은행이 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하지? B씨는 남한 입국 초기에 정부에서 받은 정착지원금을 은행에 넣어 두었는데 그 돈이 북한에서처럼 무용지물이 될까 두려웠다. 전 부 현금으로 찾아서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 둘 생각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은행을 믿지 못하던 B씨는 금융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의 맨 뒷면을 보면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망해도 5,000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다.

북한에도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면 사람들이 저금을 꺼리지 않을 것이고, B씨의 어머니처럼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공시하고 추천 상품을 늘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집필자 김경산





은행거래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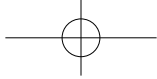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銀行去來app, bank transaction app

모바일 기기에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모바일 기기에서 모바일뱅킹을 할 때 필요한 앱(application)을 가리킨다. 은행거래 앱은 ‘뱅킹 앱(banking app)’ 또는 ‘뱅킹 어플’로 불리기도 하는데,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계에서 은행거래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앱이 있다. 2018년에 평양정보기술국에서 개발한, 모바일 결제 전용 어플인 ‘울림’이 그것이다. ‘울림’은 모바일 결제뿐만 아니라 ‘카드와 카드 간 송금(계좌이체)’, ‘잔고 조회’, ‘카드요금 충전’, ‘다른 전화 사용자로의 요금 이체’, ‘전자상점 결제’까지 가능하며,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더 알아보기

은행 업계는 은행거래 앱을 더욱 발전시킨 오픈뱅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하나의 모바일 은행거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가리킨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거래 앱에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은행거래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은행거래 앱 서비스 】

구분	앱	주요 서비스
KB 국민은행	스타뱅킹	간편신규 서비스(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상담한 상품을 모바일로 가입), KB스타샷(카메라 촬영으로 공과금 납부)
	리브(Liiv)	뱅크페이(2017년 중순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쏠(SOL)	쏠(SOL)편한 신용대출, 쏠메이트(챗봇), 쏠리치(자산관리)
하나은행	하나원큐(1Q)	무방문 신용대출 프로세스
우리은행	원(WON)뱅킹	소리(음성인식 인공지능뱅킹), 위비봇(인공지능 상담 시스템)
	위비뱅크 (WiBeeBank)	위비페이(수수료 없는 간편송금 서비스), 위비환전(최고 90% 환율우대 혜택), 머니그램 송금(200개국 해외송금)
NH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디지털 직장인 신용대출 통합 추천 프로세스' 구축(대출 심사부터 상품 추천까지 한 번에 가능), 음성 통합 검색 및 상담톡(음성으로 쉽게 스마트뱅킹 메뉴와 콘텐츠 검색 가능, 24시간 상담톡)

- **용 레** {은행거래 앱을} 설치하다. / 은행권에서 {은행거래 앱을} 생활금융서비스로 진화시키는 것은 {은행거래 앱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디지털데일리, 2021년 3월》
- **동의어** 뱅킹앱, 뱅킹어플.
- **관련어** 플랫폼, 인터넷전문은행, 오픈뱅킹, 통합앱.
- **출 전** HelloT(2015.3.), '스마트폰 등장 이전 금융 서비스 아이씨티(ICT) 활용'.
HelloT(2015.3.),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글로벌 결제시스템 경쟁'.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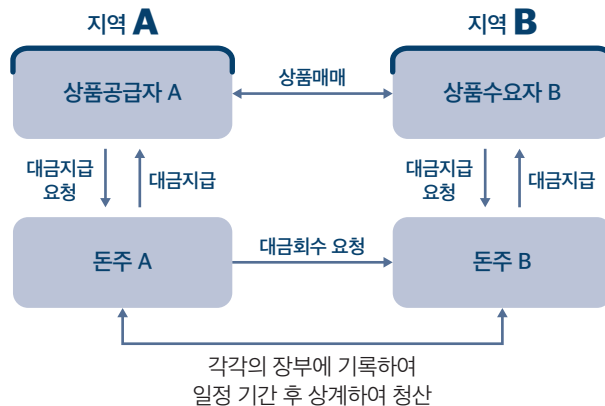


이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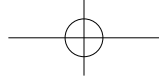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移管집, private remittance house **북**

북한에서 돈을 보내거나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기능을 하는 비공식 거래소. 사채업자인 돈주가 운영하는데, 국내외 송금, 환전, 대출, 투자 등의 비공식 자금용 기능을 수행한다. 송금 방식은 남한의 은행과 유사하다. A 지역의 송금인이 B 지역의 수취인에게 돈을 보내고자 할 때, 송금인이 A 지역의 이관집에 찾아가 송금을 의뢰하면 B 지역의 이관집이 수취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두 이관집 사이에서는 장부상으로 상호 정산하는 방식이다. 송금인은 수취인과 전화로 이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집을 통한 송금 수수료는 1% 수준이라고 하며, 현금을 인편으로 보내는 경우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돈주를 매개로 하는 비공식 청산결제방식의 현금결제 흐름 〉



출처: 박해석·이병윤(2019). 「북한 금융의 주요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KIF 금융분석리포트 2019-12호.



✦ 더 알아보기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이나 대외무역으로 자금을 축적한 돈주들이 상업은행이나 공금융이 수행하지 못하는 자금 중개 및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사금융은 비공식 영역은 물론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까지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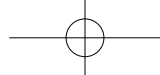
최근 북한 당국은 ‘나래카드’, ‘전성카드’ 등의 전자화폐 사용과 은행 계좌 기반의 송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수료가 낮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민간 자금을 상업은행 등의 공식 금융시스템으로 흡수하여 화폐의 순환을 정상화함으로써 국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은 공금융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적 영역에 노출되기 꺼리는 상거래 및 금융거래로 인하여 이관집의 이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금융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금 공여 및 투자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돈주의 역할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용례** {이관집은} 사설 자금 이체 업소이다. /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돈이 유통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전달하는 곳은 은행이 아닌 {이관집}이라고 불리는 송금 전문 개인은행이다.《동아닷컴, 2018년 11월 21일》

● **관련어** 돈주, 사금융.

● **출전** 김영희(2015),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월간 북한 527호.
박해식·이병윤(2019), 「북한금융의 주요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KIF 금융분석리포트 2019-12호.
황수민·양문수(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6-1호.

● **집필자** 박기찬



인터넷뱅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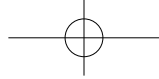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internet banking

인터넷을 통해 입출금 등 은행 관련 업무를 보는 일, 또는 그러한 서비스.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없이 인터넷에 연결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나,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전화용 모뎀을 갖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였기 때문에 ‘피시뱅킹 PC Banking’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초고속인터넷망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피시 PC의 전화용 모뎀에 의존한 문자 데이터 중심의 금융거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시뱅킹’이라는 용어 대신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금융 서비스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인터넷은행 업무’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인터넷은행’을 “은행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 1990년대에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을 리용하는 전자은행 봉사가 제공되었다. 인터넷의 홈페이지상에 은행기능이 설정되고 개인용 컴퓨터의 표시장치에 은행창구가 묘사되며 마우스조작 등에 의하여 잔고조회, 공금지불과 같은 은행봉사가 제공된다.”고 뜻풀이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최근 남한의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은 간단한 금융 업무는 창구나 자동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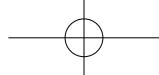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기CD/ATM를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남한의 입출금 및 자금 이체 거래의 64.3%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은행의 금융 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 처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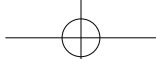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건수 기준(단위 : %)					
구분	창구	자동화기기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전체
2018년 6월	8.8	34.3	7.5	49.4	100.0
12월	8.8	30.2	7.9	53.2	100.0
2019년 6월	7.7	28.9	6.8	56.6	100.0
12월	7.9	26.4	6.3	59.3	100.0
2020년 6월	7.4	22.7	5.6	64.3	100.0

출처: 한국은행(2020.9.), '2020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있다. 즉, “인터넷은행에는 영업거점으로 본점만 있고 지점망이 없다. 인터넷은행을 리용하면 손님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각종 금융봉사를 받을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지점망과 같은 물리적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종업원수를 극력 줄일수 있고 건물유지비도 필요없는 등 관리비용을 최대한으로 절약할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각종 금융봉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매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세분화된 금융봉사도 제공할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개인비밀보장과 전자인증에 의한 담보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용 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 서비스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2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한경비즈니스, 2021년 5월 10일》 /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내 금융기관을 사칭한 해커 조직이 가짜 {인터넷뱅킹} 앱을 통해 4만여 대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2021년 3월 6일》
- **관련어** 모바일뱅킹,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자동화기기(CD/ATM), 텔레뱅킹.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한국은행(2020.9.), ‘2020년 상반기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 **집필자** 이기송



인터넷전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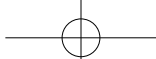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internet 專門銀行, internet primary bank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019년에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금융 산업에 창의적인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핀테크 fintech 혁신의 흐름 속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현재 남한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북한에는 ‘인터넷은행’이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인터넷은행’을 “은행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 1990년대에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을 리용하는 전자은행봉사가 제공되었다. 인터넷의 홈페이지상에 은행기능이 설정되고 개인용컴퓨터의 표시장치에 은행창구가 묘사되며 마우스조작 등에 의하여 잔고조회, 공금지불과 같은 은행봉사가 제공된다.”고 뜻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은행’은 영업 거점으로 본점만 있고 지점망이 없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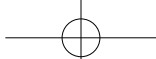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여부는 전자금융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존의 은행들보다 얼마나 차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대면 금



용 영업을 지속하면서도 양호한 여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 앱에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등 발 빠른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점포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들과 경쟁하여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점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 신용도의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영업 활동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은행에 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과 빠른 대출 절차, 높은 수준의 대출 한도 등에서 양호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 **용 레**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늘고 있다. / 금융 당국이 조만간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나선다.《아시아경제, 2021년 6월 29일》/ 간편 송금 앱으로 출발한 토스의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재편된 경쟁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한경비즈니스, 2021년 5월 12일》
- **관련어**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2017), 『거울2.0』
김대원(2020),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성과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8-2호.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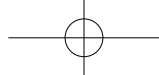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자동차보험

自動車保險,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드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용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소유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과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의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그 손해 배상에 대한 담보로 가입하며,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 후유 장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천만 원이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로 가입하며 보상 한도는 최소 2천만 원 이상이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의보험은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대인배상과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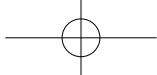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자동차보험’을 “자동차와 관련하여 생



기는 여러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리 용하는 과정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자동차차체와 피보험자 가 제3자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거울 2.0》(2017)에서는 보험 대상과 보험 가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보험대상에는 화물차, 버스, 특수차, 승용차들이 속하며 움직일수 없는 차와 가격을 평가할수 없는 차, 사용년한(기관사용년한을 의미함)이 지나간 차들 은 제외한다. 자동차보험금액은 보험가격에 기초하여 정하며 장부가격 또는 자동차의 실제가치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금액을 장부가격으로 설정하 면 피보험자는 실제가치로 설정하는 경우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며 보험기관도 보상금을 지불할 때 자동차의 실제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책임지 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의무보험으로 적용하고있는 자동차보험금액은 장부 가격으로 하며 보험가격과 일치시킨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자동차 들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시초가격 또는 평가된 가격으로 정할수 있다. 피보 험자는 보험기관이 제정한 보험계약신청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험기관 에 제출하며 보험기관은 그 문건을 검토하고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증권 을 발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할인할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할인 할증제도란 사고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 위험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가입자 간의 위험 전가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일정 기간의 사고 이력 을 평가하여 사고를 낸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가입자 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결국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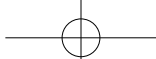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 본인의 손해와 상해, 사망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민간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한다. 즉,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이 드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용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다. / {자동차보험에} '가족 한정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제, 자매, 남매는 당연히 내 가족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범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과 형제자매 한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브릿지경제, 2021년 2월 13일》 / {자동차보험} 증권은 계약 단위 또는 자동차별로 발급하며 보험된 자동차를 다른 기관 또는 사람에게 팔았을 때에는 보험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자동차의 부분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가동할수 있는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든 수리비 또는 교체한 부분품의 값을 보상한다.《거울 2.0》

○ 관련어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운전자보험, 임의보험, 종합보험.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용어, <http://www.knia.or.kr/howtouse/dictionary>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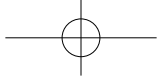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자동화기기

自動化機器, automation devices

입·출금, 이체, 통장 정리, 공과금 수납 등 은행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 자동화기기는 은행원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밤이나 새벽 시간, 주말 등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나 은행 점포가 없는 곳에서 은행 역할을 대신한다.

남한에서 자동화기기에는 현금인출기 Cash Dispenser: 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 Automated Teller Machine: ATM가 있다. 현금인출기 CD는 현금 출금, 계좌 이체, 잔액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입금 기능은 없다. 이에 비해 현금자동입출금기 ATM는 입·출금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더 제공한다.

북한에서도 자동화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자동현금출납기’이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자동현금출납기’를 “현금의 입금, 출금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금융기관의 손님봉사용의 다기능말단장치. 쉐터에 있는 주컴퓨터와 접속되며 사무부담과 경영비를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손님이 기다림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은행이나 우편국, 소비자금융기관에는 물론 최근에는 상점이나 거리의 ATM매점, 무인상점 등에 설치하고 있다. 일상창구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며 영업시간이외의 봉사도 ATM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정부 집중형 재래 금융 인프라를 정보기술 IT 기반 전자금융 인프라로 대거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평양과 원산 등 주요 거점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자동현금출납기’(현금인출기 CD)를 대거 설치하는 등 비대면 금융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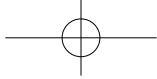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나래카드 등 카드 사용 확대, 울림 등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 모든 전자 결제가 가능한 쇼핑몰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자동화기기는 현금 출금 기능만 갖춘 현금인출기 CD에서 입금, 신용카드 및 일부 선불카드 업무, 공과금 처리, 통장 정리 등이 가능한 현금자동입출금기 ATM로 발전했다. 그렇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 ATM는 은행 직원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상품의 신규 가입, 통장 이월, 현금카드 발급, 사고 접수·해제,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업무 중 상당수는 개인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출금 수수료는 건당 700~1,000원 선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모든 은행 지점과 일부 편의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입·출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의 디지털 경쟁은 고기능 자동화기기로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수를 줄이고 예·적금 가입, 카드 발급 등 창구에서 이루어지던 업무까지 가능한 스마트 텔러 머신 Smart Teller Machine: STM을 배치해 지점 운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에스티엠 STM은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에 은행 창구 업무 기능이 더해진 고기능 자동화기기로, 바이오인증을 통해 영업점 창구 업무를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무인 채널이다. 생체인증을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발급,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ne Time Password: OTP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모바일 금융 거래 활성화로 인해 은행의 자동화기기 설



치 대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대수는 2013년에 7만 100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5만 5천8백대까지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운영비용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화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도 꾸준히 줄고 있다. 현금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금융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용 레** 은행 영업점에 {자동화기기} 설치하다. /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아주경제, 2021년 2월 10일》 / 앞으로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려면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점포를 없애는 대신 {자동화기기(ATM)}나 제휴 창구뿐 아니라 정기 이동점포,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보다 다양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서울경제, 2021년 2월 9일》
- **관련어** 자동현금출납기, 현금인출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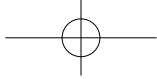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재무설계

財務設計, Financial Planning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을 조절하고, 노후 생활까지 대비한 재무 목표를 세워 이에 맞추어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 재무설계란 개인이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현재와 미래의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개인의 재무 목표는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 또는 개인의 가치나 신념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재무설계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장·단기 목표를 끊임없이 수정·보완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계 구성원의 변화,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은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생애 전반의 재무설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재무설계는 우선 개인과 가계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소비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또한 재무설계는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득 증가에 따른 잉여소득 관리도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는 남한의 ‘재무설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재무설계의 이론적 근거는 경제학의 소비함수 이론인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이다. 생애주기가설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앤도(A. Ando)와 모딜리아니(F. Modigliani) 등에 의해 제창된 소비이론으로, 생애주기 전반의 소비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모두 더한 생애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초년기에는 소득수준이 소비보다 적고 중년기에는 소득수준이 소비보다 많게 되며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수준이 소비에 못 미치게 되므로, 중년기의 잉여 자금으로 초년기에 빌려 쓴 돈을 갚고 나아가 노년기를 위해 축적함으로써 소비 수준을 평탄하게 다듬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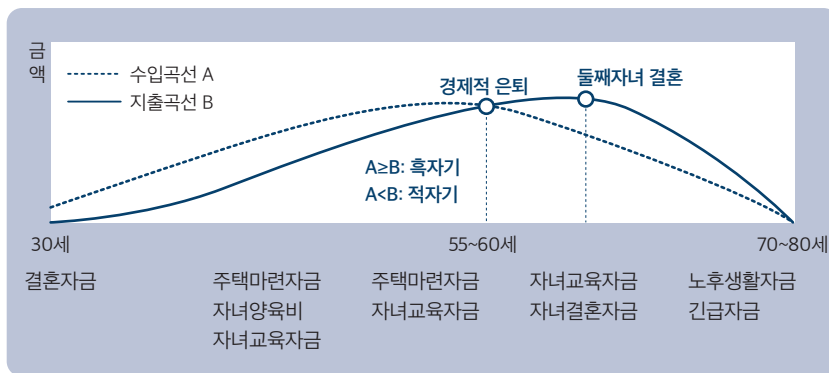
재무설계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장·단기 재무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설정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단계는 개인 및 가족의 특성과 재무적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의 과정이다. 3단계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각 재무목표별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 마련 수단을 결정한다. 5단계는 실행 및 점검의 단계이다. 계획된 재무설계안을 실행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해 나간다.

재무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재무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라고 한다. 재무설계사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금융전문가이다. 해외에서는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자문료를 받는 금융투자 자문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설계사가 자문료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설계사의 자문 내용이 금융상품 마케팅을 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무설계사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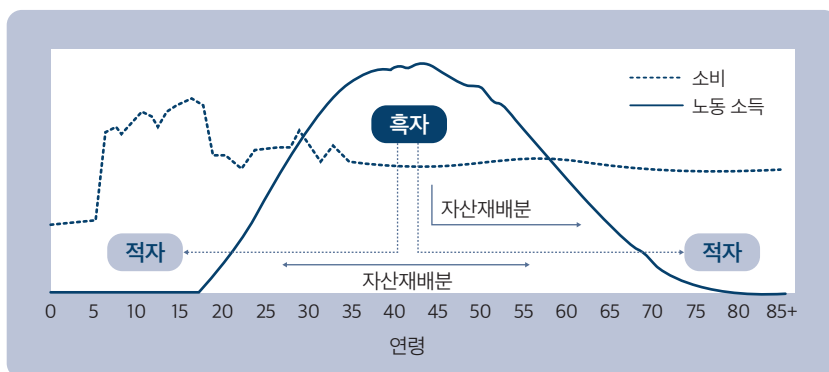
칭하는 사람 중에는 보험이나 투자상품의 판매원이거나 전문 지식 없이 고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무자격자들이 있으니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재무설계사인지 잘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설계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국내 자격증인 AFPK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와 국제자격증인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산관리사은행FP, 종합자산관리사IFP; Insurance Financial Planner, 부동산자산관리사CPM; Certified Property Manager 등이 있다.

〔 생애주기 그래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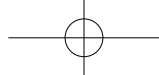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2008), 『즐거움 금융교실』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팀,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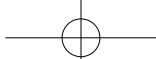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개인 생애주기 적자 및 경제적 자원흐름 예시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0.12.7), '2017년 국민이전계정'



- **용 레** {재무설계틀} 하다. / 이 프로그램은 이 업체 소속 직원들이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 {재무설계}·보험 상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마케팅비 분담금 명목으로 건당 7만~8만원에 판매했다.《미디어오늘, 2020년 11월 1일》
- **관련어** 생애주기, 재무설계사.
- **출 전** O'Rand, A, & Krecker, M. (1990). Concepts of the Life Cycle: Their History, Meanings, and Us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금융감독원(2008), 『즐거운 금융교실』,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팀.
문정숙 외(2010), 『소비자경제학』, 교문사.
통계청 보도자료(2020.12.7.), '2017년 국민이전계정'.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 **집필자** 천규승



재산세

財産稅, Property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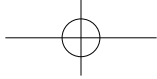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매년 9월 부과하며, 주택 분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주택에 속해있는 토지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건축물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매년 7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치성 재산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 중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골프장, 주택 중에서는 별장이나 고급 주택의 세율이 높으며, 선박의 경우에도 요트, 크루저 등 사치성 선박의 과세율이 높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 대상을 개인별로 주택,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가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쓰이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거울 2.0》(2017)에는 '재산세'를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 또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 더 알아보기

재산세 과세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유형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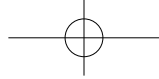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그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조세와 복지 수준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으로, 행정 목적의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대표성 있는 토지의 평균 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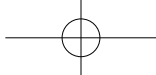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2021년 2월 현재)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용 레** {재산세를} 납부하다. /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7월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한국경제, 2020년 7월 14일》 / {재산세} 감면 대상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에서 59만여 세대가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YTN, 2021년 5월 20》 / {재산세에는} 이밖에 개별적인 자본 또는 재산의 특수한 조건 또는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증가세 등이 있다.《거울 2.0》



- **관련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집필자** 이익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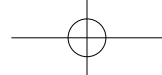
재정상태표

財政狀態表,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북한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회계 문건. 일정한 시점에서의 기업 자금 상태를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상호 비교하는 대차대조표로서, 북한의 기업 회계결산서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이다.

북한의 『경제사전2』(1985)에서는 재정상태표를 ‘기업소의 재정 상태를 일정한 날자 현재로 경영 재산과 자금 원천의 호상 련관 속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재정부기 결산의 기본문건’으로 정의하면서, “결산 기간 기업소의 자금 리용 정형과 재정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소에 대한 실무적 지도와 통제의 도구로 리용되며, 작성 시기에 따라 ‘월 재정상태표’, ‘분기 및 상반년 재정상태표’, ‘년 재정상태표’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재정상태표는 회계 결산 기간의 기업 재산 및 자금 원천의 구성과 구조, 경영활동에 대한 자금 보장과 그 재정적 결과, 채권채무관계, 지불능력 등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북한에서의 경영 회계 결산은 당국이 미리 정해 놓은 기업 재정계획 수행 결과를 회계 자료에 기초하여 확인하여 검토·심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국가가 수립한 계획 하에 국가로부터 받은 경영자금을 어떻게 집행하여 수익을 발생시켰는지 결산하고, 경영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국가에 환원하는 과정을 확정 및 심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영회계결산서의 특징은 재정계획과 실적으로 구성된다. 이는 북한의 회계



체계가 국가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관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한에서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의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행정서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순자산을 산출하기 위한 정부 회계 장부이다.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투자 자산, 토지 및 건물 등의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보증금이나 무형자산 등 비용으로서의 유동자산이 포함되며, 부채에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기타 유동부채가 포함된다.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산출한다. 남한에서 동일한 성격의 기업회계 장부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 더 알아보기

남한의 경우 재정 public finance은 정부 부문의 경제 활동을 의미하나, 북한에서는 국가 주도로 수립한 기업의 생산 계획을 민간이 수행하는 사회주의적 기업관을 반영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까지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북한에서는 경제개방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전까지 ‘회계’보다는 ‘부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2003년의 ‘회계법’ 제정 이후에는 기업 결산에 관한 시각이 관리 회계적 의미의 부기 book-keeping에서 재무 회계적 의미의 회계 accounting로 변화되었다.

북한에서 회계 결산 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는 재정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인데, 이 두 표는 부표로 분석 결과를 첨부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한 기간 경영활동의 결과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종합하고 이를 대조하여 손익을 확정하는 표이다.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남한의 '총계정원장'에 해당하는 '종합계시원장'에 회계계정인 '회계계산자리'의 잔고를 올리는 방법과 가감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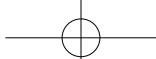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남북 회계 용어 비교표 〕

남한말	회계	차변	
북한말	회계(2002년 이전의 재정부기, 부기계산)	차방, 왼쪽(1970년대의 정방)	
남한말	대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북한말	대방, 오른쪽(1970년대의 부방)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
남한말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잔액
북한말	시산표	종합계산자리 유동고 일람표	잔고
남한말	(총)분개장	총계정 원장	현금흐름표
북한말	분기 일기장	종합계시원장	현금유동표
남한말	자본	부채	자산
북한말	자본	부채	재산
남한말	지출, 비용	이익	결산
북한말	수입	이윤	결산, 총화
남한말	계정, 계정과목	이연자산	어음
북한말	계시, 계산자리	다음결산기비용	수형, 어음

- **용 레** {재정상태표를} 제출하다. / 외국 투자기업은 무역은행, 외화관리기관이 승인한 은행에 구좌를 설치, 모든 거래를 이 구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외화이용기관 등은 분기별 연간별로 외화 {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토록 해 엄하게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1993년 10월》
- **동어어** 재정균형표(북한어), 재무상태표(남한어), 대차대조표.
- **관련어** 회계결산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손희두(2005),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윤성만·김미옥·정형록·전용욱(2020), 「북한의 경영회계결산」, 회계저널 29-3.
최상문(1995), 「북한의 회계제도」, 민족문제논총 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 **집필자** 이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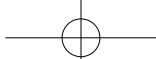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재정총화

財政總和, system of financial summing up 

북한의 각 생산 단위가 주, 월, 분기, 연간 등 일정 기간에 수행한 재정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한 행위. 생산 단위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작업반 단위를 의미한다. 재정총화제는 명목상 과학적·합리적 경영 및 실리를 추구하려는 관리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기업 재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각 생산 단위의 수입과 지출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연계되는 재정적 한계를 지닌다. 각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지출이 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출 초과와 고질적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를 ‘연성예산제약’이라 한다. 연성예산제약은 각 경제주체의 비효율적 지출로 재정적자가 나타나더라도 국가가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기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으로 유발되는 재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총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더 나아가 ‘작업반 단위에서 생산자 대중 자신이 매일 그날에 진행한 생산 결과를 생산관리와 재정관리 정형과 맞물려 총화하는 대중적 기업 관리제도’로서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는 사회주의 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비효율적 경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의 기본 조직인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등의 각 작업반이 매일 생산 및 예산 집행 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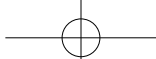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자체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북한의 『경제사전2』(1985)에서는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모임은 하루 작업이 끝난 다음 짧은 시간에 실속 있게 가져야 하며 생산 및 절약 과제 수행정형을 중심에 놓고 사회정치적인 평가사업과 함께 경제적 평가 사업을 공정하게 잘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총화의 주요 평가 내용은 생산원가 절감, 적절한 원가계획 수립 및 절약 과제 부여 등 합리적 기업 운영에 대한 것으로, 작업반장이 보고하고 부문별 근로자가 토론한 후 회의를 결속하거나, 부문별 담당원이 보고하고 회의를 결속하는 방법, 작업반장이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부문원의 의견을 받아 회의를 결속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 더 알아보기

재정총화는 생활총화에서 파생된 것이다.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이 당이나 근로단체 등의 소속 조직에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총화는 전체를 한데 모아서 평가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2학년 이상의 북한 주민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한다.

조선노동당 당원은 소속 당세포, 비당원인 경우 청년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초급단체, 전업주부는 민주여성동맹 초급단체, 직장인은 직업동맹 초급단체, 농민들은 농업근로자동맹 초급단체 등 자신의 소속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해야 한다. 생활총화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자신,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용 레** 일 생산 및 {재정총화률} 강화하다. / 그는 “이번 {재정총화에서} 일부 돈주, 기관 기업소 책임자, 재포(재일교포) 또는 화교가 공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표창을 주면서 교양하는 방법으로 공채 발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제기됐다”고 전했다.《데일리NK, 2020년 5월 27일》 / {재정총화는} 사회주의기업소재정관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재정계획화의 구성부분의 하나이다.《거울 2.0》 / {재정총화는}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돈을 번것은 얼마이고 쓴것은 얼마인데 국가에 리익을 준것은 얼마이고 손실을 준것은 얼마 이라는것을 분석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정예산집행에서 나타난 우결함과 그 원인을 밝히며 개선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수 있게 한다.《거울 2.0》

○ **관련어** 생활총화, 총화.

○ **출 전** 고일동(2004),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6-9호.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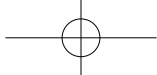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북한지식사전 WikiDOK, <http://ko.nkinfo.wikidok.net>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통일부(2000),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제시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주간북한동향 제490호.

○ **집필자** 천규승



저금대리소

貯金代理所, savings agency **북**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의 저금 업무를 대리하는 단위 조직. 저금대리소는 은행 지점, 저금소, 체신저금기관 등이 없는 지역의 기관,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저금 업무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저금 취급 단위로서 기관, 기업소의 재정부기일군(재무회계 담당자)이 저금 업무를 겸임한다. 저금대리소는 해당 기관·기업소 종업원들에게 북한 당국의 저금 정책과 저금의 의의에 대해 알리는 금융교육 업무도 수행한다. 저금사업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국이 정한 규정과 규범에 맞게 저금업무를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기본 소임으로 한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저금대리소’를 “중앙은행의 저금업무를 대리로 맡아보는 저금취급단위. 저금대리소는 은행지점, 저금소, 체신저금기관이 없는 일부 지역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둔다. 저금대리소일군은 해당 기관, 기업소의 재정회계일군이 겸임하는 원칙에서 중앙은행의 저금업무를 대리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저금대리소제도는 1962년 2월에 나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조선중앙은행의 저금 업무 대리 체계는 은행기관 저금망과 체신기관 저금망으로 나뉜다. 은행기관 저금망은 지역별 은행 지점과 저금소, 저금대리소, 저금대리인 등으로 구성되며, 체신기관 저금망은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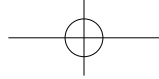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저금소는 우리의 은행 지점과 유사한 조직으로, 저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1947년 전국의 많은 지역에 조직되었다. 저금소는 조선중앙은행 시·군 지점의 통제하에 사업을 수행하며, 공인 금융기관으로서 저금통장을 비롯한 모든 거래 문건을 자체 명의로 발행한다. 또한 독립적인 재정상태표를 가지며 조선중앙은행 시·군 지점에 전용 돈자리(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저금대리인이란 규모가 작은 기관이나 기업소, 직장, 작업반, 인민반 등에 배치되어 저금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종사자이다.

(북한의 은행 조직과 저금대리소)



출처: 김민정·문성민(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BOK경제연구 202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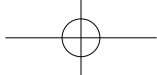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기업소의 유형 〕

구분의 기준	유형
경영 방법	경비예산제기업소, 독립예산제기업소
소유 형태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기업소
재생산과정에서의 위치	생산기업소, 유통기업소
생산 부문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건설기업소, 운수기업소
관리 소속	중앙공업기업소, 지방공업기업소
기업소 규모	특급, 1급, 2급, 3급, 4급 등

출처: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용례** 기업소에 {저금대리소} 설치하다. / (조선)중앙은행 지점에서 저금보험 업무는 저금보험과(貯金保險課)와 그 산하 저금소, {저금대리소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점은 기관·기업소에 현금보유 한도를 제정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감독·통제한다.《KDB산은경제연구소 산은조사월보, 2009년 1월》 / {저금대리소는}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함이 없이 아무때나 편리하게 저금을 하고 찾을수 있게 하며 저금사업을 균중적운동으로 벌리는데 이바지한다.《거울 2.0》
- **관련어** 저금망, 저금소, 저금대리인, 우편국, 체신소(체신분소).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김민정·문성민(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BOK경제연구 2021-6호.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한국은행(2013), '북한의 금융제도'.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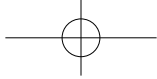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저축은행

貯蓄銀行, mutual savings bank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정식 명칭은 ‘상호저축은행’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높고, 일반 은행과 유사하게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지만 외환 업무는 하지 못한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영업 구역의 제한을 받는다. 영업 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구역으로 제한된다. 또한 의무적으로 영업 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40~5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과 비교해서 갖는 장점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때 심사 조건이나 절차가 간편하며 대출 한도도 높아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모아 느슨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므로 은행보다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저축은행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다만,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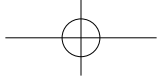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주의사회에서 령세한 근로자들의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목밑에 창설운영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 저축은행은 1972년에 사금융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은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제한된 금융 자본을 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북한의 돈주와 유사한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사금융은 부실 경영이나 지나치게 높은 금리, 무분별한 채권 회수 등으로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금융을 전문적인 서민금융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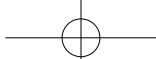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대출을 받기 쉽고 대출 금액도 크지만,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개인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은행 대출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연체 없이 상환하여 신용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상품과 비보호 상품 〕

보호되는 상품	보호되지 않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 순위 채권)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p>★ 단,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라도 1인당 최고한도 5천만 원(원금과 세전 이자 합계액) 이내에서 보호.</p>	

- 용 레**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이 1조 4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생계가 어려워진 중·저 소득자의 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한국경제, 2021년 3월 30일》
- 동의어** 상호저축은행.
- 관련어** 상호금융, 은행, 제2금융권.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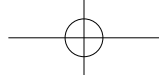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전자상업

電子商業, electronic commerce **목**

북한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일컫는 말.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전자상업’을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망을 상품의 주문과 접수, 구입과 결제 등에 리용하는 상업. 전자상업은 인터넷의 특징을 살려 통신망을 통하여 상업거래를 하는것과 관련하여 ‘전자기업’, ‘인터넷망기업’이라고도 한다. 전자상업에서는 일반적인 상품, 봉사의 거래만이 아니라 시장조사나 광고, 금융봉사 등 다양한 거래활동이 진행된다. 전자상업은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가상상점을 개설하고 판매활동을 벌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전자상업은 복잡한 수속이나 문건이 필요없기 때문에 로력을 절약하고 주문으로부터 대금지불까지에 이르는 시간을 줄일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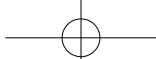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인 ‘전자상점’은 자국 내 정보통신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북한의 초기 인트라넷은 기관 또는 기업 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2015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옥류’가 문을 열면서 전자상업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옥류’는 ‘인민봉사총국’에서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방,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류’ 이후 북한에서는 ‘만물상’, ‘실리’, ‘내나라’, ‘앞날’, ‘광흥’, ‘은파산’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 잇따라 등장했다. 특히 2015년 10월에 문을 연 ‘만물상’은 북한의 ‘아마존’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다. 최근 ‘만물상’의



운영사인 ‘연풍상업정보기술사’는 모바일 전자 결제와 해외 판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은 남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한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텔레비전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문한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인트라넷 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주문하고, 물품이 도착하고 나서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에는 ‘반품불가’ 원칙이 적용되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수물을 받아보려면 주문 후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남한에 비해 서비스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배송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인민봉사중국 산하의 여러 ‘운수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상품 배달의 신속성 확보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 **용 레** 북한의 {전자상업} 서비스 만물상은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가적인 통합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만물상이 전자상거래 기능 뿐 아니라 전자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과 ‘아리랑 메아리’는 (2019년) 2월 14일, 15일 연달아 {전자상업} 홈페이지 만물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각각 보도했다.《NK경제, 2019년 2월 15일》 / {전자상업을} 리용하면 필요한 상품이나 봉사의 탐색, 주문, 구입을 상점이나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아무때나 편리한 시간에 할수 있다.《거울 2.0》
- **동의어** 온라인쇼핑.
- **관련어** 온라인쇼핑몰,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시스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코리아 투데이(2021.3),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과 연풍상업정보기술사의 사업 확장’.
- **집필자** 이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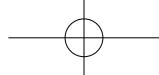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전자인증서

電子認證書, digital certificate

전자거래나 사업에 필요한 문서를 교환할 때, 이용자의 신원과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전자인증서는 온라인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증서란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증서이다. 전자거래란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현금자동지급기·자동입출금기·지급용단말기·컴퓨터·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나 사업상의 거래행위를 말한다.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금융거래(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전자거래의 일종이다.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려면 발급 대상 및 용도에 맞는 전자인증서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인증서와 비슷한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전자증명서’를 “인터넷을 리용하는 전자결제 등을 위하여 리용자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전자화된 증명서.이 증명서는 제3자의 인증기관이 발행한다. 전자증명서의 기술로서는 공개열쇠암호 방식을 리용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공개열쇠자료가 정당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은 이 자료에 수자서명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신문잡지 애플리케이션인 ‘공세’에 가입하거나 ‘전성카드’(북한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전자 결제에 필요하다.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공세’ 앱을 통해 노동신문 이외의 문자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열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람 허가 번호는 국가 컴퓨터망에서 운영하는 ‘공



세' 홈페이지에서 '전성카드'에 의한 전자 결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 전자인증서는 이용자에 따라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된다. 이용자가 개인이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기업이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용의 경우 금융인증서, 한정용 공동인증서, 특정은행 전용 공동인증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범용 공동인증서는 개인용과 기업용 모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인은 금융인증서나 범용 공동인증서로 모든 인터넷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모든 인터넷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이나 전자세금용 등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최근 금융회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지문, 홍채)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용 레** {전자인증서를} 발급받다. / 2020년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말고도 다양한 {전자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시 본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 부문 2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부문 5개(카카오인증서·페이코인증서·KB모바일인증서·패스인증서·삼성패스인증서)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발급한 {전자인증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인 만큼 이번을 기회로 실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디지털투데이, 2021년 1월》

● **관련어** 간편비밀번호, 모바일뱅킹, 보안카드, 생체인증, 오티피(OTP: One Time Password/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인터넷뱅킹.

● **집필자** 이기송



전자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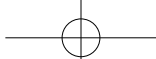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電子貨幣, electronic currency

실제 화폐는 아니지만,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화폐처럼 기능하는 것. 아이시 ic칩이 내장된 카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을 가리킨다. 전자화폐는 기존의 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적 결제 수단이다.

북한에서는 전자화폐를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 기술 수단들을 이용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수단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전자화폐’를 “현금 대신에 컴퓨터망이나 집적회로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리용하는 가상적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는 그것을 결제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돈가치를 전자정보화한것이다. 전자화폐는 전자상업거래에서 리용된다. ... 전자화폐를 콤퓨터말단장치에 통과시키고 암호번호를 입력시키면 해당한 금액이 은행예금에서 떨어져 자동적으로 즉시에 결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전자화폐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컴퓨터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디지털 캐시 digital cash, 사이버 캐시 cyber cash, 이캐시 E-cash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어 지폐나 주화와 같은 화폐로서의 본질적 속성에는 변화가 없고 금액의 정보만이 디지털화되



어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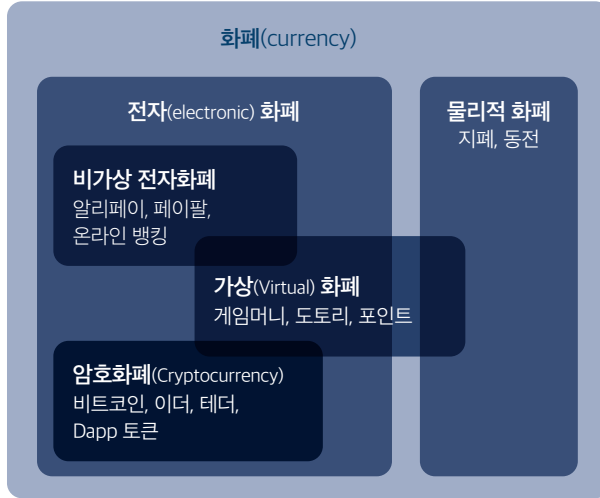
전자화폐는 편리성·개방성·양도성, 거래 효율의 향상 및 거래 비용의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명 계좌를 이용한 충전의 번거로움, 카드 간의 가치 이전 불가, 사용처의 제한 및 탈세와 불법거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는가에 따라 아이시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된다. 아이시IC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도 하는데, 아이시IC카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일부를 옮겨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컴퓨터 칩에 가치가 저장된 선불카드에서부터 여러 가지 전자지갑을 통해 송금을 할 수 있는 '페이팔 paypal'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공중통신망을 통해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가상공간 안에서만 유통되는 게임머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아이시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의 구분 없이 지불 체계가 완전히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캐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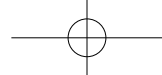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은행의 모든 잔고는 전자화폐로서 개념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암호화폐도 이러한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자화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화폐의 분류)



- 용 레 {전자화폐를} 발행하다. / 거래 내역을 그 개인의 사회적 기록으로 읽는 독특한 문화가 확산하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구글 등도 자사 플랫폼에 결제 기능을 도입하려 애쓰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전자화폐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이다. 하나의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가상의 공동체는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서울경제, 2021년 2월 4일》
- 동의어 전자화폐(북한어), 전자돈지갑(북한어), 싸이버화폐(북한어).
- 관련어 디지털통화, 디지털화폐, 사이버캐시, 전자돈, 전자머니.
- 집필자 이기송



정액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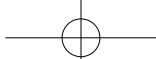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定額生活費, flat living expenses **목**

북한에서 시간당 기준액을 정해 놓은 생활비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종. 정액생활비는 기준 작업량과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한 형태로, 임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생활비표란 근로자의 직제와 자격급수, 직종별 기능등급에 따른 단위시간당 생활비 기준액을 기재해 놓은 표로서, 노동자는 자신이 투입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생활비표에 따라 정액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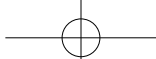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북한의 근로자 임금은 도급지불제에 따른 노동보수인 도급생활비와 정액지불제에 따른 보수인 정액생활비로 구성된다. 도급생활비와 정액생활비는 주로 화폐 형태로 지불되는데, 임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정액생활비는 미리 정해진 생활비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터에 투입한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불되는 근로보수이다.

북한의 『경제사전2』(1985)에서는 ‘정액지불제’를 ‘근로자 직제와 자격급수, 직종별 기능등급에 따르는 단위시간당 생활비기준액을 생활비표에 미리 정해놓고 매개 사람이 일한 시간에 따라 노동보수를 계산하는 기본적 생활비 지불 형태이다. 정액지불제에서 단위시간당 생활비기준액은 흔히 일생활비기준액, 월생활비기준액, 한시간당 생활비기준액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액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불하기 위한 ‘정액생활비지



불제도 定額生活費支拂制度'가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정액생활비 지불제도'를 "지출된 노동의 량과 질을 노동시간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지불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노동의 '질'을 차등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활비의 산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생활비등급제를 적용한다. 노동의 '양'을 차등화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정액지불제와 도급지불제가 있다.

- **용 레** {정액생활비률} 지급받다. / 당 간부, 행정기관 사무원처럼 작업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직업은 도급생활비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정액생활비률} 지급한다.《매일노동뉴스, 2004년 4월 28일》
- **관련어** 도급생활비, 도급지불제, 로동보수, 생활비표, 생활비등급제, 정액지불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유성재(2009), 「남북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 법학논문집 33(2).
- **집필자** 천규승



제2금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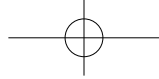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第二金融圈, nonmonetary institutions

은행을 제외한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의 금융회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은행을 전형적인 금융회사로 보는 관점에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제일금융권인 은행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금융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의 상호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신용카드회사·리스회사·벤처캐피탈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에 속하는데, 비은행금융기관 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이라고도 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금융권이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권역을 말한다. 법으로 인정되는 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두 종류뿐이다.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이 있다. 제2금융권에는 금융투자회사, 단위농협·수협, 리스회사, 보증보험사,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생명보험회사, 선물회사, 손해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캐피탈회사, 투자자문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이 있다. 한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체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한다. 제3금융권은 법적 금융권이 아니면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업체들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대부업체는 법적 금융권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시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제2금융권의 종류 〕

(상호)저축은행	주로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른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높지만, 대신에 예금 금리도 높다.
상호금융회사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농어민 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법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하나이며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회사. 전문계 카드사(전문계)와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은행계)으로 나뉘는데, 카드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있으면 전문계로, 은행 내 부서로 있으면 겸영은행으로 분류한다. 주요 업무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발급, 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전산망 관리, 신용 공여, 단기카드대출(구 명칭은 현금서비스) 등 여신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의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보험이 주업이지만 보험 해약 환급금의 50~95%의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증권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유통과 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금융회사. 한국거래소에서는 회원만 상장 증권의 매매가 가능하데, 증권사가 거래소 회원이다.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열거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가지 업무(금융투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대표적인 금융투자회사로는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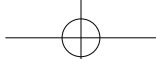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금융권의 구분 〕

구분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 일반상업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여신전문회사: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대부업체 • 불법사금융업체 • 전당포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금융거래 가능: 예금, 대출업무 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업무, 신용카드업무 등을 수행 • 제2금융권 대비 예금 및 대출 금리가 낮음 • 제2금융권 대비 대출 조건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인 금융업무 : 제한적인 예금·대출 업무, 증권 인수·매매, 자산운용, 보험 등 금융사별 제한된 업무를 담당제1금융권 대비 높은 예금 및 대출 금리 • 대출 조건이 낮다 • 주로 자금 공급자에게서 수요자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금융기관이 아님 • 비공식 용어 •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주)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며,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분류하던 것이 정착된 것임.

- **용 레**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다. /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 못지않게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역대급으로 불어났다.《뉴데일리, 2021년 1월 14일》 /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서울경제TV, 2020년 5월 25일》
- **동의어**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 **관련어** 금융기관, 제일금융권, 제삼금융권.
- **집필자** 이조영



조세

租稅,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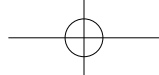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가 있다.

조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도로, 항만, 교량, 공원 등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에 있다. 또한 조세는 사회·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즉, 국가는 각 경제주체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와 지원, 소득재분배,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세’가 없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조세’를 “수입원천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서 법에 따라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물 또는 화폐로 받아들이는 수입. … 우리나라는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넓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앴으로써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조세를 모르는 유일한 나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의 헌법재판소(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에 따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다.

조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이다. 국민과의 합의가 없어도 세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강제성이 있지만 재정권이 아닌 형벌권에 의해 처벌의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와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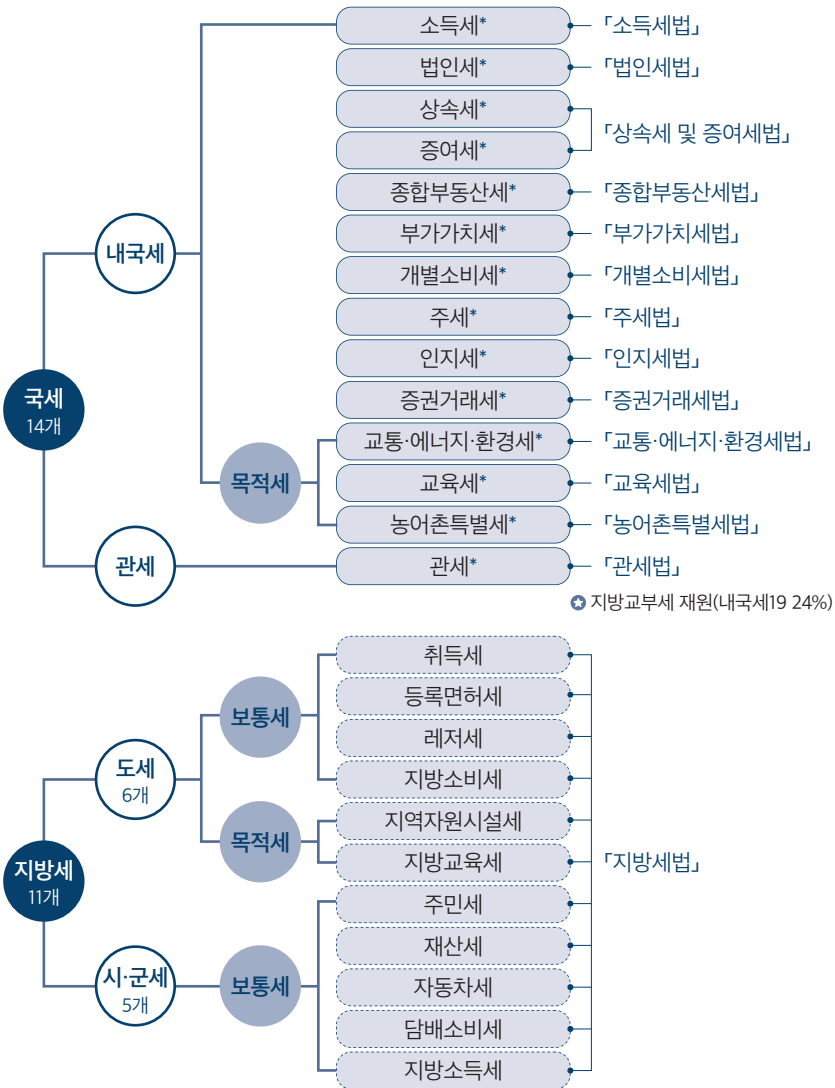
조세는 납부 방법에 따라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간접세는 일반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납세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사업자(납세의무자)에게 지불하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세(간접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조세는 징세 대상이 사람인 '인세'와 물건인 '물세', 규칙적으로 부과되는 '정상세'와 일정 기간에만 임시로 징수하는 '임시세'가 있다. 징세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가 있다.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본세'와 다른 조세에 부가되어 징수하는 '부가세', 동일한 세원을 과세권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세'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을 측정하는 단위에 따라 분류하면 과세 대상의 무게, 길이, 용량 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중량세'와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종가세'가 있다. 세율별 구분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등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



는 ‘누진세’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세’, 일정한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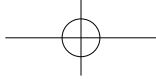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 대한민국 조세』



- 용 레 {조세를} 감면하다. /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박스' 제도에 착안했다.《머니투데이, 2020년 7월 14일》
- 동의어 세금.
- 관련어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2017), 『거울2.0』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 대한민국 조세』.
- 집필자 이의선



종합자산관리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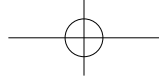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綜合資産管理計座, 씨엠에이, CMA, 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약정 계좌 내 예치 자금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의 단기성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하고,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즉시 매도하여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식 투자상품이다. 예전에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던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었으나 2005년 6월부터는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단 하루를 예치해도 은행의 입출금통장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의 입출금통장처럼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은 물론 급여 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의 주거래통장과 경쟁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며, 일시적인 여유 자금이나 비상금, 투자용 대기 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 운용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종합금융회사형(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북한에는 남한의 '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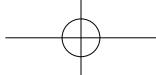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운용 대상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운영 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주의할 점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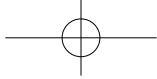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유형 〉

종류	종합금융회사형 (발행어음형)	환매조건부채권형 (RP, repurchase agreements형)	머니마켓펀드형 (MMF, money market fund형)	머니마켓랩형 (MMW, money market wrap형)
투자대상	수익증권,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	자산운용사가 단기국공채, 기업어음 등에 투자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에 투자
수익률형태	실적배당	확정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특징	예금자보호대상	약정된 수익률을 기간별 차등지급	다음날 환매	일일정산으로 복리효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 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형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입금된 자금을 확정금리형 환매조건부채권에 자동으로 투자한 후 이자 수익을 얻는다.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기간에 따른 확정금리를 제공한 후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며, 고객은 낮은 위험 속에 확정금리로 수익을 보장받는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채권으로,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 용 레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다. / 지난해 개인투자자 주식 열풍에 따라 단기자금 상품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뭉치돈이 물리고 있다.《데일리안, 2021년 1월 1일》 /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을 유치하려는 금융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카드사와 핀테크 업체들은 고수익률을 앞세워 증권사와 제휴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한국경제, 2020년 10월 19일》
- 관련어 단기금융상품, 머니마켓펀드, 주거래통장, 환매조건부채권.
- 출 전 강창희 외(2009),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집필자 성동규



주가연계증권

株價連繫證券, ELS, Equity Linked Security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때 만기와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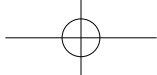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주가연계증권은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며, 투자 원금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자금을 주식이나 주가지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약정한 수익의 재원 확보를 위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북한에는 남한의 '주가연계증권'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더 알아보기

특정 주식의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과는 달리, 주가나 주가지수를 제외하고 금리, 이자율, 통화, 원자재(금, 유가, 곡물 등), 신용 위험 등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을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y)'이라고 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가나 주가지수, 금리,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기초자산은 크게 주식의 개별 종목으로 하는 경우와 국내외의 시장지수로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발행 회사는 통상 1~3개의 기초자산을 활용한다.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말하며, 기초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할수록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한다.

시장지수를 활용한 주가연계증권은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 수익률도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다. 시장지수로 한국의 ‘KOSPI200 지수’, 미국의 ‘S&P500 지수’, 홍콩의 ‘HSCEI 지수’, 유럽의 ‘EUROSTOXX50 지수’, 일본의 ‘NIKKEI225 지수’ 등이 주로 활용된다.

주가연계증권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또는 횡보할 때도 시장금리 이상의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유동성이 낮으며, 발행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의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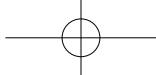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주가연계증권과 유사한 상품으로 은행의 주가연계예금 ELD, Equity Linked Deposit, 자산운용회사의 주가연계펀드 ELF, Equity Linked Fund가 있다. 주가연계예금은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정기예금이다. 주가연계펀드는 주가연계증권을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며,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판매한다.

● **용 레**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다. / 은행권의 뭉치돈이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며 증시 투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높지 않은 위험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과} 우선 배정권 혜택을 노린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헤럴드경제, 2021년 3월 23일》

● **관련어** 주가연계예금, 주가연계펀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 **출 전** 성동규(2015),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첫걸음』, 북스토리.
한국은행(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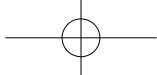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주식

株式, stock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 상법에 의하면 주식은 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금액을 의미하며, 자본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에 의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1주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그 기업에 1주만큼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은 1주당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 발행을 통해 들어온 자금은 자기자본으로, 값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늘어난 자본금만큼 경영권이 줄어들어 단점도 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인 주주권株主權을 의미한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의 수량만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주주의 권리에는 회사가 얻은 이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받는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를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의견을 내는 ‘의결권’, ‘회계 장부 열람 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주주는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도 지분 가치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허용되지 않고 주식이나 주주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와 경제적 교류가 불가피해지면서 북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용어에 관한 관심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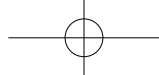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아지고 있다. 북한의 『광명백과사전』(2010)에서는 ‘주주권’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기업에 자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구입한 주주가 그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주주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그 자산적 가치를 향유하는 경제적 권리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결의권(투표권)인 사회적 권리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이에 의하여 주주권이 양도되고 유통된다. 주권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에 지체 없이 발행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주권을 실물로 발행하여 유통하였으나, 2019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소유 관계 사항을 등록하여 전자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권회사를 방문하거나 증권회사와 제휴된 은행을 통해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회사의 주식을 직접 선택하여 매매하는 투자 방식을 ‘직접투자’라고 하며,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주식형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 방식을 ‘간접투자(펀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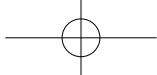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주식을 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상법이 정한 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대상으로 등록하는 일을 상장이라 하는데, 이러한 상장 과정을 거친 주식을 상장주식이라고 한다. 기업이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의 주식을 누구나 자유



롭게 매매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하며, 중개업자인 증권회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광명백과사전』(2010)에서는 ‘발행시장’에 대해 “리자가 붙는 증권인 국채, 사채 등 채권과 배당금이 붙는 증권인 주식이 새로 발행되고 투자자가 증권을 구매함으로써 구매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정의한다.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거래 활동을 진행하는 시장으로서 거래시장 또는 2급시장이라고도 부른다. 유통시장은 우선 증권보유자들에게 거래를 통하여 증권을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용 레**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모(43)씨는 올해 초 생애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다. 치솟는 집값에 매매는 언감생심인 데다 청약 당첨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해 2억 원여의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주식} 투자에 나선 것이다.《중앙일보, 2021년 2월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 672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4개월만이다.《조선비즈, 2021년 5월 14일》
- **관련어** 주식회사, 주권, 발행시장, 유통시장, 직접투자, 간접투자.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한국FPSB(2020), 『투자설계』.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 **집필자** 성동규



주식 투자, 공부한 만큼 보인다

북향민 O씨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 적은 돈이지만 남한 정착 초기부터 적금도 꼬박꼬박 넣었고 월급 이외의 추가 수입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챙겨 둘 만큼 알뜰했다. 적잖은 금액이 모이자 O씨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지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수 주식계좌 개설과 앱 설치를 도와주었다. 주식을 공부하면서 여윌돈으로 조금씩 경험을 쌓아 보라고 권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알려 주었다.

그러나 마음이 급했던 O씨는 주식에 대한 지식을 전혀 쌓지 않은 채 지인이 추천해 준 주식을 덜컥 사 버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주식 가격이 10% 정도 오르자 O씨는 기쁜 마음에 서둘러 주식을 팔아 버렸다. 첫 시도에서 조금 재미를 본 O씨는 주식의 '맛'에 취해 버렸다. 회사에서 힘들게 종일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게만 느껴졌다. 처음에 더 많은 주식을 샀더라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다. 며칠 후, 매도했던 주식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자 O씨는 주저 없이 처음의 2배 분량을 다시 매수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다음 날부터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불과 하루 만에 손실 금액이 이전에 올렸던 수익을 넘어서자, O씨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O씨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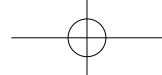


고 그는 불안한 마음에 손해를 감수하며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지인이 추천한 미국 주식을 샀다. 다행히 미국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이전의 손실을 만회할 정도가 되자, 본전을 찾았으니 그만두자는 마음으로 바로 매도했다. 더욱이 미국 주식은 관련 기업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거래 시간대도 달라 O씨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매도 금액을 다시 원화로 환전해 보니 투자 원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공제하는 수수료와 환율을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북한에는 자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라는 개념도 없다.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야 투자의 개념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개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봄철 협동농장에 비료, 원유 등 부족한 영농 물자를 빌려주는 대가로 가을철에 농산물을 싼 값에 받는 일종의 선물투자 비슷한 것도 있다. 최근에는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빵 가공 기계를 사서 함께 운영하는 일종의 합자회사도 생겼다.

국가가 개인의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투자는 온전히 개인 간의 계약으로 유지된다. 개인의 역량과 인맥이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향민들은 남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족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먼저다. O씨처럼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지 않고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본 시장의 속성을 공부하여 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좋은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힐 필요가 있다.

집필자 오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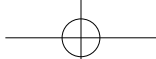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주식회사

株式會社, corporation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설립된다. 모든 주주는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만 부담하고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주주는 보유 주식 금액의 비율만큼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자로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된다. 보통주는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배분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 내용이 달려 있지 아니한 주식을 가리킨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 따위의 재산적 이익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에 있는 주식을 가리킨다.

북한에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쓰이지도 않는다. 다만,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주식회사’를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본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기초하여 출자자에게 리익금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적 기업. 주식회사는 여러 자본가들이 낸 자본을 하나의 큰 자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기업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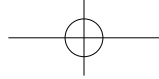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상법상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업무집행의 감독기관인 감사로 구성된다.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장점은 자본이 소액의 다수 증권으로 분할되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 유한책임제도와 다수의 주주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영속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사업의 경영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으로 인해 주주총회, 공시의무 등 상법상의 규제가 많으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주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등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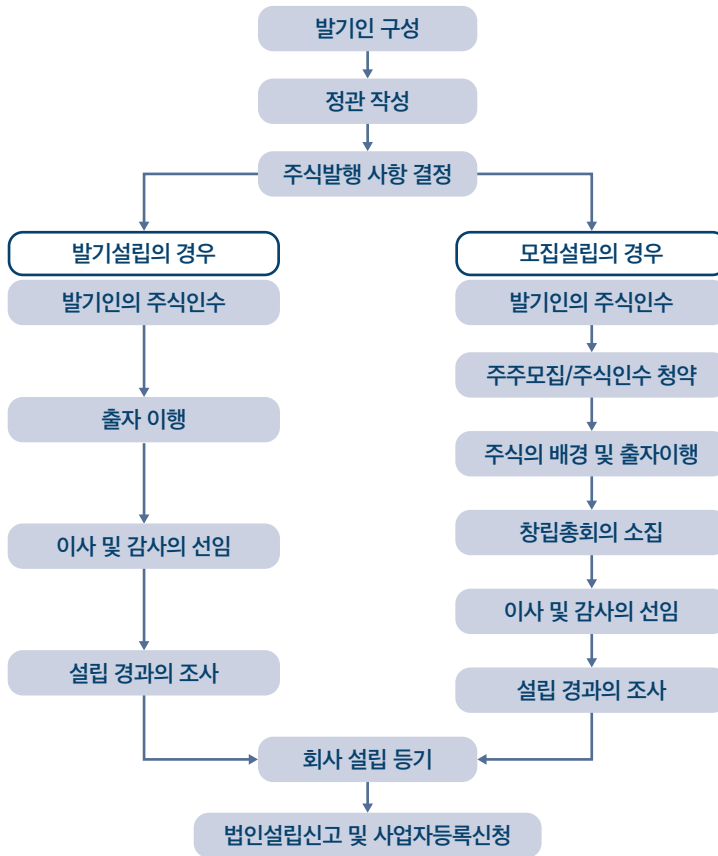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의 구성 및 정관 작성, 주식회사 설립 방법 결정,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자를 말하는데, 회사의 설립 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종류와 수, 액면 금액을 결정한다. 정관이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상호, 목적, 공고 방법,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발기인의 보수 등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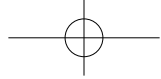
상법상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어졌으나,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별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발행한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행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는 ‘모집설립’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 방법을 결정한다.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한다. 설립 등기를 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4가지가 있다.

〔 주식회사 설립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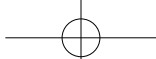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회사의 구분 〉

구분	개념
주식회사	회사는 주식을 발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합자회사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 **용례** 일본 정부가 {주식회사}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법인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 검사를 현재의 직접 대면 방식에서 스마트폰이나 피씨(PC)로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한다.《연합뉴스, 2018년 4월 30일》 /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의 한국 법인인 구찌코리아가 회사 종류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부감사,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2020년 12월 9일》 / {주식회사에서} 리윤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수에 따라 리익배당금의 형태로 분배된다.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은 주주총회이다.《거울 2.0》
- **관련어** 보통주, 우선주, 주권, 주주총회.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www.startbiz.go.kr>.
한국FPSB(2020), 『투자설계』.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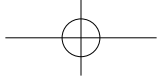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주택연금

住宅年金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는 이 연금을 통해 부족한 노후 생활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가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된다. 더구나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에 금융 기관에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한다. 이때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노후 생활비이므로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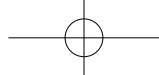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원하면 이용 도중에도 언제든지 연금지급총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북한에는 남한의 '주택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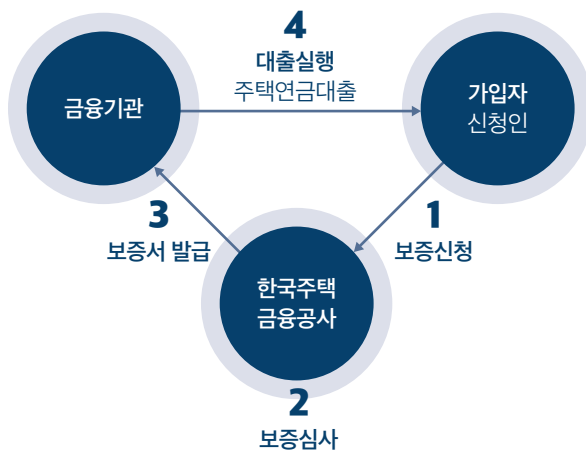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보증심사를 통해 취급이 결정되면 공사에서 보증 약정 및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 취급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이 있다. 종신 방식은 매월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며,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10~30년)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취급 이후에는 지급 기간 변경이 불가하다. 대출 상환 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금을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매월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 최대 약 23%를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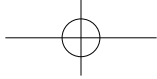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주택연금의 취급 절차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 용 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마다 1만 명 이상 늘어나 총 가입자가 8만 명을 넘어섰다.《한국경제신문, 2021년 1월 19일》 /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살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중앙일보, 2020년 1월 6일》
- 관련어 역모기지론.
- 출 전 천규승(2016), 『부자 아빠 없다면 금융 공부부터 해라』, 코리아닷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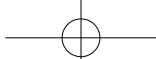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주택청약통장

住宅請約通帳, Bank Account for Housing Subscription

남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응모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할 수 있는데, 주택법은 주택청약의 구체적 조건과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은행 전체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법에 의해 정부 당국이 별도로 예금을 관리한다. 주택청약통장의 주된 목적은 국민주택 청약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금융회사별로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분양 순위를 정하므로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청약의 효력이 사라진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사업 목적의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도시보증법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m² 이하, 읍·면지역의 경우 100 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정부는 2009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던 '주택청약통장'을 한데 묶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달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일종의 적금으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적금의 일종이라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적립을 정지할 수 있으며, 1,500만 원까지는 일시 적립도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월 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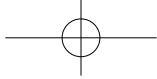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북한에는 남한의 ‘주택청약통장’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는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확대했지만 아파트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와 한정된 주택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시행하였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통장을 기반으로 운용되는데, 분양 희망자는 청약통장의 적금 기능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는 청약통장의 적립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으로 부족한 주택 건설 재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적립금을 예치하고, 수도권 등은 2년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에는 ‘특별 공급 방식’과 ‘일반 공급 방식’이 있다. 특별 공급은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의 분양분을 미리 정해놓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 대상은 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행정도시 등으로의 이전 기관 종사자이다. 일반 공급 방식은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뉜다. 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중



합하여 점수화한 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http://www.applyhome.co.kr> 에서 일괄적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청약 가능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

구분	전용면적			
	85 m ² 이하	102 m ² 이하	135 m ²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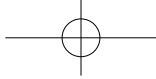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년 제정, 2021년 5월 기준)

〔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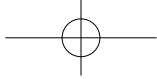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구성 요소	만점	세 부 점 수
무주택 기간 ¹⁾	32점	~1년:2점, ~2년:4점, ~4년:8점, ~5년:10점, ~6년:12점, ~7년:14점, ~8년:16점, ~9년:18점, ~10년:20점, ~11년:22점, ~12년:24점, ~13년:26점, ~14년:28점, ~15년:30점, 15년~:32점
부양가족 수 ²⁾	35점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기간 ³⁾	17점	~6개월:1점, ~1년:2점, ~2년:3점, ~3년:4점, ~4년:5점, ~5년:6점, ~6년:7점, ~7년:8점, ~8년:9점, ~9년:10점, ~10년:11점, ~11년:12점, ~12년:13점, ~13년:14점, ~14년:15점, ~15년:16점, 15년~:17점
총점	84점	

1)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 공고일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수
 3) 청약통장 가입일~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만 19세 이전의 가입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24개월로 간주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년 제정, 2021년 5월 기준)



- **용례** {주택청약통장율} 개설하다. /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에 출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율}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초에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SBS뉴스, 2009년 3월 23일》
- **동의어** 청약통장.
- **관련어** 주택도시기금, 주택일반공급,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특별공급, 가점제, 추첨제.
- **출전** 김지현(2012),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학연구 18-4호.
장세훈(2002),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입법정보 40호.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 **집필자** 이의선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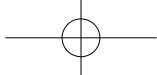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地方別現金流通責任制, cash circulation responsibility system by local 

‘국가현금계획’에 따라 각 지방이 독립채산적으로 재정 운용을 이루도록 강제하는 북한의 화폐유통제도. ‘국가현금계획’은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의 출납 과정에서 수입으로 처리되는 현금의 규모와 그 원천, 지출로 처리되는 현금의 규모와 방향을 규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심금주(2017)에서는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국가현금계획에 따라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자체로 보장하고 현금류통의 계획적 조절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그 원활한 류통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우월한 현금류통조절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집행 목표에 대해서는 “자체의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맞추는 것으로, 각 지방마다 생산력의 지리적 배치와 그 발전수준, 자연경제조건, 경제문화발전수준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서로 다른 지방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정해야 지역 간 현금조절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없애고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의 생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체의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맞추는 것은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의 본질적 요구이며 현 시기 상업은행들의 금융기관채산제의 올바른 실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실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북한의 ‘화폐류통법 제4조’는 ‘현금류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화폐의 안정성



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국가는 현금류통에서 중앙집권적 규률을 강화하며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는 북한의 각 지방이 재정 절약을 통해 자체 현금 수입만으로 필요한 재정 지출을 충당함으로써 화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에 금융기관채산제를 적용하면서 특정 지역의 자금 유통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채산제는 상업은행이 예금, 대부, 결제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이루면서 국가경제의 이익에도 이바지하도록 자율 경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각 지방의 상업은행은 이러한 금융기관채산제와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에 근거하여 각 지방의 현금 수요와 공급을 관리함으로써 현금 유통의 안정을 책임진다.

○ **용 레**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강화하다. / 국가가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지방과 지역들에서 자체의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화폐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자에 있다.《심금주(2017)》/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는 국가의 현금계획에 따라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자체로 보장하고 현금류통의 계획적조절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그 원활한 류통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우리 식의 우월한 현금류통조절제도이다.《거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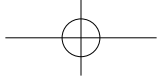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관련어** 독립채산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심금주(2017), 「현시기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집행에 대한 평가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174호.

황수민·양문수(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6-1호.

○ **집필자** 천규승



지역화폐

地域貨幣,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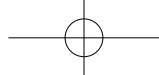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국가의 공식 화폐와 달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져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가리킨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0여 곳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송파 품앗이’의 ‘송파머니’에 이어 2000년 ‘대전 한밭레츠’의 ‘두루’ 등이 발행되었고, 2021년 현재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입 증대를 위해 발행된다. 가맹점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편의성과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일정 비율의 캐시백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선결제 후 발행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기능상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지역화폐’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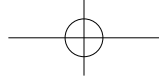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남한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중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의 ‘시흥시 지역



화폐(시루)와 ‘김포페이’, ‘울산페이’, ‘성남화폐’, ‘영주화폐’ 등은 현금과 태환^{兌換}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제로페이^{zeropay}’는 선결제를 하지 않고, 또한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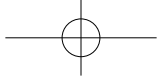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한편,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는 온라인 모바일(카드)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지역화폐 결제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한국조폐공사는 2019년 초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착^{chak}’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가맹점에서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농·어민수당과 청년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비롯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용 레**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 경기 성남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6일 까지 한 달여 사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이 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연합뉴스, 2021년 2월 17일》 /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인기를 끌면서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제주도가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에 나선다.《한국일보, 2021년 5월 23일》
- **관련어**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
- **출 전** 송경호·이환웅(2020),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효성·김성주(2019),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 2019-1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코나아이(2020), ‘지역화폐 플랫폼 경쟁사 비교’.
- **집필자** 이기송



〔 국내 지역화폐 유형 〕

목적별 유형	지역화폐 유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공동체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 골목상권	
블록체인 연계	블록체인 무관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무관	블록체인 기반
대표 사례	대전 한밭레츠	노원화폐 (NOWON)	시흥화폐 (시루)	경기도 기타 지역화폐	김포페이/울산페이/성남화폐/영주화폐
현금과 태환 여부	태환 안됨	태환 안됨	태환 가능	태환 가능	태환 가능
특징	소규모 지역단위 물물교환 및 품	봉사/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로 전환	민관이 협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위한 다양한 시도	기존 지류형 지역화폐나 최근 모바일 화폐로 발급	조폐공사/ KT 지역화폐 전문 플랫폼 기반으로 지역화폐 발행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 과 별개 지속 가능지역화폐 구성원간 신뢰 문제 활성화 구현이 어렵고 생태계 조성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에 의존 지역화폐 설계 및 추가적인 서비스 확장을 통해 지역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에 100% 의존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에 따라 영향 정부 예산 기반 정책 효과 직접적 나타남 	



창구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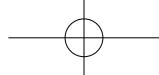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窓口去來, window transaction

고객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 창구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과 대화를 통하여 직접 금융서비스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또한 다양하다.

상업은행은 광범위하게 창구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의 유형에 따라 개인고객 창구와 기업고객 창구로 구분한다. 은행별로 창구의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개인고객 창구는 일반적으로 입·출금 창구, 종합상담 창구, 우수고객 창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입·출금 창구는 입금, 출금, 송금, 공과금 납부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창구이다. 종합상담 창구는 예금, 적금, 개인 대출, 투자 상품 가입, 외국환 업무 등 고객의 신중한 판단과 절차가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이다. 우수고객 창구는 거래 실적이 많은 고객을 위해 좀 더 전문성 있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창구이다.

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매긴다. 예금과 대출이 많고 외환 거래 실적이 많으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고객 등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급여 이체인데, 매일 급여를 이체하는 것을 그 은행에 대한 거래 지속 가능성과 충성도 판단의 근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창구거래’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도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이 은행을 통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현금거래는 주로 주민의 화폐소득운동을 반영하는 화폐거래로서 기관, 기업소들이 주민들에 대한 소비상품 판매, 봉사제공에 따르는 대금(료금)수입 그리고 로동보수, 려비, 년금, 보조금의 지불거래와 주민들의 저금, 보험, 송금거래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은행 거래 용도가 남한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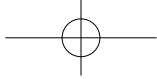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은행은 경영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창구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계속 고민해 왔다. 모든 은행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흐름은 입·출금 창구보다 종합상담 창구를, 종합상담 창구보다 우수고객 창구를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일수록 은행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은행은 대면 거래가 가능한 은행 창구를 줄여가는 추세이다. 간단한 지급과 결제업무는 물론 예금과 대출, 투자 상품 선택까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다. 이러한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은행은 창구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줄일 수 있게 된 반면에, 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권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다. 은행 업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면서도 새로운 거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용례 {창구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돈을 부치는 사람은 100명 중 한 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은행에서 {창구거래를} 하는 모습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매일경제, 2020년 11월 10일》
- 동의어 대면거래.
- 관련어 비대면거래, 입금출금창구, 종합상담창구, 모바일뱅킹.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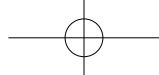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채권

債券, bon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증권.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및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정해진 일자에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발행 시점에 이미 지급해야 할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발행된 채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액면금액 또는 액면가라고 하는데, 만기 시점에 채권의 소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다. 발행기관은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은 주식처럼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발행기관의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확정 이자가 지급되고 경영참가권이 없으며, 만기에 원금 상환이 예정된 증권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북한의 『현대재정금융사전』에서는 ‘채권’을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이 다른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돈(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와 지방정권 기관 및 사적 주식회사 기업체들이 운영자금을 장기적으로 빌려 쓰기 위하여 발행하는 법적으로 규제화된 빚 문서”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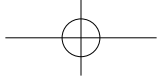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매 기간마다 발행 시에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말한다. 유통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매도하여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채권 투자의 위험에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시장위험이 있다. 발행기관의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된 이자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및 우량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을 갖는다. 시장위험은 채권의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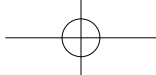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나 기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을 발행할 때 발행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원리금 지급 능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으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다. 또한 발행 기간 중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낮아지며,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채권은 발행 주체, 상환 기간, 이자 지급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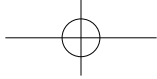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채권의 분류 〕

분류기준	명칭	의미
발행주체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 (예시: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이 특수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예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예시: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금융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예시: 통화안정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기업의 신용도가 중요함
상환기간	단기채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
	중기채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 대부분의 회사채가 해당됨
	장기채	상환기간이 5년 초과하는 채권. 주로 국채가 해당됨
이자 지급방식	이표채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 가장 일반적 형태
	할인채	표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 무이표채라고도 함
	복리채	정기적 이자지급 대신에 복리로 채투자되어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
	단리채	정기적 이자지급 대신에 단리로 채투자되어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



- 용 레 {채권율} 발행하다. / 지난달 국내 {채권} 발행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파이낸스, 2021년 5월 10일》 /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 한국 {채권율} 많이 사들이면서 대외채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헤럴드경제, 2021년 5월 21일》
- 관련어 유가증권, 국공채, 사채, 발행기관, 신용등급.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http://www.kofiabond.or.kr>.
천규승(2016), 『부자 아빠 없다면 금융 공부부터 해라』, 코리아닷컴.
한국FPSB(2020), 『투자설계』.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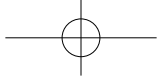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챗봇

chat-bot

사람과 대화하듯이 문자나 음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채트chat’와 ‘로봇robot’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big-data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으로 분석해 실제 금융 상담원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남한의 은행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모바일뱅킹에 고객 상담 목적의 챗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의 ‘금융봇(2016년 11월)’에 이어 신한은행의 ‘오로라(2017년 1월)’, 하나은행의 ‘하이HAI(2017년 7월)’, 우리은행의 ‘위비봇(2017년 9월)’, KB국민은행의 ‘리브톡톡LivTalkTalk(2019년 6월)’ 등이 운영 중이다. 은행들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의 도입 및 투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챗봇 출시 초기에는 성능이 좋지 않은 탓에 조금만 복잡한 질문을 하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챗봇 역시 진화하고 있다. 챗봇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챗봇’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2021년 현재 남한의 주요 시중은행들은 챗봇을 통해 일상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은 기분이 우울하다고 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적금 상품을 문의하면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는 등 일정 수준의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챗봇을 통한 상담 서비스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챗봇 대화창을 통한 금융상품의 가입은 일부 은행에서는 아직 예·적금 상품에 한해 서만 가능하다. 이는 현재 인공지능^{AI} 챗봇의 주된 기능이 ‘상담’보다는 ‘안내’에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이다.

남한의 은행들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잠재 고객의 확보보다는 고객의 편의성 증대 차원에서 고객이 원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로 복잡한 질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좀 더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단순하게 이용자가 제시하는 키워드나 질문에 맞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금융 생활에 대한 습관 파악과 자산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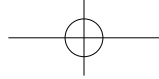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챗봇 서비스 내용 〕

(2021년 1월 현재)

구분 (출시일)	에이아이(AI) 챗봇명	서비스		내용
		일상 대화 가능 여부	챗봇 내 상품 가입 가능 여부	
NH농협은행 (2016.11)	금융봇 (bot)	○	×	카카오톡 기반의 채팅 자동 상담 서비스(금융상품 안내, 자주묻는 질문(FAQ), 이벤트 안내 등)
신한은행 (2017.1)	오로라	○	×	상담원 근무시간 이후 챗봇을 통한 24시간 상담 제공
하나은행 (2017.7)	하이 (HAI)	○	△*	일상 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답변 여부를 은행 부서별로 검수
우리은행 (2017.9)	위비봇	△	X	직원 대상으로 단말시스템 규정 등을 상담
KB국민은행 (2019.6)	똑똑이	○	X	전화상담, 상담사와의 채팅상담 대화 내용으로부터 사람이 학습데이터를 지도

- **용 레** 은행권에서 {챗봇을} 도입하다. /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모바일 홈텍스에 탑재했다. 지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1400만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챗봇}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조세일보, 2021년 1월 14일〉
- **관련어** 고객상담, 에이아이, 인공지능.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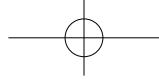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체크카드

check card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카드. 결제 금액을 예금계좌에서 즉시 지불하는 직불카드의 기능과 신용카드회사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기능을 결합한 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현금카드는 고객이 자동입출금기기 ATM/CD에서 입·출금 및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지불 수단이고, 직불카드는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는 현금카드의 기능에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하여 은행이 발급하는 예금계좌 연계 카드이다. 그에 비해 체크카드는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직불카드의 기능에 신용카드회사의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을 추가한 것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도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신용카드는 매월 일정한 결제일에 이용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후불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소지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신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의 신용도가 인정되는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반면 체크카드는 이러한 후불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 결제 대금은 이용자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므로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의 소비 지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체크카드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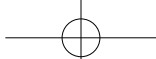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체크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크카드의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본인의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무리한 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에도 결제 알림 서비스가 있지만 후불로 한꺼번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적 사용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여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둘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절세 효과가 크고 혜택이 다양하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 또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일반적으로 연회비가 없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가맹점에 따라 결제금액 할인, 캐시백(가맹점이 결제금액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잘 비교하여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하면 편리하다. 수시로 현금을 충전해야 하는 ‘충전식 교통카드’보다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교통수단 이용 요금이 후불로 인출되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용 레**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 저축은행이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체크카드는} 저축은행 계좌와 연결돼 카드 사용을 통해 저축은행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매일경제, 2021년 5월 23일》
- **관련어** 선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충전카드, 현금카드.
- **출 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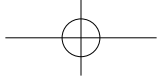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취득세

取得稅, Acquisition tax

매매, 상속 등 유·무상의 방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신고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자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취득자 및 지목 변경 행위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일반 자산의 경우 4%, 무상의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무상취득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별도로 부과된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2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세율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비영업용 차량에는 4~7%, 영업용 차량에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에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 외에 건설기계나 선박 등의 취득세율은 2~3% 수준이다. 별장, 요트, 골프회원권,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경우 12%까지 중과세한다. 단, 취득하는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북한에는 남한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다. 다만,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 '취득세'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개인들이 취득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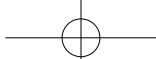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취득'의 종류에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간주취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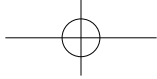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취득의 종류 〕

승계취득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 취득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이축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출원
민법상의 시효 취득		
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축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법인 설립 시 법인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과점주주 사이에서는 연대 납세 의무 있음.
* 간주취득은 물건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고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를 지칭한다.		

부동산에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등록세가 부과된다. 등록세는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가 부과된다.



- **용례** {취득세률} 내다.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율} 과세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진다.《한국경제, 2021년 2월 14일》 /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취득세는} 국가나 지방당국의 중요한 예산수입원천으로 된다.《거울 2.0》
- **관련어** 등록세, 재산세, 직접세, 지방세.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bucheon.go.kr>.
서울특별시 ETAX, <http://etax.seoul.go.kr>.
- **집필자** 이의선



코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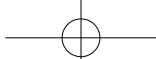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증권시장. 한국거래소 내의 코스닥시장 본부에서 운영하는 주식시장으로, 시장 자체나 코스닥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주로,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코스닥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다.

코스닥시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모델로 1996년 7월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머물렀던 장외시장이 자금 조달과 투자 시장으로서의 독립적인 시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스닥이 뉴욕증권거래소와 완전히 별도의 시장인 것처럼 코스닥도 처음에는 별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장외거래 주식시장이라고 불렸다. 이후 2005년 1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거래소(KRX)가 출범하면서 코스닥시장 본부에서 운영하는 정규 시장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시장과 더불어 증권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았다.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진입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아이티(IT), 바이오(BT) 관련 기술주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게임 등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등이 신주 공모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에게는 코스피 시장 외에 투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벤처 투자회사에는 벤처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유망 기업에 지원할 자금 조달의 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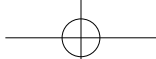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코스닥150 KOSDAQ150은 2015년 7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코스닥시장의 대표 지수이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가운데 시장의 대표성이나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150개 종목의 시가 총액 변동을 나타내며, 기준일은 2010년 1월 4일이고 기준지수는 1000이다. 선물,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150개 종목은 11개 산업군(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별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이 상위인 종목을 선정한다. 현재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구분을 없앴으며, 4월과 10월 말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반기(6월, 12월)마다 구성 종목을 재선정하고 있다.

○ **용 레**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하다. / {코스닥} 지수가 하락 반전했다. 개인의 나홀로 매수세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깊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이데일리, 2021년 2월 3일》 /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327억 원을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5억 원, 151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조선비즈, 2021년 1월 26일》

○ **관련어** 나스닥, 벤처기업, 코스피, 한국거래소.

○ **출 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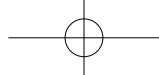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코스피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코스피지수는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코스피 KOSPI의 원래 명칭은 '종합주가지수'였으나, 현재는 한국거래소 KRX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지수를 '코스피' 또는 '코스피지수'라고 하며,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시장이라고 한다.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 이후 주식시장의 종합적인 시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64년에 최초의 주가지수인 '수정주가평균지수'를 발표하였다. 수정주가평균지수는 17개 채용 종목의 주가 평균을 100으로 발표한 지수로, 다우존스식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새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1972년부터 지수의 채용 종목을 늘리고 기준 시점을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그 후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1983년부터 주가지수 산출 방식을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전환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산출 방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코스피지수는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코스피 KOSPI 지수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 개설된 상시적인 유통시장으로, 1956년 3월에 개장하였다. 이후 시장 규모의 확대, 정부 정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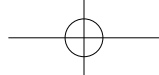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변화 등으로 2005년 1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 증권시장 등 기존의 4개 기관을 통합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를 설립하였다.

북한에는 남한의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다만, 북한의 『광명백과사전』(2010)에서 “증권거래소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법적으로 규제되는데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거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시장이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중심이 된다. 증권거래업자들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증권시세가 오르 내리는 것을 리용하여 막대한 추가적 리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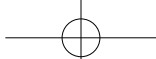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코스피200(KOSPI200)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증권거래소가 1994년 6월에 도입하였으며, 지수 산출의 기준 시점인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정하고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한다. 200개 종목은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삼아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종목 중에서 선정한다. 업종은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및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의 10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선정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재선정한다. 코스피200 지수는 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기초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유통시장인 증권시장은 금융상품의 거래 장소 및 방법에 따라 거래소시



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뉜다. 거래소시장은 거래 형식이 표준화되고 거래 정보가 공개되며 거래 대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피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그리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코넥스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용 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깨다. / 코로나19 이후 {코스피} 수급을 지탱했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다시 증가해 20%선을 눈앞에 뒀다.《아주경제, 2021년 6월 1일》
- **동의어** 한국종합주가지수.
- **관련어**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
- **출 전**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집필자** 성동규



콜센터

call center

고객의 전화를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몇 가지 단계와 분류로 나누어 서비스하는 부서. 주로 상품 판매나 그 사후 관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서비스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콜센터는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고객상담센터’라고도 불린다. 콜센터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고, 고객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성 수단으로, 고객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쉽다는 특징을 지닌다. 온라인 전용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은행권 콜센터는 단순한 상담 서비스나 폰뱅킹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콜센터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고객이 늘어나면서 금융상품 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big data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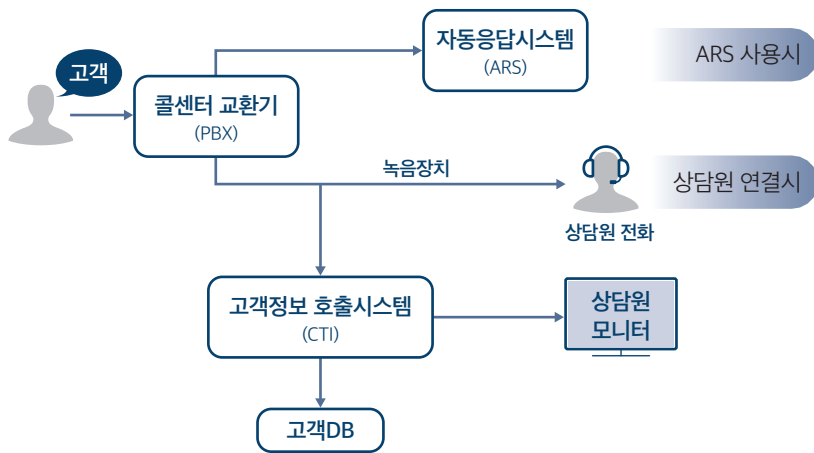
북한에는 남한의 ‘콜센터’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종전에는 콜센터가 주로 ‘고객 의견 수집’, ‘고객 불만 해소’ 등의 고객 응대 기능만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고객-기업’, ‘기업-기업’, ‘부서-부서’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컨택센터’로 불리기도 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정보기술화가 진전되면서 컨택 산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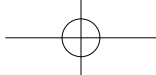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내 은행권에서는 전화 상담에 머물러 있던 콜센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 (무인 종합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지원하는 ‘디지털 상담 플랫폼’으로 바꾸어 ‘디지털 컨택센터(digital contact center)’ 또는 ‘인공지능 컨택센터’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 전통적인 콜센터 운영 체계도 ▶



출처: 한국은행(2002.12), '은행의 콜센터 운용현황 및 시사점'

- **용 레**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다. / {콜센터} 업무도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의 몫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뉴스토마토, 2021년 2월 17일》
- **관련어** 고객상담센터, 고객관계관리, 디지털 컨택센터, 에이아이(AI) 컨택센터, 자동응답시스템.
- **출 전** 전국은행연합회(2021.2.), '은행 콜센터 전화번호'.
한국IBM(2020.4.),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에이아이(AI)로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한국은행(2020.9.), '2020년 상반기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 **집필자** 이기송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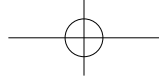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退職年金, retirement pension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전의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마저 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해졌고, 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되므로 실질소득도 증가하게 되었다.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정기적인 납입으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고,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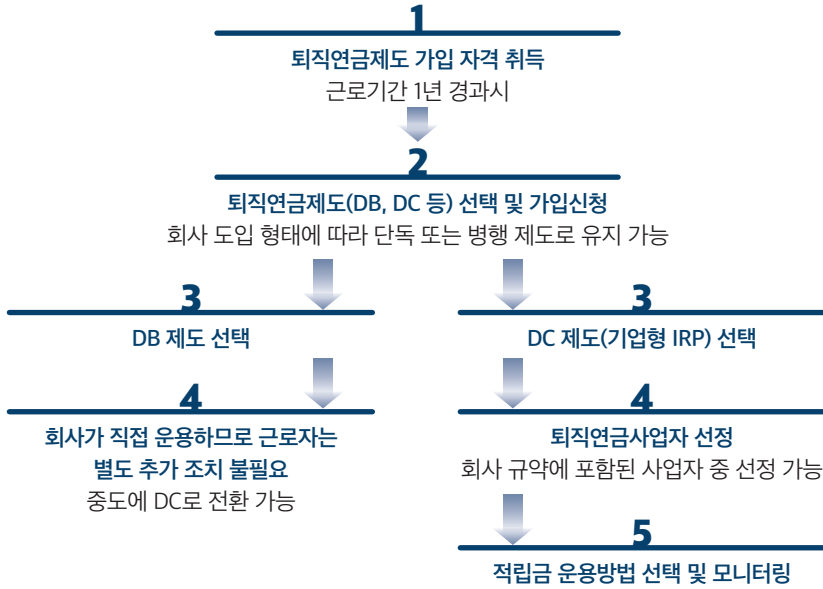
북한에는 남한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가입하여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d Contribution’과 근로자가 가입하여 운영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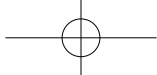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퇴직연금 가입절차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 급여를 사전에 정해 놓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퇴직 연금이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자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유형은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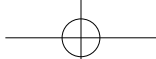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 연금 적립금은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 연금 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의 퇴직 연금이다.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금융회사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소규모 기업이나 연봉제 도입 기업,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이다.

- **용례** 정부는 수년째 1%대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퇴직연금} 제도 손질에 나섰다. {퇴직연금의} 투자 비중을 은행 예금, 적금 중심에서 주식, 펀드 등으로 확대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조선비즈, 2021년 2월 9일》 /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증시 변동성에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이코노믹리뷰, 2021년 2월 12일》
- **관련어**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출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금융감독원(2018),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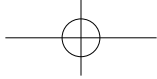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파생금융상품

派生金融商品, financial derivatives

주식, 금리, 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기초자산의 불확실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피하려고 만든 금융상품이다.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대상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기초자산이 농산물, 원자재 등의 실물자산이면 상품파생상품이라고 하고, 주식이나 금리, 통화 등 금융자산이면 금융파생상품이라고 한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파생상품은 계약 당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외 거래의 특징을 가지며,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자산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최근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상품의 투자대상이 기존 금융상품은 물론 기업 신용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을 예상하여 고수익을 얻려는 투기적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 더 알아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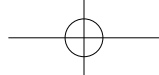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비교 〕

구분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정의	미래의 일정시점에 특정 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계약	미래의 일정시점에 특정 주가지수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
가격	현물지수에 연동	일정 범위에서는 현물지수에 연동하나 범위 밖에서는 연동하지 않음
증거금	매수자, 매도자 모두 필요	매도자만 필요
권리 및 의무	매수자, 매도자 모두 계약이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매수자는 권리만 갖고, 매도자는 계약이행의 의무를 가짐
결제방법	반대매매, 최종결제, 현금결제	반대매매, 권리행사 또는 포기, 현금결제
이익과 손실	매도자, 매수자의 이익과 손실이 무한정임	매수자: 손실은 프리미엄에 한정, 이익은 무한정 매도자: 이익은 프리미엄에 한정, 손실은 무한정

출처: 한국FPSB(2020), 『투자설계』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과 선물(future)은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되 물품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인도·인수하기로 약정한다. 선도계약은 장외에서 거래당사자 간 또는 브로커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선물계약은 거래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는 특정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선물거래의 가장 큰 역할은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하여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선물거래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어 선물과 현물 간 또는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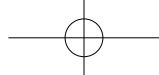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옵션(options)은 거래당사자들이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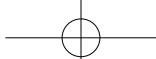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와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사고파는 계약을 말한다. 콜옵션은 매입자가, 풋옵션은 매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옵션 계약은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옵션, 주가지수옵션, 통화옵션, 금리옵션, 선물옵션으로 구분된다.

스왑^{swaps}은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 지급 등 현금흐름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에는 같은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이자율 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 스왑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된다. 장내거래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 요소가 한국거래소^{KRX}의 규정에 따라 정형화·표준화되어 있어서 시장에서는 가격만 결정되고 대금 지급 등은 청산소 등을 통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산 기구를 통한 신용위험의 보증이 있으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없다. 주로 표준화된 선물, 옵션 등이 장내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 한편, 장외거래시장은 거래소와 같이 조직화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 단위, 인도 시기, 대금 결제 방법 등 모든 계약 조건을 양쪽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주로 비정형적인 옵션, 스왑, 선도계약 등이 거래된다. 청산기관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지만, 거래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장내거래시장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



- **용례** 최근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발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호황에 투자자들의 위험 상품 선호 심리도 강해진 것이다.《이데일리, 2020년 12월 29일》 / 디파이 시장에서선 이미 금과 은, 원자재, 달러, 각종 주가지수 등 실물 자산 가치를 가상 화폐(토큰)화해 추종하는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조선일보, 2021년 5월 14일》
- **관련어** 금융투자상품,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파생상품.
- **출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한국FPSB(2020), 『투자설계』.
한국은행(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 **집필자** 성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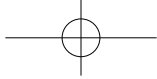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펀드

fund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한 후 수익을 되돌려 주는 금융투자상품. 펀드매니저 등 투자전문가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수익을 되돌려주는 간접 투자상품이다.

펀드 거래는 펀드 판매회사, 수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담당한다.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하려면 먼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펀드의 가입과 환매,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펀드를 판매한다.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맡기면 판매회사는 투자자금을 수탁회사에 보낸다. 수탁회사는 펀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은행이 수탁회사가 된다. 수탁회사를 두는 이유는 자산운용회사가 마음대로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펀드 재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함이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야 할 책임을 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자산운용회사에 소속된 펀드매니저는 자금 운용 방식을 결정하여 수탁회사에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회사는 그 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등을 매매하고 유가증권과 자금을 보관한다. 따라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펀드는 투자 시점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은 돈으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정보 획득 및 시장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자금을 운용하며, 적



절한 분산 투자 및 장기 투자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형 간접 투자상품이므로 본인의 책임 아래 펀드 투자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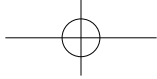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북한에는 남한의 ‘펀드’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펀드 상품은 주식의 투자 비중, 투자 방식, 투자 지역 및 통화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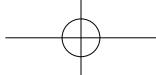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펀드의 유형)

분류기준	펀드의 유형	기준
주식의 투자 비중	주식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혼합형펀드	자산의 60% 미만을 주식에 투자
	채권형펀드	주식을 편입하지 않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의 방식	거치식펀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
	적립식펀드	일정 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누어 납입
	임의식펀드	최초 투자금을 넣고 이후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
투자 철학	성장주펀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가치주펀드	기업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투자 지역 및 통화	국내펀드	원화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펀드	원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역외펀드	외국통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는 투자 대상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성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펀드는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성도 낮으며,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위험성도 높다.

- **용 레** {펀드에} 투자하다. / {펀드에} 가입하다. / 투자자에게 다양한 {펀드} 상품을 제공하다. / 홍콩과 상하이 등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에} 지난 달 6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수익률도 주요 지역 {펀드} 가운데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21년 2월 5일》
- **관련어** 간접투자, 리스크, 주식시장, 분산투자.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성동규(2015),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첫걸음』, 북스토리.
- **집필자** 성동규



펌뱅킹

firm banking

기업과 은행을 전용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서비스. 사업자는 은행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펌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펌뱅킹 계약이 체결되면 은행은 거래중계업자 VAN에게 펌뱅킹에 등록한 사업자를 통보한다. 거래중계업자는 대금 지급 및 신용결제 거래 중개업자로, 전용회선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펌뱅킹 사업자를 전산에 등록한 후 서비스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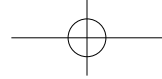
펌뱅킹 등록이 완료되면 기업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래처나 협력 업체의 은행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급여는 물론 출장비, 교통비 등을 입금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금 이체나 거래 내용 등 자금의 흐름 또한 즉시 파악하여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은 펌뱅킹 서비스를 통해 시간 절약과 경비 절감은 물론 현금 분실·도난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북한에는 남한의 ‘펌뱅킹’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 더 알아보기

펌뱅킹 등록자가 중계밴 VAN사에 거래를 요청하면, 중계밴사는 그 거래를 은행에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펌뱅킹 등록자에게 알려준다.

펌뱅킹 서비스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 전국에 판



매·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매월 정기적으로 대금, 회비, 구독료 등을 수납하는 기업(보험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학교, 백화점, 단체 등), 구매 대금, 급여, 배당금, 연금, 각종 경비 등 대량 지급 업무가 많은 기업(증권·연금 기관 등)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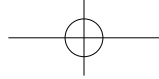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 펴뱅크 서비스 주요 취급 업무 ▶

서비스 구분	업무 내용
출금 이체	이용업체가 수납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물품 대금·용역 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 업체의 지정 모계좌로 입금
입금 이체	이용업체가 각종 지급 자금을 이용업체의 지정 모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배분
거래 정보 전송	이용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명세를 이용업체에 전송
가상계좌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자금을 지정 모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거래명세를 전송하여 주는 업무
집금 이체	이용업체의 계좌 또는 지사별 지역계좌에서 일정 시점의 계좌 잔액을 출금하여 자동으로 모계좌에 집중해 주고 모계좌와 지사계좌 거래 내역을 전송
실명 조회	이용업체가 수납대금 출금이체 신청을 받거나 이용업체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에 지급 대상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경우 등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
이용자 범위	다수의 대리점, 영업소, 지사(동일 법인번호에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업)를 가진 이용업체가 동일한 법인번호로 개설된 계좌의 각종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

● **용 레** {펴뱅크} 신청 서류를 작성하다. / 오픈뱅킹 시행 이전에도 다른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해당 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펴뱅크}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펴뱅크} 고객과 은행 간에 1:1 전용회선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이티데일리, 2021년 1월 4일》

● **관련어** 오픈뱅킹, 핀테크.

● **집필자** 이기송



편의봉사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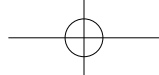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便宜奉仕料金, welfare service charge

북한에서 편의봉사 기업소가 주민에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요금. 편의봉사란 북한 주민의 문화후생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발, 목욕, 미용, 세탁, 옷 가공 및 소비품의 수리·수선 등의 주민 편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편의봉사료금은 생산 원가를 보상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책정하되, 주민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봉사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고, 고급에 속하는 편의봉사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여 편의봉사의 수요를 조절한다.

편의봉사료금에는 남한의 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의 봉사료수입금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기업소가 편의봉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소요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을 봉사료수입금 명목으로 징수한다. 봉사료수입금은 편의봉사료금에 업종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부과 대상 업종에 따라 편의 봉사료 수입금, 사회급양 봉사료 수입금, 수송운임 봉사료 수입금, 체신업무 봉사료 수입금, 극장·영화관 관람료 수입금 등으로 나뉜다.

✦ 더 알아보기

북한은 기관, 기업소, 개인, 협동단체 등 경제를 구성하는 단위가 시장에서 획득한 수입을 이익금이나 거래수입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실질적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1974년부터 공식적으로 조세를 철폐했으나, 국



가재정 충당을 위해 봉사료수입금,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득금, 사회보험료 수입,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 수입 등의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한다.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제품을 판매한 대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간접세의 일종으로, 남한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기업소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얻은 순소득 중 기업의 유보금을 제외한 잔액으로, 남한의 법인세와 유사한 직접세 성격의 재정수입원이다. 협동단체이득금 역시 생산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재정수입원으로, 법인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생산협동조합은 생산 수단의 협동적 소유와 공동 노동에 기초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생산 조직을 일컫는다.

● **용례** {편의봉사료금율} 지불하다. / 북한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 호텔의 {편의봉사료금율} 다음 사진과 같다.《뉴스1, 2017년 11월 21일》 / {편의봉사료금} 수입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수행하는것은 인민들에게 봉사를 계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거울 2.0》

● **동의어** 서비스팁, 봉사료.

● **관련어** 간접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접세.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김정부(2015), 「시장화가 북한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전망」,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정책연구 15-1.

문성민(2004),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일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gounikorea>

● **집필자** 이익선



포트폴리오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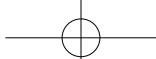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명세표, 또는 다양한 투자 대상에 자금을 분산 투입하여 운용하는 일. 포트폴리오는 원래 서류 가방이나 자료 수집철을 뜻하는데, 금융에서는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목록을 의미하거나, 투자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분산 투자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자산에 골고루 투자함으로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투자 방식이다. 수익률보다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분산 투자 효과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위험은 포트폴리오 보유 자산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투자 위험 발생 가능성이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눠 투자할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분산 투자 방식에는 이 밖에도 투자 시점을 나누어 투자하는 시간 분산, 투자 지역을 나누어 투자하는 지역 분산, 달러나 원화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통화 분산 등이 있다.

다른 북한에는 남한의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쓰이지 않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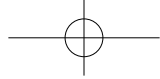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뉜다. 체



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이나 금리, 환율 등 시장 전체의 변동 위험으로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경영진의 변동, 파업, 법적 소송 등 어느 특정 기업만이 가지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금융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하여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으로 자산을 구성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유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을 분산하여 전체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위험 분산 투자 효과의 본질이다.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자산의 가치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안전성,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성, 그리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의 3가지를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높으면 투자 위험이 커지므로, 특정 자산에 집중하지 말고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안정성과 수익성, 투자 목적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 레** 최적의 {포트폴리오} 제시하다. / {포트폴리오} 조정하다. / 40대의 78.2%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보유한 금융투자자였다. 거꾸로 말하면 21.8%는 저축성 보험과 예적금에만 여윌 돈을 넣어둔 비금융 투자자라는 의미다. 전체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뜯어보면 안전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40대 재테크의 특성이 드러난다.《한국경제, 2021년 2월 21일》
- **관련어**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원칙, 분산 투자.
- **출 전**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집필자** 성동규



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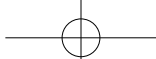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Phishing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금융 사기.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인 것처럼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의 일종이다.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시 Fishing’의 합성어이다.

피싱 금융사기에는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문자 메시지 SMS를 이용하는 스미싱 SMishing,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메신저피싱, 금융회사의 인터넷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파밍 Pharming 등이 있는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정교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피싱의 공식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嚇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싱 사기에는 대부분 대포통장이 사용된다.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한 후 바로 출금해 간다. 피싱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회사에서는 대포통장 발급을 막기 위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 확인 및 소득 상황, 개설 목적 등의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대포통장은 차명계좌라고도 하며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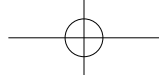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하는데,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통장을 남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양도 및 양수하는 행동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행동뿐 아니라 알선 및 중계, 광고를 비롯하여 돈을 받거나 요구하기로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빌려줄 경우, 또는 불법행위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좌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북한에는 남한의 ‘피싱’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쓰이지 않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남한에서는 최근 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범죄자가 자신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사칭하고 발신번호까지 해당 기관 번호로 조작하는 등, 피해자가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한의 공공 기관에서는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대표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싱의 유형 중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은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자녀 납치·사고 빙자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



스미싱 SMishing은 문자메시지 SMS와 피싱 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의미한다. 주로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 피해자가 무심코 클릭할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안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나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 간다.

파밍 Pharming은 조작 Farming과 피싱 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은행, 대법원, 쇼핑몰, 신용카드사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 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남한에서는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ATM 지연인출제도’는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이다. 그리고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피싱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의 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피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등을 받으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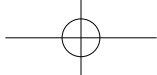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있다.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14)에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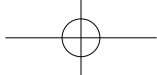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용 레** {피싱} 범죄를 예방하다. /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고수익보장 단순 업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동아일보, 2021년 2월 25일》 / 지인이 보낸 이메일이더라도 발송 여부를 확인 후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 {피싱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데일리NK, 2021년 5월 27일》
- **동의어** 전자금융범죄, 신·변종 전자금융범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 **관련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피싱사이트, 자연인출제도, 지급정지요청제도, 피해금 환급제도.
- **출 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2.10.5.), '전기통신망을 통한 피싱(Phishing) 대책 마련'.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집필자** 이의선



금융사기가 의심될 땐 국번 없이 1332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지금 통화가 어려워서 친구 전화로 문자를 보내는데 여기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만 원만 보내 줘.” 최근 유행하는 문자 피싱 문구이다. 자녀를 사칭해 부모들을 속여 금품을 보내게 하거나 신분증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도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남한에 정착한 지 15년이 되는 북향민 J씨는 어느 날 운전 중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은행 대출상품 안내”라는 문구가 첫눈에 들어왔다. “정부 지원 혜택에 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통합(대환) 자금 최대 1억원, 금리 2.3~6.3% 적용, 5년 만기, 신용등급 관계 無 …” 마침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던 J씨는 금리가 2.3%라는 말에 관심이 생겨 바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는 기존의 전세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에 J씨는 무심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자 그 상담사는 “고객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갈 것입니다. 그걸 알려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인증번호’라는 말을 듣는 순간 J씨는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인증번호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상담사는 신용 등급을 조회하기 위한 간단한 절차라고 하면서 그 절차만 끝나면 바로 대출 전환이 종료된다고 대답했다. J씨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우선 통화를 끊어야겠어요.”라고 하자, 그 상담사는 “고객님,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인증번호만 불러 주시면 마무리됩니다.”라며 압박을 가해 왔다. 그 순간 마치 무엇에 홀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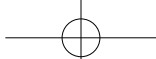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처럼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갖길에 차를 세운 J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변 보호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신변 보호 담당관은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전화번호인 1332를 가르쳐 주었고 J씨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당시의 상황을 들은 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voice’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 phishing’의 합성어인 ‘보이스피싱’은 주로 가족이나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도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짧은 순간의 경험이었지만 J씨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온몸이 오싹하다. 평소 자신의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볼 때에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J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구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일단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하면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 최근 문자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은 가족이나 친지들을 사칭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심리적인 혼란을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전화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땐 <국번 없이 1332>를 꼭 기억해 두자.

집필자 정은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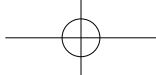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피투피금융

P2P金融, peer to peer finance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개념의 금융 서비스이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피투피금융(P2P금융)’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고 한다. 이 법에서는 피투피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피투피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 그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피투피금융 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게 되는데, 피투피금융에



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투자자가 받고 피투피금융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피투피금융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신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선택하고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투피금융 업체는 은행처럼 신용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자금을 모집한다. 그리고 상환일이 되면 일정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투자자에 돌려준다.

피투피금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신규 창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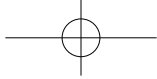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북한에는 남한의 ‘피투피금융’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더 알아보기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은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및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의 4가지로 나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창업·벤처기업은 간편하게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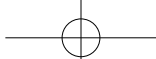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피투피 대출’이라고도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피투피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



을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전에는 금융당국이 피투피 업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투피 업체들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여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피투피 업체의 영업 행위,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후원형과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이 창업 기업이나 문화, 복지 분야 비영리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다.

- **용례**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연합뉴스, 2021년 1월 18일》
- **동의어** P2P대출.
- **관련어**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 **출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http://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 **집필자** 이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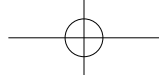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핀테크

fintech

금융과 첨단 정보기술을 융합한 금융 서비스. 금융 finance 과 기술 technology 의 합성어로, 최신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 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예금, 대출, 결제, 송금, 자산 관리 등 은행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가 정보기술 IT 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모든 서비스가 넓은 의미의 핀테크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과 의사 결정,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 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기술도 핀테크 개념에 포함된다.

북한에서도 핀테크 형식의 간편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2018년부터 앱 ‘울림’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초기 울림 1.0 버전에서는 충전식 결제 카드인 ‘전성카드’(조선중앙은행이 2015년에 발행)와 ‘나래카드’(조선무역은행이 2013년에 발행한 최초의 전자결제카드)가 사용되었다. 전성카드는 북한 원화만 충전 가능한 데 비해, 나래카드는 외화 충전도 가능하다. 두 카드 모두 계좌 없이 충전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현실적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와 연동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울림’ 앱을 통해 간편 결제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 간 요금 전송도 가능하며, 요금 충전, 잔고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등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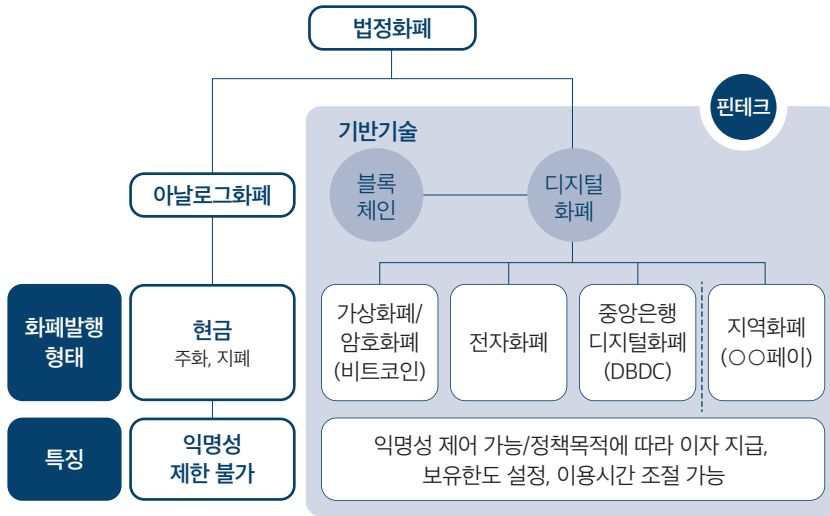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그동안 해외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핀테크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IT과 월가의 뛰어난 금융 인프라의 융합 속에서 핀테크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했다. 영국은 핀테크 육성 정책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중국은 규제 완화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종전의 열악한 금융기반을 핀테크로 대체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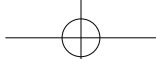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남한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핀테크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인 ‘지급 결제 시장’은 비금융권의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각종페이_{pay}가 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간편 결제는 모바일 기기에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의 지급 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 핀테크 관련어 관계도 〕



- 용 레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전략을 추진하다. / 글로벌 종합 {핀테크} 플랫폼 베라토 큰(VERA)이 19일 국내 유망 거래소 파넥스(PANEX)에 상장한다고 전했다.《경상일보, 2021년 2월 19일》
- 관련어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전자화폐, 지역화폐, 핀테크서비스.
- 출 전 손광수(2019),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올림 1.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데일리NK(2020), '북한판 위챗페이 올림 2.0'.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 '2020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삼정KPMG(2020), '2020 상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
- 집필자 이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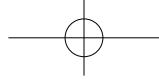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학자금지원제도

學資金支援制度, college financial aid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학재단법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원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 숙식비, 교재 구입비, 어학 연수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이다.

북한에는 남한의 ‘학자금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고, 또한 이를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북한에서는 소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장학금’에 대해 “국가 또는 단체가 학생들에게 학습조건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는 돈.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학습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현금지불형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장학금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민족간부들을 더 많이, 더 잘 키워내기 위하여 국가가 주로 고등교육부문의 학생들에게 지불한다. 장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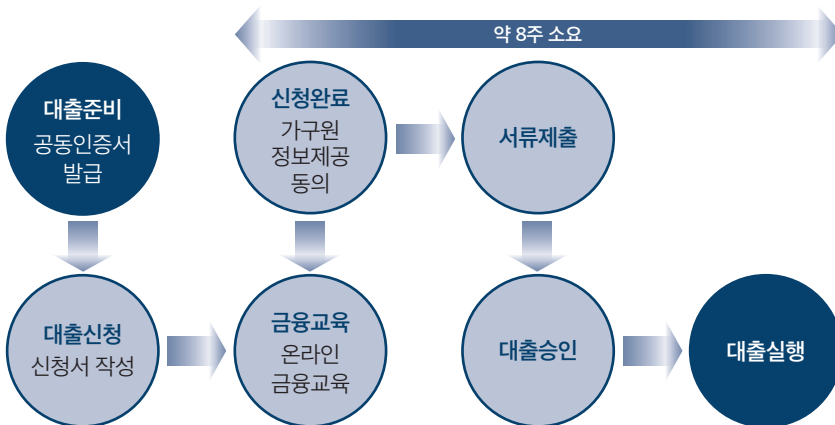
금의 원천은 사회순소득이며 인민적시책비에 포함되며 국가예산에서 지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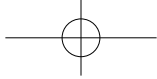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학자금지원제도는 크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등록금과 숙식비 및 교재 구입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낮은 이율(1.7~2.9%)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학자금대출제도에는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처 搬 期間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과거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신용 등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금리의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해 주는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등이 있다.

【 학자금 대출 실행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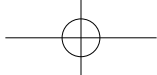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장학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등록금, 학업 장려비 및 생활비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학금 지원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취업연계형 장학금’, ‘다문화·북향학생 멘토링제도’, ‘국가 우수 장학금’ 및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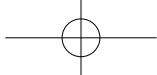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학연계 지원형’,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인재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교내외의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근로 시간에 비례해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은 대학생이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 학습 지도 등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받는 제도이다. ‘취업연계형 장학금’에는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I 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II 유형’,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소기



업에 취업한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한편 '다문화·북향학생 멘토링 제도'는 대학생 멘토들이 다문화·북향학생들의 멘티가 되어 학업을 돕도록 한 장학제도이다. 국가 우수 장학금에는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예술체육계열, 전문대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장학금과 우수 중고등학생에게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등이 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년 발표되는 소득기준을 참고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 **용 레** {학자금지원제도를} 알아보다. / 대학정보 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135개 대학 가운데 131개 대학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의 대학가가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학자금지원제도의} 개선도 호소하고 있습니다.《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2021년 2월》
- **관련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 **출 전** 교육부 정책정보공표(2020.1.), '2020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정책정보공표(2021.1.),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 2. 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집필자** 이의선



행표

行票, bank check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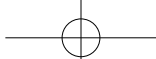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북한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할 것을 은행에 의뢰하는 예금자 증서를 이르는 말. 남한의 수표에 해당한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본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북한의 『재정금융사전』(1995)에서는 ‘행표’를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의 은행 돈자리에 맡긴 돈을 지불받기 위한 결제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은행예금 돈자리를 통한 지불결제에서 간단하고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기관과 기업소는 현금의 보관, 운반 등 낭비 현상과 현금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행표는 기관, 기업소 간의 무현금 유통에 사용되는 ‘무현금 행표’와 기관, 기업소와 주민들 사이의 현금 유통 과정에서 발행되어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 현금 지불 청구서인 ‘현금 행표’로 나뉜다.

➤ 더 알아보기

북한에서 어음 promissory note 은 ‘수형 手形’이라고 한다. 발행인 겸 지급인이 얼마의 돈을 언제 어디서 지급하겠다고 수취인에게 약속하거나,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얼마의 돈을 언제 지급하도록 제삼자인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증서이다. 수취인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수형을 ‘약속수형’(약속어음)이라고 하며, 제삼자에게 돈의 지급을 위탁하는 수형을 ‘환자수형’(환어음)이라고 한다.

수형의 기능은 네 가지로 나뉜다. 판매자나 채무자가 구매자나 채권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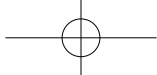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게 거래 대금을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하게 하는 신용 거래 기능, 상품 거래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한 금융수형(남한의 용통어음)으로서의 자금 융통 기능, 원거리 거래나 국제 거래에서의 송금 기능,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불인으로 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환자수형(환어음)으로서의 채권 회수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행표는 소지인이 언제든지 은행에 제시하여 발행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가도록 발행된 지급 기능의 증서이지만, 수형(어음)은 채권자가 정해진 시기에 돈을 받아 가도록 약속한 상거래 신용 기능의 증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형은 17세기 후반부터 통용되어 온 지불 수단으로 행표(수표)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졌다. 수형이 상거래에서 행표의 지급결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행표보다 오랫동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용 레** {행표} 결제는 은행 돈자리와 연결된다. / 일반적으로 {행표는} 신용이 발전하고 은행이 화폐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발생하였다. {행표는} 은행예금 돈자리를 통한 지불결제에서 간단하고 편리한 수단으로 리용된다. {행표의} 이용은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현금을 적게 쓰거나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리저리한 현금사고와 낭비 현상을 막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만큼 현금의 인쇄, 보관, 운반 등과 관련한 사회적 류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재정금융사전, 1995년》
- **관련어** 금융수형, 무현금행표, 약속수형(약속어음), 용통어음, 집환자수형(화환어음), 현금행표, 환자수형(환어음).
- **출 전**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세계경제 및 남남협조연구소 편(1998), 『현대세계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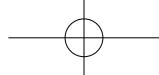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협동화폐제

協同貨幣制 **북**

환전할 때 국정 환율이 아닌 협동 환율을 적용하고 기관과 기업소에 의무적으로 외화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북한의 외환 제도. 북한은 재정성이 결정하고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정환율을 무역환율로 활용하는 ‘고정환자시세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의 외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공식환전소에서 기관이나 개인이 환전할 때에는 시장 환율에 근접한 ‘협동환율’을 허용하고 있다. 국정환율과 협동환율의 이중환율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 정보가 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대부분 돈주가 운영하는 사설 환전소에서 비공식 시장 환율로 환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돈주란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이 시작되었던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대상 관광 사업, 무역 등으로 자산을 축적한 신흥 자본가이다. 당국의 묵인 아래 제조업이나 부동산업, 고용 시장에서의 자본 대여나 사설 환전업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 역할을 해 왔다. 사설 환전업을 하는 돈주를 북한에서는 ‘외화장사꾼’, ‘달러장사꾼’, 또는 ‘현화장사꾼’이라 부른다.

북한의 통화(국제 코드 KPW)는 남한과 같은 ‘원’인데, 북한의 국정환율은 미화 1달러당 100원_{KPW}이지만 시장 환율은 1달러당 7,000~8,000원_{KPW}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돈보다는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중국 위안화를 선호한다. 교통비나 쌀값 같은 기초 생활비 지출 시에는 북한의 원화를 사용하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저축은 외화로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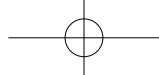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북한의 외화 관리 제도는 국가가 모든 외화를 일괄 관리하는 외환집중제이다. 1993년에 제정된 북한의 ‘외화관리법’은 북한 내 외화 현금의 유통을 금지하며, 북한 원(KPW)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외화 사용이 허용되어 왔다. ‘외화 현금 보유’와 ‘매각 및 저금’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협동화폐제 및 몰수형 화폐개혁으로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 기업 경영에 독립채산제를 인정하는 등 시험적 개혁 조치와 아울러, 2013년에는 독립채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협동화폐제를 실시하였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자유로운 환전을 허용하고 나래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화 자금을 공공 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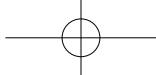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나래카드는 2010년 조선무역은행이 출시한 전자 결제 카드이다. 북한의 외화봉사 단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입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데, 호텔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북한의 공정 환율에 따라 달러화나 유로화, 위안화 등으로 환전하거나 충전할 수 있다.

● **용 레** {협동화폐제를} 실시하다. / 북한이 변동환율제의 일종인 {‘협동화폐제’}를 실시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이나 해외 자본 유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의 양성화 여부도 주목된다.《통일뉴스, 2013년 5월 27일》 / 북한은 민간에서 유통·보관되고 있는 약 40억 달러로 추정되는 달러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3월 1일부로 {‘협동화폐제’}를 실시해 각 개인과 기관이 외화계좌를 개설,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카드 이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뉴스, 2016년 3월 17일》

- **동의어** 협동구조제.
- **관련어** 공식환율, 국정환율, 나래카드, 시장환율, 장마당환율.
- **출 전** KOTRA 북한정보(2015.12.), '해외기업 북한 진출의 걸림돌, 이중환율제'.
문성민·김병기(2020),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2020-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2018),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북한경제리뷰 2호.
- **집필자** 천규승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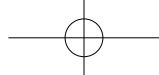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換率, exchange rate, 匯率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 다른 나라 돈에 대한 자기 나라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며, 그 교환 비율은 항상 변동된다. 교환 비율은 외국환 시장에서 결정된다. 남한에서는 남한의 원화가, 북한에서는 북한의 원화가 기준이 된다. 남한의 원화와 미국 달러화와의 환율은 ‘원 달러 환율’이라고 부르는데, 1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원화 크기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이면, ‘1달러당 남한 돈 1,200원’의 비율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에서는 ‘환률’을 ‘환자시세 換資時勢’라고도 한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환자시세’를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 환률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환자시세는 나라들 사이의 대외적교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자운동이 화폐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며 이때 서로 다른 민족화폐사이의 교환이 불가피한것과 관련하여 생기게 된다. 환자시세는 대외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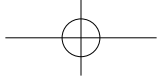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바뀌면 ‘원 달러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거나,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 또는 ‘원화가 약세이다.’라고 한다. 1달러당 원화의 가치가 100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달러 중심으로



표현하면 ‘원화 대비 달러화가 (평가)절상되었다.’ 또는 ‘원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이다.’라고 부른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공식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환율(이른바, ‘장마당 환율’)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전역의 800여 개에 이르는 장마당에서 통화 가치 변동이 심한 북한 원화보다는 달러화나 위안화를 주로 사용해 왔다.

- **용례** 원화 {환율} 하락했다. / 원 달러 {환율} 소폭 상승했다. / {환율} 2.1원 내린 1,126.3원에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폭을 되돌린 뒤 1,128원 안팎에서 움직였다.《한국경제, 2021년 3월 23일》
- **관련어** 매매기준율, 평가절상, 평가절하, 현찰매도율, 현찰매입율.
- **출전**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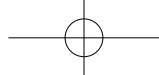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환율제도

換率制度, exchange rate system

두 나라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제도. 이때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은 보통 외국 돈인 외환^{foreign exchange}의 한 단위를 우리 돈인 원화의 가치로 나타낸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그리고 절충형 제도인 ‘중간단계환율제도’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일정 범위 내로 환율을 고정하여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면 경제 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 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환율을 큰 폭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물가 불안 등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국제 경제의 급변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충격이 환율 변동에 의해 흡수되어 거시 경제 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 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간단계환율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지만, 일정 폭 이상의 변동은 차단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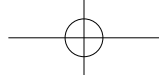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환률’을 ‘환자시세 換資時勢’라고도 한다.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환자시세’를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 환률이라고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환자시세는 나라들 사이의 대외적교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자운동이 화폐를 매개로 하여 진행되며 이때 서로 다른 민족화폐사이의 교환이 불가피한것과 관련하여 생기게 된다. 환자시세는 대외교류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국제통화기금 IMF은 환율제도를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고정환율제도는 공동 통화를 사용하는 통화동맹 monetary union 제, 자국 화폐를 없애고 미국 달러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달러화 통용 Dollarization 제, 자국 내 화폐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currency board 제, 자국 통화를 기축통화나 복수의 외국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는 전통적 페그 conventional peg 제 등으로 구분된다. 중간단계환율제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정 환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크롤링 페그 crawling peg 제, 환율의 변동폭을 2% 내외로 유지하는 유사 크롤링 crawl-like arrangement 제, 기준환율에서 1~2%의 변동만 허용하는 수평밴드 페그 pegged exchange rate within horizontal bands 제로 구분된다. 변동환율제도는 원칙적으로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을 허용하되 정책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과도한 환율변동을 완화하는 변동 floating 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채택 국가 중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특별한 상황에서 6개월간 3회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정보가 공개되는 자유변동 free floating 환율제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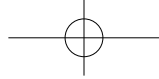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이렇듯 다양한 환율제도 중 어떤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통화의 안정성,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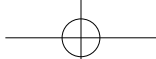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본의 자유로운 국제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다. 이를 환율제도의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식이다.

환율은 국제무역 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면 미국의 1달러가 원화 1,100원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1달러를 구하기 위해 원화를 더 많이 지불한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1달러를 구하기 위해 원화를 더 적게 지불한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른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환율은 각 국가의 교역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화할 경우 국제 거래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화폐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환율 표현의 기준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vehicle currency’라고 한다. 기축통화는 특정 화폐의 국제적 영향력이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으나, 전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으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여러 국가 간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국의 화폐와 기축통화 간의 환율을 기준환율로 정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인 원달러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고 있다.



- 용 레 {환율제도를} 개혁하다. / 홍콩 달러 페그제를 통해 국제 금융 허브의 지위를 누려온 홍콩이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과감한 {환율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뉴스핌, 2020년 7월 9일》
- 동의어 환자교환거래(북한어), 환자시세(북한어).
- 관련어 고정환율제도, 기준환율, 기축통화, 변동환율제, 외환, 자유변동환율제, 중간단계 환율제도.
- 출 전 IMF(2017),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데일리NK 북한시장동향(2021.3.), <http://www.dailynk.com/北장마당-동향/>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2020.11.), <http://www.asiapress.org/korean/>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집필자 천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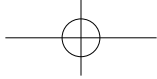


환자거래

換資去來, arbitrage of exchange **특**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 간에 직접적인 현금 거래 없이 거래자들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은행 업무 형태. ‘환자거래’는 ‘자금을 바꾸어 놓는 거래’라는 뜻이다. 북한 은행의 대표적인 업무로, ‘대부’, ‘예금거래’와 함께 은행의 ‘3대업무’에 속한다. 《거울 2.0》(2017)에서는 ‘환자거래’에 대해 “은행 환자 거래는 그 대상이 국내범위인가, 외국과의 거래인가 하는데 따라 국내환자와 외국환자로 가른다. 보통 은행 환자거래라고 할 때에는 외국환자거래는 넘두에 두지 않고 주로 국내환자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은행환자거래에서 같은 은행의 본점, 지점들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본지점환자거래라고 하고 서로 다른 은행의 지점들사이에 이루어지는것은 타점환자거래라고 한다. 은행환자거래를 실무에서 은행간거래, 은행간결제, 지점간거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용어 중 가장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내용적으로 발전한 분야 중 하나가 환자, 즉 외환 부문이다. 그 첫째 이유는 북한의 경제가 의외로 대외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무역거래는 항상 거래 상대방과의 외환 결제를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국제적인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의 실물 상거래에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가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서 규모가 큰 거래에서는 미국 달러화 등 외화가 쓰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북한의 상인들은 외환시세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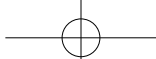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더 알아보기

북한의 『현대국제금융사전』(2006)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거래 관련 용어’들을 분류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거래의 당사자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환자은행’은 외국환은행과 같은 의미로 ‘무역과 관련된 결제 등 금융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조선무역은행과 다수의 일반 무역은행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중개업자’ exchange broker는 우리나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와 같은 외국환중개인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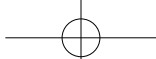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둘째, 환자거래에 따른 위험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환자시세’는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비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의 ‘환율’과 같은 개념이다. ‘환자차손익’은 ‘외화 또는 외화표시의 채권, 채무의 거래 과정에서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생기는 손해와 이익’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남한의 ‘외환차손익’에 해당하는 ‘환자결제손익’과 남한의 ‘외화환산손익’에 해당하는 ‘환자환산손익’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환자위험’은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정의되어 있다.

셋째, 환자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 또는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도 있다. ‘환자손실회피거래’는 남한의 ‘환 헤지 currency hedging’ 같은 뜻인데, “환자시세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거나 적게 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거래, 환자헷지라고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환자선물거래’(‘기한부환자거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남한의 ‘선물환거래 currency forward’에 해당하는 용어로, “일정한 조건으로 장래에 외화매매를 진행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진행되는 거래”라고 정의되어 있다.



『경제연구』 2017년 제3호 등 최근에 나온 북한의 논문들에는 ‘환자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외에도 파생상품 derivatives 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논문들에서는 남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선물 futures, 옵션 options, 스왑 swap 이라는 용어를 각기 ‘선물거래’, ‘선택권거래’, ‘교환거래’라는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추세와 기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용 레** 대외무역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환자거래는} 필수적이다. / 은행{환자거래를} 실무에서 은행간거래, 은행간결제, 지점간거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거울 2.0》
- **동의어** 외국환자거래, 외환거래(남한어).
- **관련어** 환자선물거래, 환자손실회피거래, 환자업무, 환자위험, 환자은행, 환자중개업자, 환자차손익, 환자헛지, 환자환산손익.
- **출 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7), 『경제연구』 제3호.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리행호 외(2006), 『현대국제금융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집필자** 박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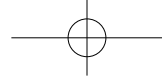
환전

換錢, currency exchange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 또는 화폐와 지금地金을 교환하는 것. 일반적으로 원화를 달러화·위안화·엔화·유로화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남한의 은행들은 ‘우수고객 선정 기준’을 두어 개인의 외환거래 실적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환전하면 우대 환율 적용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 실적까지 높일 수 있다. 남한에서는 환전 금액에 따라 요구하는 증표와 서류에 차이가 있다. 즉, 국민인 거주자(법인, 단체 포함)가 환전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 때 환전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미화 1만 달러 이내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때 환전 내역은 여권에 표기해야 한다. 은행에서의 환전은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한데, 최근 주요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거래 이용자들을 위해 심야 시간대에 시간외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북한 원화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화도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외부와 단절되면서, 북한 당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시장에서의 달러화 사용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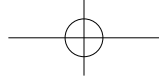
한하고 있다. 그 결과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북한 원화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는데, 원화가 부족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하에서 ‘돈주’라고 불리는 환전상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환전상은 보통 10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한 곳에는 한 명의 환전상이 포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환전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환전되기 보다는 환전상을 통한 사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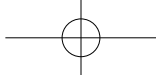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남한에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남한 국민은 환전금액에 제한이 없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도 미화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외환 반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한 후에야 반출이 가능하다.

◀ 해외여행자의 환전 ▶

대상	금액	내용
국민인 거주자	금액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
외국인 거주자	미화 1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 제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수요증빙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사실을 표기 필요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급 금액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필요 시)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필증(1만불 초과 시)
비거주자	미화 1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 제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입국일 이후 체류기간 동안에 외화를 원화로 바꾼 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 가능, 환전 사실이 없을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범위 내에서 환전 가능, 여권에 매각사실을 표기 체재기간 동안 외환매각실적이 있을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시, 매각금액 범위 내에서 환전 가능 필요서류: 여권, 외국환매입증명서(필요 시) 등



- 용 레 원화를 달러로 {환전율} 하다. / 그는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외화를 원화로 바꿔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고객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 요청하는 경우 우도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온라인 {환전} 영업자 계좌로 외화를 수납하는 것은 '규제 없음'으로 봤다.《서울경제, 2021년 2월 9일》
- 관련어 공동환전, 맞춤형환전, 외환, 전신환매도율, 환율.
- 집필자 이기송



환치

換置, money transfer, 換置 

북한에서 현금이 아닌 증서를 통해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을 이르는 말. ‘환치 換置’는 ‘환換’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자금 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약속된 증서를 보내 돈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은행 계좌 사이에서 장부상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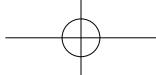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북한의 『현대국제금융사전』(2006)은 환치 제도를 “거래과정에서 발생된 자금의 대차관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환치증서에 기초하여 거래은행에 개설된 채무자의 돈자리에서 채권자의 돈자리에 장부상으로 넘겨주는 결제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환치 제도는 현금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어음(북한의 ‘수형’) 제시에 의한 ‘환’ 결제 방식과 유사하지만, 어음이 아닌 ‘환치증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환치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루블화 계좌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사회주의 권의 몰락과 함께 사라져서 지금은 북한 내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알아보기

‘환換’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을 보내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換’은 그 사용 범위에 따라 내국환과 외국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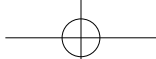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으로 나뉘는데, 내국환은 국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은 서로 다른 통화 간의 대체 결제에 의한 환시세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에는 수표, 약속어음, 환어음 등을 활용하여 수출입 거래를 결제하는 방식이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2010년대부터는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수출입의 결제에 신용장 방식보다 직접 송금 방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자동환치체계’는 우리의 전자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전자계산기(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개설된 거래 당사자의 계좌 간에 자금이동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뜻한다. 현재 북한은 환치증서를 이용한 수동적 방식의 환치 거래를 금융정보화를 통한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거울 2.0》(2017)에서는 ‘환치를 실현하는 결제방식’으로 다음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환치를 실현하는 결제방식〉

- 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은행기관에서 출금하여 가지고 온 즉시지불서를 받고 물자를 공급한 다음 그 문건을 은행기관에 내면 그날로 물자대금을 공급자의 돈자리에 넣어주는 즉시지불서에 의한 결제
- ② 돈을 물 기관, 기업소가 송금위탁서를 만들어 은행기관에 내면 그의 돈자리에 돈을 떼내어 컴퓨터망을 통하여 돈받을 기업소돈자리에 넣어주는 송금에 의한 결제
- ③ 기관, 기업소가 은행기관으로부터 쓸 자금을 출금받기 위하여 무현금행표를 내면 그 즉시 기관, 기업소의 돈자리에서 떼여 출금하여주는 무현금행표에 의한 결제



- ④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자를 공급(봉사)하고 지불청구서를 은행기관에 내어 수요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면 수요자가 지불을 확인(무확인 포함)한 조건에서 수요자의 돈자리에서 떼어 공급자의 돈자리에 넘겨주는 지불청구서에 의한 결제
- ⑤ 돈을 물 기관, 기업소가 지불위탁서를 만들어 은행기관에 내면 그의 돈자리에서 돈을 떼어 돈받을 기관, 기업소의 돈자리에 넣어주는 지불위탁서에 의한 결제 등이 있다. 이밖에 통제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예산납부, 대부금반환, 연체료지불과 같은 기관, 기업소들의 납부의무수행을 위한 지불은 정해진데 따라 은행이 직접 내부전표로 처리하는 환치방법도 있다.

● **용 레** 우리나라(북한)에서 소비상품의 기관 판매는 일정한 한도 안의 적은 금액만 현금결제를 하고 그것을 넘는 것은 {환치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환치} 판매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현금을 적게 보유하도록 하여 통화량을 제한하고 화폐의 회전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치} 판매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소비상품을 사들이는 것을 극력 제한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현대국제금융사전, 2006년》

● **관련어** 순환자, 역환자, 자동환치체계, 환자거래.

● **출 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20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
리행호 외(2006), 『현대국제금융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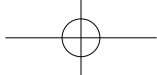
● **집필자** 박기찬



남북 금융용어 대응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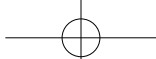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남한	북한
가처분소득	
개인연금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	돈자리
고용보험	
공과금납부	
공모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	근로소득
금리	리자, 리자률
금융감독제도	
금융거래한도	
금융정보시스템	금융봉사정보체계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상품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금융수수료	
금융시장	금융시장
금융실명제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회사	
금융회사	
기업어음(CP)	
다단계 금융 사기	
다층연금체계	
단기신용대출	

남한	북한
대부업체	돈주
대출	대출
대출금리	
임금	도급생활비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디지털화폐	
	로동보수자금
머니마켓펀드(MMF)	
모바일뱅킹	지능형 손전화기 은행 업무
	무현금류통
미소금융	
법인세	법인세
변액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험	보험
보험계약	보험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불법추심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장지수펀드(ETF)	
상조회사	
서민금융지원제도	
세금우대제도	
소득세	소득세
신용	신용
신용관리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회복제도	
실손의료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남한	북한
연말정산	
예금자보호제도	
오픈뱅킹	
외화송금	외화송금
우량주	
우체국예금보험	
원리금상환	
원천징수	
유사수신행위	
은행	은행, 저금소
은행거래앱	
	이관집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 업무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은행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자동화기기	자동현금출납기
재무설계	
재산세	재산세
재무상태표	재정상태표
	재정총화
	저금대리소
저축은행	저축은행
전자상거래	전자상업
전자인증서	전자증명서
전자화폐	전자화폐
	정액생활비
제2금융권	
조세	조세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남한	북한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택연금	
주택청약통장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
지역화폐	
창구거래	
채권	채권
챗봇	
체크카드	
취득세	취득세
코스닥(KOSDAQ)	
코스피(KOSPI)	
콜센터	
퇴직연금	
파생금융상품	
펀드	
펌뱅킹	
	편의봉사료금
포트폴리오	
피싱	
피투피금융 (P2P금융)	
핀테크	
학자금지원제도	
수표	행표
	협동화폐제
환율	환률, 환자시세
환율제도	
	환자거래
환전	
	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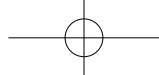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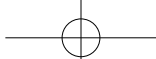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강창희 외(2009),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www.pipc.go.kr>.
-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고동원(2013),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5(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고일동(2004),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6-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7), 『경제연구』 제3호.
- 관계기관합동(2020),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 교육부 정책정보공표(2020.1.), ‘2020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안)’.
- 교육부 정책정보공표(2021.1.),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거울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국세청(2021),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회예산정책처(2018), 『한국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 대한민국 조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main.jsp>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용어사전, http://fine.fss.or.kr/main/fin_tip/dic/financedic.jsp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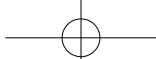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http://www.fss.or.kr/s1332/>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2008), 『즐거운 금융교실』,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팀.
- 금융감독원(2018),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 홍보책자」.
- 금융감독원(2018),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 금융감독원(2019), 『딸딸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제2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금융감독원(2020),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제4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금융감독원(2021),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제3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금융결제원(2020.7.),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2호, 2020. 5. 19.).
- 금융연구원(2020.7.),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11.23.).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2015),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 금융위원회(2018),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 금융위원회(20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9.11.25] 통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9.11.26.
- 금융위원회(2020.7.), '오픈뱅킹 세미나 발표자료'.
- 금융정보분석원(2019),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개요」.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http://www.kofiabond.or.kr>.
- 기획재정부(2017), 『시사경제용어사전』.
- 기획재정부(2021),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 김대원(2020),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성과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8-2호.
- 김민정·문성민(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BOK경제연구 2021-6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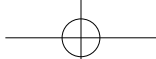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김상기(2004),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해설, KDI 북한경제리뷰 6(8). 한국개발연구원.
- 김상훈(2006), 「북한 주민의 실질 임금격차 분석: 산업별·시도별 평균임금 및 곡물구매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9), 「북한의 유통 실태와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 김영희(2015),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월간 북한 527호.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20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2호.
- 김정부(2015), 「시장화가 북한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전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연구 15-1.
- 김지현(2012),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학연구 18-4호.
- 나이스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
- 나이스지키미, <http://www.credit.co.kr>.
- 남성욱(2004),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 한올아카데미.
- 네이버 지식백과, '상조회사', <http://terms.naver.com>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데일리NK 북한시장동향(2021.3.), <http://www.dailynk.com/北장마당-동향/>
- 데일리NK(2020.11.), '북한판 위챗페이 올림 2.0'.
- 리명진(2018), 「금융봉사정보체계구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64(3).
- 리형호 외(2006), 『현대국제금융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2009), '아이엠에프(IMF) 이후 은행 인수·합병의 역사', 메리츠증권.
- 문성민(2004),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문성민·김병기(2020),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2020-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문정숙 외(2010), 『소비자경제학』, 교문사.
- 미래와 경영연구소(2006),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 경영.
- 박해식·이병운(2019), 「북한 금융의 주요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KIF금융분석리포트 2019-12호.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2.10.5.), '전기통신망을 통한 피싱(Phishing) 대책 마련'.
- 방현철(2020), 『코로나 화폐전쟁』, 이콘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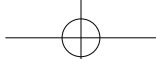
- 백과사전출판사 편(2010), 『광명백과사전』 5권, 백과사전출판사.
- 법무부 공식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보험법(북한, 1995).
- 보험업법(법률 제17636호, 2020. 12. 8.).
-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bucheon.go.kr>.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2020), 『북한의 금융정보화』.
- 북한지식사전 WiKiDOK, <http://ko.nkinfo.wikidok.net>.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7),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편(1985),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세계경제 및 남북협조연구소 편(1998), 『현대세계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편(1995),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삼정KPMG(2020.9.), '2020 상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
- 상업은행법(북한, 2006).
-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 생명보험협회(2020), 『고등교재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nfa.or.kr>.
- 서울특별시 ETAX, <http://etax.seoul.go.kr>.
- 성동규(2015),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첫걸음』, 북스토리.
-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 손광수(2019.11.),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울림 1.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용어, <http://www.knia.or.kr/howtouse/dictionary>
- 손희두(2005),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송경호·이환웅(2020),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송홍선(2019), 「다층연금시대의 국민연금제도개혁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19-23호, 자본시장연구원.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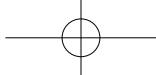
- 심금주(2017), 「현시기 지방별 현금류통책입제집행에 대한 평가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174호.
- 아시아프레스 북한보도(2020.11.), <http://www.asiapress.org/korean/>
- 아이지에이웍스(2020.12.), '모바일 인텍스'.
-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 여효성·김성주(2019),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 2019-1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kdic>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 오상봉 외(2018),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 오윤해(2020),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KDI FOCUS 101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2018),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북한경제리뷰 2호.
- 우용표(2017),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 6. 9.).
- 위키백과 '상조업', <http://ko.wikipedia.org/wiki/>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5호, 2010. 2. 4.).
- 유성재(2009), 「남북 통일에 대비한 노동법제 정비방안」, 법학논문집 33(2).
- 윤성만·김미옥·정형록·전용욱(2020), 「북한의 경영회계결산」, 회계저널 29-3.
- 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 이수룡·이정희·조봉현(2018), 「북한의 금융실태와 개혁방향 및 남북협력 과제」, 北韓學報 43(1).
- 이유진(2019), 「최근 북한 금융서비스 현황과 의의」, 주간KDB리포트 2019.2.
- 임을출(2016),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 한울아카데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5호, 2020. 5. 19.).
- 장세훈(2002),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입법정보 40호.
- 장승욱(2010),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 하늘연못.
- 전국은행연합회(2021.2.), '은행 콜센터 전화번호'.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2019), 『알고 시작하는 주식투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1.), 'ICT 융합 심층리포트: 모바일 결제 기술 특성 및 현황'.
- 조동호(2000),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1999), 『주체정치경제학 독본』,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중앙은행법(북한, 2004).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883호, 2021. 1. 5.).
- (주)중앙경제(2014),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www.startbiz.go.kr>.
- 중앙은행법(북한, 2004).
- 천규승(2016), 『부자 아빠 없다면 금융 공부부터 해라』, 코리아닷컴.
- 최상문(1995), 「북한의 회계제도」, 민족문제논총 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코나아이(2020.11.), 「지역화폐 플랫폼 경쟁사 비교」.
- 코리아 투데이(2021.3.),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과 연풍상업정보기술사의 사업 확장」.
- 코리아크레딧뷰, <http://www.koreacb.com>
- 통계청 보도자료(2020.12.7.), 「2017년 국민이전계정」.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통일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gounikorea>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 통일부(2000), 「일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제시 30돌 기념보고회 개최, 주간북한동향 제490호.
- 한국FPSB(2020), 『투자설계』.
- 한국IBM(2020.4.),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에이아이(AI)로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 한국개발연구원(2012), 『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한국거래소(2016), 『똑똑한 자산관리 ETF ETN』, 한국거래소(증권상품시장부).
- 한국금융연수원(2021), 「북한의 경제, 금융 인사이트」 VOL II.
- 한국기업평가(주) 홈페이지, <http://www.korearatings.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국수출입은행·북한 동북아연구센터(2016), 『북한의 금융』, 오름.
-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http://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9.), 「2020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한국은행(2013), 「북한의 금융제도」.



- 한국은행(2019.5.),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
- 한국은행(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 한국은행(2020.9.), '2020년 상반기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0. 2. 4.).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해외 지방세 제도』.
- 한국지방세연구원(2020), 『2020 지방세 길라잡이』.
- 한국통신 경영연구소(2000), 『공공요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80호, 2018. 12. 31.).
- 함성준(2019),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금융정보화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65(2).
- 황수민·양문수(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6-1호.
- adjust + aptopia ebook(2020.9.), '2020년 모바일 금융보고서'.
- HelloT(2015.3.), '스마트폰 등장 이전 금융 서비스 아이씨티(ICT) 활용'.
- HelloT(2015.3.), '스마트폰 등장 이후의 글로벌 결제시스템 경쟁'.
- IMF(2017),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 KOTRA 북한정보(2015.12.), '해외기업 북한 진출의 걸림돌, 이중환율제'.
- M. Bech and R. Garratt,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2017년 국제결제은행 분기보고서.
- Medici Research.
- O'Rand, A., & Krecker, M. (1990). Concepts of the Life Cycle: Their History, Meanings, and Us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 Paul Krugman·Robin Wells(김재영·박대근·전병현 옮김)(2017), 『크루그먼의 경제학(제4판)』, 시그마프레스.



남북 금융용어사전

2021년 9월 1일 인쇄

2021년 9월 5일 발행

지은이 (사)북한개발연구소

펴낸이 조승식

펴낸곳 도서출판 북스힐

등록 1998년 7월 28일 제22-457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3길 17

전화 02-994-0071

팩스 02-994-0073

홈페이지 www.bookshill.com

이메일 bookshill@bookshill.com

ISBN 979-11-5971-359-0

비매품

* 이 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하에 출판되었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을 북한개발연구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